Jthink 2013-PR-08

귀농 · 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 연구진 | 박신규 · 조경욱 · 조아영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think 전북발전연구원

Jthink 2013-PR-08

귀농 · 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Jthink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 [박신규, 조경욱, 조아영 공저].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4
p. ; cm. -- (전발연 ; 2013-PR-08)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84-0 93330 :

귀농[歸農]
전라 북도[全羅北道]

522.6-KDC5
338.1-DDC21 CIP2014002250

연 구 진

연 구 책 임	박 신 규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조 경 욱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조 아 영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 문 위 원	임 경 진	•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
	조 가 옥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 민 수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진 명 숙	•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 응 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연구관리 코드 : 13JU2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제언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필요성

○ 도시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2012년 상반기 현재 누적 귀농·귀촌 가구는 38,788가구이며,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10,503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귀농·귀촌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0-50대의 장년층(56.4%)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귀농·귀촌의 동기가 IMF 직후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농촌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 귀농·귀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정착의 장애 요인도 다양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귀농·귀촌이 새로운 사회변동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는 가운데 귀농·귀촌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귀농·귀촌 여성도 증가추세임(2012년 귀농·귀촌가구주의 성별비율에서 여성비율이 30%에 해당됨). 이는 곧 여성인적자원의 농촌 유입으로 이어져 농촌사회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에 있어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귀농·귀촌 가구 중 여성의 적응력 저하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농림수산식품부, 2011).

○ 향후 증대하는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와 함께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는 농촌사

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이면서 이들의 정착이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에도 주요 요인이 되기에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연구목적

○ 전북지역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과정 경험과 정책요구도 분석

○ 귀농·귀촌 지원정책에서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정착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시책 제안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귀농귀촌 관련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귀농귀촌 인구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시군의 귀농귀촌 관련 행정 자료 수집 및 검토

○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파악된 귀농귀촌여성을 1차적으로 연계하였고 연구자가 명단을 받아 귀농귀촌시기별 차이와 지역에서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20사례 여성들을 선택하였음.
- 조사방법 : 면담은 개별면담으로 개인적 이야기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면담자의 집이나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음.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음.

• 귀농귀촌여성의 심층면접 내용

항 목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 귀농 · 귀촌 이전의 거주지, 학력, 전 직업, 가족관계, 종교 등 - 현재 거주지와의 관계(본인, 남편 ,무연고)
귀농배경 및 준비	- 귀농 · 귀촌을 하게 된 이유? - 귀농 · 귀촌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였는가? - 귀농 · 귀촌을 하면서 기대했던 점들은 무엇인가?
귀농이후의 생활	- 경제활동 : 현재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 영농활동 이외의 소득/영농활동의 참여 정도 -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 영역 :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 - 문화생활 및 자녀양육 (교육) - 취미활동, 참여여부 - 귀농 · 귀촌 이후의 교육변화,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활동
지역민과의 관계	- 토착민과의 관계 - 기존 지역사회의 행사참여 - 토착민과의 갈등상황 여부 - 본인과 이웃의 범위
정책지원	- 정부로부터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 이후 정책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진행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 1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외에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2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내용

Ⅱ. 연구결과

1. 전북 귀농 · 귀촌현황

❒ 전국 귀농 · 귀촌 현황

○ 최근 약 10년간의 전국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보면, 2001년 귀농·귀촌 가구는 880가구에서 2004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서고, 2009년 이후 4000가구를 웃돌아 2011년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전국 연도별·지역별로 귀농·귀촌 가구수 현황을 보면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남(15.1%), 전북(15.0%), 전남(14.4%)의 순을 보임. 2012년 상반기의 현황만을 놓고 보면, 귀농·귀촌 가구수는 8,706가구, 인구수는 17,745명(가구당 2.2명)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는 충북(23.9%), 전북(15.9%), 전남(15.6%), 경북(15.1%)의 순이며 상위 4개 도가 70.5%를 차지하였음.

○ 귀농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8,706가구 중에서 귀농가구가 4,678가구로 53.7%이고 귀촌가구는 4,028가구로 46.3%의 비율을 보임.

○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5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귀농·귀촌자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60대(25.2%), 40대(24.4%), 30대(13.6%)로 나타남. 직업은 자영업 종사가 24.6%로 가장 비중이 크고, 사무직 1,609가구(18.5%), 생산직 936가구(10.8%), 주부 712가구(8.2%)의 순이었음. 그리고 이들이 귀농 후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귀촌 등 기타 분야의 비율(46.4%)을 제외하고 벼나 배추 등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분야가 35.5%로 가장 많았고 과수분야(9.0%), 원예분야(6.3%), 축산분야(2.7%)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 귀농 · 귀촌 현황

○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귀농·귀촌 가구가 많았고, 200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누적 귀농·귀촌 가구는 경북,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음.

○ 전북은 2001년 127가구에서 증감의 변화를 보이다가 2011년 1,000가구를 넘었고, 2012년 도내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총 2,553가구로 이중 귀농은 61.1%, 귀촌은 39.9%를 차지하였음.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창군이 787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김제(433가구), 남원(247가구), 정읍(224가구), 순창(194가구)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의 귀농·귀촌 가구가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5%), 60대(23%), 30대(16.2%)로 전국 단위보다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주 후 영농종사 분야는 전국과 달리 경종분야(벼, 배추 등 노지작물)가 43.2%로 가장 많았고, 귀촌 등 기타(41.3%), 원예(시설작물 등) 분야(7.5%), 과수분야(4.7%), 축산분야(3.3%)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실태의 성별 통계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어 귀농·귀촌 여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귀농인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작성한 귀촌인통계를 바탕으로 귀농 가구주와 귀촌 가구주의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1].

○ 전북의 귀농가구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6.8%, 여자가 33.2%로 전국(69.3%: 30.7%)과 비교하여 여자 귀농인의 비율이 2.5%p 더 높게 나타나고 귀촌가구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8.5%, 여자가 31.5%로 전국(70.9%: 29.1%)평균보다 여자 귀촌인의 비율이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이고,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임.

2. 귀농 · 귀촌 지원정책 현황과 한계점

○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은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해지고 지원대상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정책적으로는 단계별 정책지원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고, 귀농·귀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하여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라북도는 광역단위의 귀농귀촌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단위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단계별 귀농·귀촌인 유치목표를 세웠음. 귀농·귀촌 홍보 및 농촌체험 추진, 귀농·귀촌 종합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귀농인 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작목 재배 지원 등을 중점 추진대책으로 하여 세부 추진계획들을 마련·수립함

○ 귀농·귀촌인과 가장 긴밀한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선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인조례를 제정하고(14개 시군) 직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이사비용, 귀농교육비, 영농정착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영농체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에 부흥하면서 일선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2년에「전북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시군보다도 발빠르게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귀농·귀촌정책이 유치에 치우쳐 기존 정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정적이고 본 연구과제에 해당되는 귀농·귀촌 여성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전북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정책과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더불어 현재 통계적으로 확보된 30% 이상의 여성귀농·귀촌인과 가구주를 따라 들어온 여성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3. 전북 귀농 · 귀촌 여성의 생활경험과 정책요구 조사 분석 결과

❒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착 경험

○ 귀농·귀촌의 동기에 있어서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자신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욕구와 함께 남편의 귀농요구, 자녀교육에 대한 도시와 다른 환경을 부여하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왔음. 귀농·귀촌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 사례자들이 지역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음.

○ 귀농·귀촌의 사전준비와 연관하여 현재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귀농교육을 통해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귀농·귀촌의 의미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교육이 귀농·귀촌지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함. 또한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정보가 가구단위로 진행되기에 농촌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적당한 상담과 정보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함.

○ 이주초기단계에서 여성들은 도시와 다른 정주환경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음. 초기 이주에서 주거를 임대한 사례들은 도시와 다른 주거형태와 청결 문제, 벌레 등으로 힘들었고 대부분 사례들은 냉난방과 의료와 교통문제들을 지적하였음.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사례들의 경우에 농촌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형이나 향후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사례들은 농촌학교의 지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음.

○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촌의 정착과정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음. 대부분 초기 정착에 필요한 땅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본인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귀농·귀촌 초기에는 농업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 소득을 바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처음

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음. 대부분의 사례자들은 부부중 1인이 농업과는 별개의 일을 가져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음. 도시에서 했던 일을 연장하거나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격증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구하였음. 특히 귀농귀촌여성들은 농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음.

❒ 귀농·귀촌 여성의 교육참여와 활동경험

○ 귀농·귀촌 교육과 연관하여 연구 사례자들은 귀농·귀촌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되지만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미비, 강사 활용의 문제, 소농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농을 위한 교육,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친환경 농업 욕구에 맞지 않은 교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여성들만을 위한 귀농학교의 필요성을 제시함.

○ 연구 사례자들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촌의 인력난으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음. 이후 증가하는 귀농·귀촌여성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모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

○ 현재 대부분의 사례들은 지역의 귀농·귀촌여성들과의 자조모임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인 모임에 참가하는 수준이었음.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과소화되어가는 현상에서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지역민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세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교류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음. 향후 여성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귀농·귀촌인의 모임과 지역민과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음.

❒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책수혜 경험과 요구분석

○ 귀농·귀촌 정책과 연관하여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자금이나

주택수리비등 정착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체험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들 가운데는 정착자금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정책이 지역 홍보와 지원금 융자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사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 영역에 속했고(주택수리비, 이사비, 창업자금 융자) 한정된 가구와 보조금 사업 신청 시기 등과 맞물려야 하기에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단위의 지원정책에 머물러 있기에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성귀농·귀촌자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본인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의 지원 등을 요구하였음.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의 시기나 현재 본인들이 하는 일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단순한 귀농·귀촌인의 유치전략으로서의 귀농·귀촌이 아닌 농촌에 살아 갈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 즉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살이를 지원해 주는 작은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었음.

❒ 정책적 시사점

○ 귀농·귀촌의 정착경험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주 직후 겪었던 주거와 토지 문제 그리고 귀농·귀촌자가 바로 영농활동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없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것은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나 소득 등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농촌이 과소화·고령화 되어 정주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정책적인 기대가 존재함. 그러나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의 구성원에 대한 면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통계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음.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자들인 여성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의 탐색과 준비단계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고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문화적 욕구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음. 따라서 향후 귀농·귀촌 정책에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인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어짐.

○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여성귀농·귀촌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지원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귀농·귀촌인은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높지 않으므로 이주 정착 단계에서도 귀농·귀촌 가구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됨. 그러므로 본 연구의 사례에서 귀농·귀촌인들은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공급, 지역자원 조사, 도농교류, 교육 및 연구활동 등의 활동이 일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 및 경제활동을 병행하였음. 특히 이와 같은 분야는 여성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분류되는 측면이 있기에 농촌의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도를 파악하고 귀농·귀촌 여성들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원으로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짐.

Ⅲ.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화 방안

1.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과정 강화

○ 현재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정책이 단계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인구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단계임. 따라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정보탐색, 준비·실행, 장착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전라북도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만호 귀농귀촌 유치 확대로 농촌활력화를 목표로 하여 도시민 유치를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함. 그러나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임.

○ 특히 귀농·귀촌 가구에 있어서 여성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의 수단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의 강화가 유치와 정착의 단계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단계별 지원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귀농·귀촌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임. 현재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비농업 분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현실에서 귀농·귀촌인은 초기정착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함.

○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의 2, 3차 산업화와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분야가 농촌의 취약한 영역이어서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창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ity) 귀농 · 귀촌 정책 수립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 하에 여성의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남성가구주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함.

○ 여성들이 귀농·귀촌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농촌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의 과정에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데 중요 요소이며 특히 여성들의 관계지향적이고 배려적인 특성은 지역민과의 적응과 조화에 순기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속성은 농촌사회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귀농·귀촌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강화 과정에 성인지적인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가구주 중심의 귀농·귀촌 통계 생산은 지양하고 각 정책과 사업에서의 대상과 수혜로서의 '여성'을 반영하는 성별 통계생산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귀농·귀촌 관련 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관한 정보를 보강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맞춤형 귀농교육의 확대에도 여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농촌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지원도 고려되고 귀농귀촌여성 인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립도 요구되어짐.

〈표 1〉 귀농 · 귀촌 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세부시책

분 야	세부과제	
1 귀농귀촌여성 지역 정착 지원 기반 조성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여성귀농학교 개설
	1-2	전북 귀농 · 귀촌 DB 구축에서의 성별통계 생산
	1-3	귀농 · 귀촌여성의 재능기부단 결성 및 운영지원
2 귀농귀촌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연계지원	2-1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연계
	2-2	새일센터의 농촌형 시범 사업 운영
	2-3	귀농 · 귀촌 여성의 교육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2-4	다문화마을학당의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

2. 세부 과제별 정책제언

1) 귀농 · 귀촌 여성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여성귀농학교 개설**

❒ 현황 및 진단

○ 귀농·귀촌가구의 증가 추세 하에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을 특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귀농·귀촌 교육은 수도권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영농기법과 작물위주의 이론교육, 그리고 시·군별 특화품목 현장 교육이 2박3일의 단기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부재함.

○ 특히 귀농·귀촌 가구에 있어서 여성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의 수단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의 강화가 유치와 정착의 단계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 차원에서 증가하는 여성귀농·귀촌인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학교를 개설·운영하여 여성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함.

❒ 추진방안

○ 전라북도의 수도권 귀농학교에 여성귀농학교를 동시에 개설함.

○ 현재 2박3일의 단기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귀농학교 교육의 내용을 이론과 현장탐방교육으로 분리함.

○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의 시·군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개설

○ 지역별 여성귀농·귀촌인의 사례 발표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설

○ 각 시·군 단위 귀농·귀촌학교와 수도권 귀농귀촌프로그램과 연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1-2 전북 귀농 · 귀촌 DB 구축에서의 성별통계 생산

❒ 현황 및 진단

○ 현재 전국 단위의 귀농·귀촌인 통계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귀농인 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작성한 귀촌인 통계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통계가 있음.

○ 성별통계는 귀농·귀촌가구주에 대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별 분리만 통계되어 여성귀농·귀촌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전무함.

○ 여성귀농·귀촌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농업인력으로서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이력을 파악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군단위의 행정을 통해 수집되는 귀농·귀촌 DB 구축에서 가구단위의 이력카드를 개인 단위의 이력카드로 분리하여 남녀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추진방안

○ 2013년 전라북도 귀농·귀촌 DB 구축 작업을 토대로 성별분리통계 작성안 마련

○ 귀농·귀촌인 이력카드조사표를 가구단위보다는 개인의 이력카드로 작성

〈표 2〉 현재의 귀농 · 귀촌인 이력카드 조사표

사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 소	본 적			
		주소(전)			
		주소(현)	(자가 / 임대)		
	연락처(전화)			이메일	
	최종학력			전공분야	
	가족사항		부모: 명, 부(처) /명, 자녀 명		
귀농귀촌동기	영농( )		전원생활( )	자녀교육( )	노후생활( )
이하 생략					

〈표 3〉 개인의 귀농 · 귀촌인 이력카드 조사표

사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 소	본 적			
		주소(전)			
		주소(현)	(자가 / 임대)		
	연락처(전화)			이메일	
	최종학력			**전공분야**	
				전 직업 및 활동 분야	
	혼인상태		**기혼 ( ) 미혼 ( )**		
	현재 거주 가족사항		**개인 기입 형태로**		
귀농귀촌동기	영농( )		전원생활( )	자녀교육( )	노후생활( )
이하 생략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1-3 귀농 · 귀촌여성의 재능기부단 결성 및 지원

❒ 현황 및 진단

○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의 다양한 재능을 농어촌에 기부함으로써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일 재능 뱅크(www.smilebank.kr)를 통해 농어촌기부활동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이란 경영, 마케팅, 지역개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함.

○ 2012년에 재능기부분야와 재능을 요청한 마을 539개를 분석해 보면 재능기부 영역이 지역개발과 의료복지교육, 농림어업의 순이었음.

○ 한편 도시민이 귀농·귀촌한 후 원하는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을 보면 전국 7대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성주인, 2012)에도 나타나는데 이주 준비 도시민은 경제활동 보다는 마을사업과 지역사회 봉사활동(33.8%)을 원하고 있었음.

○ 현재 강원도의 경우 귀농·귀촌자 중 지역개발 분야, 의료, 복지, 교육분야, 경영마케팅 분야 등 전문분야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마련함. 경북 상주시의 경우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의 교류증진에 기여함. 전북 고창의 경우 귀농 전 일정기술을 갖춘 귀농·귀촌인을 발굴하여 재능기부 기동처리반을 운영함.

○ 여성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기부단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지역민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함.

❒ 추진방안

○ 각 시군 귀농귀촌 담당과(귀농귀촌지원센터 포함)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여성의 재능기부단을 운영함.

○ 현재 완주군의 재능기부단이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마을공동체 대표 등의 운영단을 조성하여 재능기부단의 활동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같이 각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여성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단 운영위를 구성하여 운영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귀농귀촌지원센터)

○ 협력기관 :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2) 귀농 · 귀촌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

2-1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구인 · 구직정보 수집 및 제공

❒ 현황 및 진단

○ 귀농·귀촌 가구들은 농업소득으로 가구소득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따라서 현재 귀농·귀촌의 가구들 중 여성들은 요양보호사, 방과 후 지도사, 행정보조인력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

○ 농촌의 일자리를 분석한 자료(송미령, 2012)에 따르면 농촌사회에서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복지정책의 확대 등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함.

○ 더불어 농촌의 농업부문 등의 계절적인 필요 노동력의 수요가 존재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요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대한 파악을 연결하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됨.

❒ 추진방안

○ 각 시·군의 귀농귀촌업무 담당이나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일종의 지역 일자리 SOS 창구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지역 일자리 SOS 창구에서는 농촌의 농업부문 등의 계절적인 필요노동력, 그리

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모집 등의 필요노동력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해당지역에 여성귀농·귀촌인 중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지역별 일자리 SOS 창구에 상담, 신청하여 지역 내 필요 노동력 수요와 연계하도록 함.

○ 각 시·군 홈페이지와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에 필요인력을 일자리별로 구분하여 공지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필요인력난의 문제와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요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귀농귀촌지원센터)

○ 협력기관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새일센터

2-2 새일센터의 농촌형 시범사업 운영

❒ 현황 및 진단

○ 여성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여성귀농·귀촌자의 문화 및 교육적 욕구,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필요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를 농촌형 새일센터로 모델화하여 도와 시·군의 귀농·귀촌정책을 전달하고 여성귀농·귀촌자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방안 모색

❒ 추진방안

○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려는 유형별 새일센터 지원사업을 지역화하여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구축함.

○ 농촌형 새일센터는 기존 새일센터의 기본사업영역에 농촌지역과 농촌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함. 이 과정에서 농촌의 새로운 인적자원인 귀농·귀촌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농촌형 새일센터 모형은 <표 4>처럼 교육대상과 교육훈련 분야와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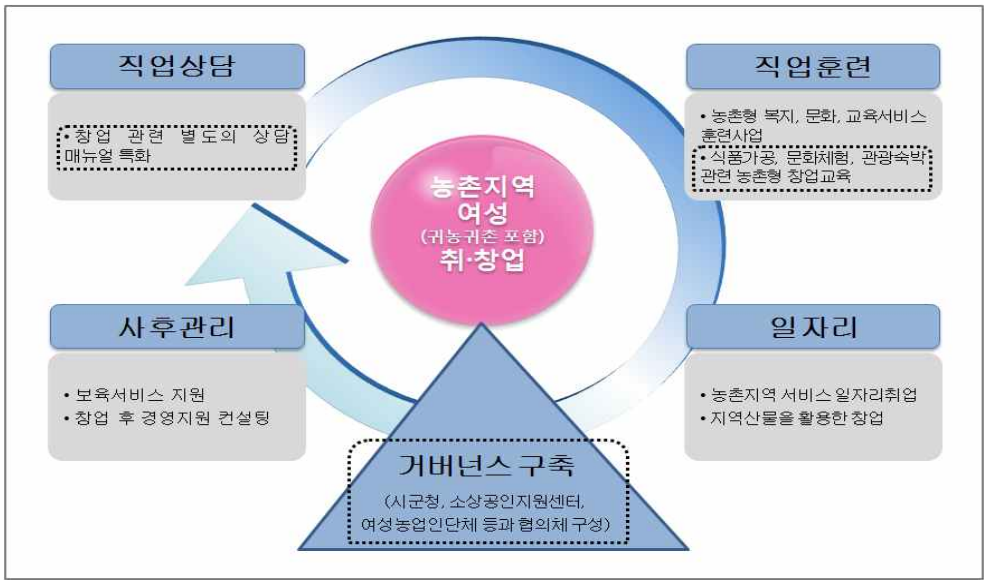
〈표 4〉 농촌형 새일센터 모형

항목	내용
대상	- 농촌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 취업과 지역산물을 활용한 창업희망 여성 (귀농귀촌여성)
교육훈련 분야 및 내용	- 농촌형 복지, 문화, 교육서비스 분야 훈련 - 식품가공, 문화체험, 관광 숙박 등 농촌형 창업교육 - 행정보조, 소규모 사무실 회계인력 교육 등
취업 · 창업지원	- 농촌지역 취업제공 및 취업연계
거버넌스	- 시군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여성농업인 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여성회관 각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 협의체 구성

○ 농촌형 새일센터 사업 모형에 대한 운영구도는 <그림 1>처럼 귀농귀촌여성을 포함한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상담,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의 영역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함.

○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농촌형으로 분리되는 남원새일센터를 농촌형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농촌지역 새일센터가 향후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그림 1〉 농촌형 새일센터 사업모형 운영 흐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여성청소년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새일지원센터

2-3 귀농귀촌여성의 교육 ·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 현황 및 진단

○ 협동조합기본법(2012.12. 시행)에 의해 5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69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2013년 3월말).

○ 협동조합은 지역에 뿌리를 둔 조직으로 내성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개발하고 고용되는 선순환 구조의 성격을 가짐.

○ 여성귀농·귀촌인이 도시에서의 전직과 활동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교육·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이 좋은 모델로 추진될 수 있음.

○ 최근의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분석에서 농촌지역의 경우 대상별로 욕구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중요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귀농·귀촌 여성들의 인력특성을 고려하면서 교육·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중앙에서 개발한 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중심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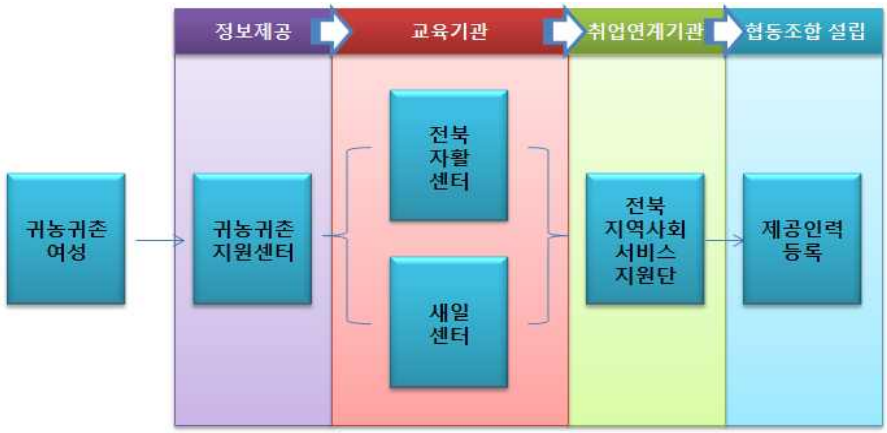
❒ 추진방안

○ 첫 번째의 추진방안은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돌봄서비스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각 시군의 여성회관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대상선정은 각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파악한 귀농·귀촌여성의 이력 중에서 교육관련 자격증이나 교육경력이 있는 대상자와 돌봄서비스 관련 자격과 이력을 가진 인원을 파악하여 협동조합을 형성하도록 독려함.

○ 두 번째 추진방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으로 귀농·귀촌여성들의 교육·돌봄서비스협동조합 결성지원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 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현재 광역 자활기관당자들의 협조 하에 귀농·귀촌여성인력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과정도 마련하여 새로운 지역인프라로 구성함.

〈그림 2〉 귀농귀촌여성을 활용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안(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사회복지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새일지원센터,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광역자활센터

2-4 다문화 마을 학당의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

❒ 현황 및 진단

○ 전라북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전북형 서비스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다문화 마을 학당을 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마을학당은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지원체계로 다문화가족들의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다문화마을학당의 주요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자원 봉사자의 모집 규모는 3개시(전주, 군산, 익산), 15명 이상의 규모이고 기타 11개의 시·군은 12명 이상 규모로 계획, 진행되고 있음. 11개 군단위에서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들의 자격요건은 한국어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전직교사, 교육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등을 갖춘 자로 1회당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가 지급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역별로 유입되어 있는 여성귀농·귀촌자의 이력을 파악하여 이 들을 자원봉사자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추진방안

○ 각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 인력 수급을 조사함.

○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의 여성귀농·귀촌인의 이력조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발굴하여 연계함.

○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에서 한국어교육을 60시간 이수한 경력자의 요건을 부여받기 위하여 시·군의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육 강좌를 개설함.

○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 거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을 연계하여 진행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다문화교류과

○ 협력기관 :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 여성회관 및 새일지원센터

목 차

제 1 장 서 론 ····· 3

제 1 절 연구목적 및 내용 ····· 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제 2 절 연구방법 ····· 6

1. 연구방법 ····· 6

2. 연구절차 ····· 8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9

1. 귀농 · 귀촌의 개념 ····· 9

2. 귀농 · 귀촌 선행연구 ····· 10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 12

제 2 장 전북 귀농 · 귀촌 현황 및 지원정책 ····· 17

제 1 절 귀농 · 귀촌 현황 ····· 17

1. 전국의 귀농 · 귀촌 현황 ····· 17

2. 전북의 귀농 · 귀촌 현황 ····· 25

제 2 절 귀농 · 귀촌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 35

1. 중앙정부의 귀농 · 귀촌 정책 ····· 35

2. 전라북도의 귀농 · 귀촌 정책 ····· 40

3. 귀농 · 귀촌정책의 시사점과 한계 ····· 50

제 3 장 전북 귀농 · 귀촌 여성 생활경험과 정책요구 ····· 55

제 1 절 사례조사 개요 ····· 55

1. 사례조사 ····· 55

제 2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착경험 ····· 59
1. 귀농 · 귀촌동기와 적응과정의 차이 ····· 59
2.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부족 ····· 61
3. 정주환경 불편함과 자녀교육 문제 ····· 62
4.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 ····· 67
제 3 절 귀농 · 귀촌 여성에 관한 교육 · 활동 경험 ····· 70
1. 여성을 위한 귀농 · 귀촌교육 필요 ····· 70
2. 자기계발 및 취업교육프로그램 요구 ····· 74
3. 세대와 문화 차이로 인한 지역민 교류의 어려움 ····· 77
제 4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책 수혜 경험과 요구 분석 ····· 80
1. 가구 중심의 일부 지원 혜택 경험 ····· 81
2. '여성' 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정책 ····· 82
3. 귀농 · 귀촌여성의 농촌살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요구 ····· 84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91
1. 사례 조사 요약 ····· 91
2. 사례조사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 95

제 4 장 귀농 · 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화 방안 ····· 101
제 1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 101
1. 귀농 · 귀촌 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과정 강화 ····· 101
2.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ity)귀농 · 귀촌 정책 수립 ····· 103
제 2 절 세부과제별 정책제언 ····· 105
1. 귀농 · 귀촌 여성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 ····· 105
2. 귀농 · 귀촌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 ····· 110

참고문헌 ····· 121

표 목 차

〈표 1-1〉 기존 연구에서의 귀농 · 귀촌 단계별 어려움 분석 ····· 11

〈표 2-1〉 연도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 18
〈표 2-2〉 연도별 · 지역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 19
〈표 2-3〉 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6) ····· 19
〈표 2-4〉 귀농 전 거주지역별 귀농가구 ····· 20
〈표 2-5〉 연도별 · 연령별 귀농 · 귀촌 현황 ····· 21
〈표 2-6〉 귀농 · 귀촌 전 직업 현황(2012.6) ····· 21
〈표 2-7〉 귀농 · 귀촌 가구 영농종사 현황(2012.6) ····· 22
〈표 2-8〉 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6) ····· 22
〈표 2-9〉 귀농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 24
〈표 2-10〉 귀촌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 25
〈표 2-11〉 전북 연도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 26
〈표 2-12〉 전북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 ····· 27
〈표 2-13〉 전북 연도별 · 지역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 28
〈표 2-14〉 전북 연령별 귀농 · 귀촌 현황(2012) ····· 28
〈표 2-15〉 전북 귀농 · 귀촌 가구 영농종사 현황(2012) ····· 29
〈표 2-16〉 교육생 현 거주지 ····· 30
〈표 2-17〉 교육생 고향현황 ····· 30
〈표 2-18〉 교육생 연령 ····· 31
〈표 2-19〉 교육생 성별 ····· 31
〈표 2-20〉 교육생 직업현황 ····· 31
〈표 2-21〉 귀농하고 싶은 곳(복수응답) ····· 31
〈표 2-22〉 전라북도를 귀농 · 귀촌지로 결정한 이유(복수응답) ····· 32
〈표 2-23〉 귀농 · 귀촌을 고려하는 근본적 이유(복수응답) ····· 32
〈표 2-24〉 귀농(귀촌) 결정시 가족 간의 합의과정 ····· 32
〈표 2-25〉 귀농 관련 정보 제공 경로 ····· 32
〈표 2-26〉 귀농 · 귀촌 이주(준비)비용 사용처 ····· 33

〈표 2-27〉 귀농시 참여 원하는 사업 ····· 33
〈표 2-28〉 정부나 지자체의 적합한 지원방법(복수응답) ····· 33
〈표 2-29〉 귀농 준비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34
〈표 2-30〉 귀농 · 귀촌 활성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2013) ····· 37
〈표 2-31〉 귀농 · 귀촌 단계별 중앙정부 지원정책(2013) ····· 39
〈표 2-32〉 귀농 · 귀촌 관련 주요 광역자치단체 지원정책(2012) ····· 40
〈표 2-33〉 귀농 · 귀촌 관련 주요 기초자치단체(25개 시 · 군 중심) 지원정책(2012) 41
〈표 2-34〉 귀농 · 귀촌 지원조례 제정 현황(2013) ····· 42
〈표 2-35〉 전라북도 귀농 · 귀촌 지원정책 ····· 43
〈표 2-36〉 전라북도 귀농 · 귀촌 활성화 종합대책(2013) ····· 44
〈표 2-37〉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군산 · 익산 · 김제 · 완주) 45
〈표 2-38〉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무주 · 진안 · 장수) ····· 47
〈표 2-39〉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임실 · 순창 · 남원) ····· 48
〈표 2-40〉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고창 · 부안 · 정읍) ····· 49

〈표 3-1〉 귀농 · 귀촌 여성의 심층면접 사례 ····· 56
〈표 3-2〉 귀농 · 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접내용 ····· 58
〈표 3-3〉 연구대상자들의 주거형태 ····· 63
〈표 3-4〉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단계별 귀농귀촌인의 어려움과 요구도 분석 비교 95

〈표 4-1〉 단계별 지원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전략 수립 ····· 104
〈표 4-2〉 귀농귀촌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104
〈표 4-3〉 귀농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 105
〈표 4-4〉 귀촌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 105
〈표 4-5〉 현재의 귀농 · 귀촌인 이력카드 조사표 ····· 107
〈표 4-6〉 개인의 귀농 · 귀촌인 이력카드 조사표 ····· 107
〈표 4-7〉 도시민이 희망하는 농어촌 이주 후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 108
〈표 4-8〉 새일지원센터 예산 지원 기준 ····· 112
〈표 4-9〉 농촌형 새일센터 모형 ····· 11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 8

〈그림 2-1〉 연도별 귀농·귀촌 추이 ····· 18
〈그림 2-2〉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2012.6) ····· 20
〈그림 2-3〉 귀농·귀촌가구 변화 추이 ····· 23
〈그림 2-4〉 연도별 귀농·귀촌 추이 ····· 26
〈그림 2-5〉 전북지역별 귀농·귀촌 현황(2012) ····· 27
〈그림 2-6〉 전국 귀농·귀촌 연령 구성(2012.6) ····· 29
〈그림 2-7〉 전북 귀농·귀촌 연령 구성(2012) ····· 29
〈그림 2-8〉 전국 귀농자 주 작목 현황(2012.6) ····· 30
〈그림 2-9〉 전북 귀농자 주 작목 현황(2012) ····· 30
〈그림 2-10〉 중앙정부의 귀농정책의 지향성 변화 ····· 36
〈그림 2-11〉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2013) ····· 38

〈그림 4-1〉 현재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방안 및 운영체계 ····· 101
〈그림 4-2〉 농촌형 새일센터 사업모형 운영 흐름 ····· 113
〈그림 4-3〉 귀농·귀촌 여성을 활용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안 ····· 11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 2 절 연구방법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과소화로 인하여 농업의 약체화와 소멸되어 가는 농촌지역은 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지역의 유지, 보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증가되고 있어 이들이 농업 농촌으로의 유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현재 누적 귀농귀촌가구가 38,788가구로 2011년도에 전년대비 158% 증가한 10,503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0-50대의 장년층(56.4%)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의 동기가 IMF 직후 경제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농촌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귀농·귀촌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재개발원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의 동기가 농촌생활 선호 38%, 농사 14%, 은퇴 후 여가 13.6%, 건강 9.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귀농·귀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정착의 장애 요인도 다양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도 귀농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새로운 사회변동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귀농·귀촌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인적자원의 농촌 유입으로 이어져 농촌사회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귀농·귀촌실태의 성별 통계가 생산되지 않으면서 귀농귀촌가구에서 가구주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만 생산되고 있어 귀농·귀촌 여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전체 귀농·귀촌 가구주의 30%가 여성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이들의 유입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귀농·귀촌 가구가 많았고, 200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누적 귀농·귀촌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경북,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초기 정착율은 20%-25%로 보고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에 있어 가장 큰 실패요인이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지만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귀농·귀촌 가구 중 여성의 적응력 저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은 가구단위로 이동하며 대부분 귀농·귀촌 지역은 고향 및 연고지를 선호(30.8%)하는데 주로 남편의 연고지로 가거나 혹은 무연고지로 가는 경향도 있다. 귀농·귀촌의 성공 요인으로는 귀농준비, 지역사회관계, 가족관계중 배우자의 지지가 주요 요인으로 설명(농림수산식품부, 2011)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증대하는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와 함께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이면서 이들의 정착이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에도 주요 요인이 되기에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북지역 귀농·귀촌 여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귀농·귀촌 여성의 특성별 사회참여 역량과 정책 요구도를 분석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 여성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지역의 귀농귀촌여성의 정착과정 경험과 정책요구도 분석

둘째, 귀농귀촌지원 정책에서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셋째,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정착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시책 제안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북지역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적응 및 사회활동 실태를 분석하면서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여성의 특성별 사회참여 역량과 정책 요구도를 분석 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적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도내 각 시군의 귀농·귀촌 정책 동향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북지역의 귀농·귀촌 여성 생활경험과 정책요구도를 알아보고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귀농·귀촌 동기, 교육경험, 생활경험과 정착과정, 정책요구도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수혜 경험과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지원도 분석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지역별 귀농·귀촌 여성의 사례조사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귀농·귀촌 여성들이 전북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귀농·귀촌 정책에서 빠진 여성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황을 기초자료로 분석하였고, 지역별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과정과 정책의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통계가 중앙과 지역단위에서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귀농·귀촌에 대한 현황 통계를 기초통계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관련 문헌 연구, 그리고 지역의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귀농·귀촌 관련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귀농·귀촌 인구 관련 통계 자료 분석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도내 각 시군의 귀농·귀촌 관련 행정 자료 수집 및 검토

2) 사례 조사

- 조사대상 :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파악된 귀농·귀촌 여성을 1차적으로 연계하였고 연구자가 명단을 받아 인터뷰에 호응한 여성들을 선택하였음.
- 조사방법 : 심층면접 기법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음. 면담은 개별면담으로 개인적 이야기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주로 면담자의 집이나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이루어졌음.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음. 심층면접 대상자는 20사례 선정되었고 면접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 여성의 심층면접 내용

항목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 귀농 · 귀촌 이전의 거주지, 학력, 전 직업, 가족관계, 종교 등 - 현재 거주지와의 관계(본인, 남편, 무연고)
귀농배경, 준비	- 귀농 · 귀촌을 하게 된 이유? - 귀농 · 귀촌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였는가? - 귀농 · 귀촌을 하면서 기대했던 점들은 무엇인가?
귀농이후의 생활	- 경제활동 : 현재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 영농활동 이외의 소득/영농활동의 참여 정도 -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 영역 :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 - 문화생활 및 자녀양육(교육) - 취미활동, 참여여부 - 귀농 · 귀촌 이후의 교육변화,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활동
지역민과의 관계	- 토착민과의 관계 - 기존 지역시회의 행사참여 - 토착민과의 갈등상황 여부 - 본인과 이웃의 범위
정책지원	- 정부로부터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 이후 정책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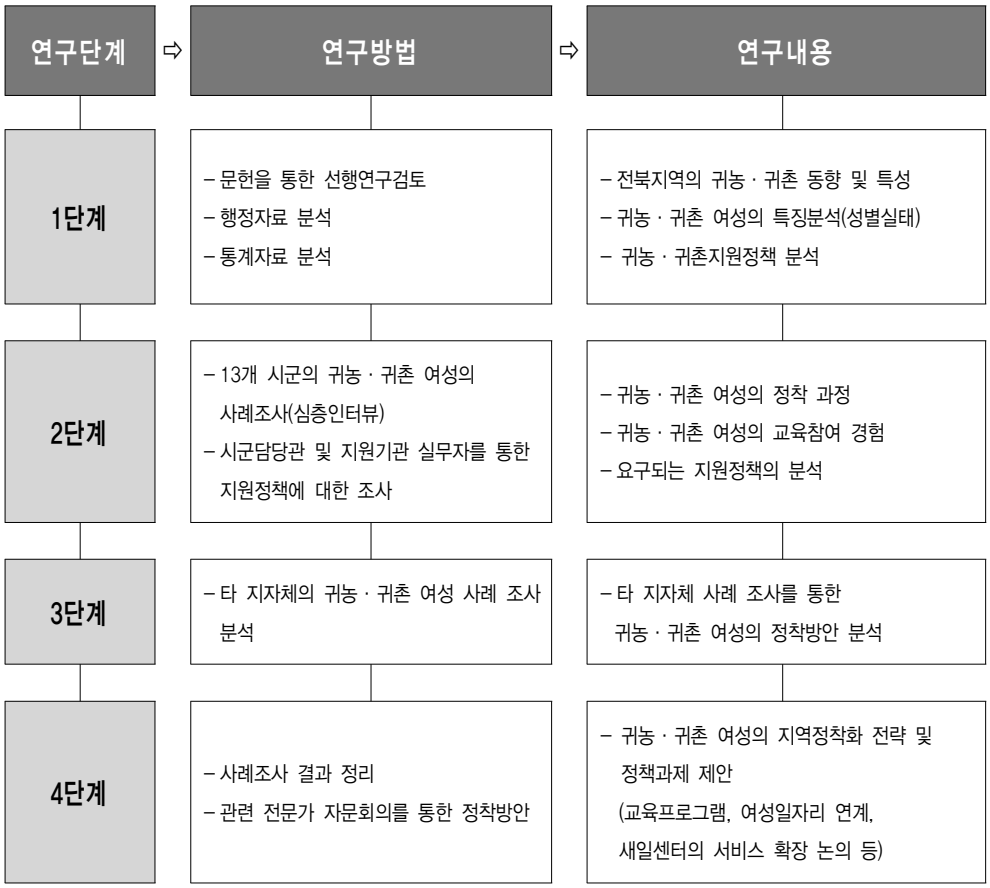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진행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1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외에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2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연구절차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절차를 도식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전체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급증되면서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가구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귀농·귀촌 여성에 관한 연구와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여성농업인이나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증가하는 귀농·귀촌자에 있어서 여성의 증가도 농촌사회의 주요한 대상자이기에 이들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귀농·귀촌 선행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귀농 · 귀촌의 개념

귀농·귀촌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귀농·귀촌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형태와 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적으로 귀농·귀촌의 개념과 범위를 직업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귀농인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출신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여 협의의 귀농·귀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 귀농자를 농촌의존형이면서 귀농지역이 농촌환경이 유지된 거주지역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권역 내에서 주요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상시거주자로 정의하여 귀농·귀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서만용, 구자인 2005; 김철규외 2011; 유정규외 2011). 또한 귀농을 정의하는데 있어 이주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있다. 현재 2012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의하고 있는 귀농은 농촌이주와 농업종사를 결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농촌에 살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직업을 전환한 사람은 배제되고 있으며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 개념도 전원생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황정임, 2012).

이상과 같이 귀농·귀촌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가 다양하고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귀농·귀촌인의 범위를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정의해야 하는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다양한 이주형태(U·J·I-turn)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귀농·귀촌의 목적도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영농종사 외에도 비농업적인 분야 종사, 새로운 삶의 방식, 전원생활, 여유로운 여생추구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농촌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도시환경에 대한 불만과 사람들의 생애단계에서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인식변화와 도시민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계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정책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가구 중 농업이 주 소득원인 경우를 귀농으로, 농업이 주소득원이 아닌 경우를 귀촌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박성정, 2012). 여성을 중심으로 볼 때 귀농·귀촌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사례연구를 할 때에는 귀농·귀촌의 사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였다.

2. 귀농 · 귀촌 선행연구

귀농·귀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의 사회적 흐름과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IMF 이후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귀농·귀촌관련 연구는 농업을 직업으로서 귀농·귀촌한 대상을 중심으로 귀농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협의의 귀농을 중심으로 귀농단계별 귀농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강대구, 2005; 마상진외 2008)들이 진행되었다.

이후 귀농·귀촌의 배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배경과 동기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려는 논의와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귀농·귀촌자의 목적에 따른 유형별 대칙 및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김철규, 2011; 유정규외, 2011; 성주인외 2012). 특히 전국 단위의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면서 기존 연구들에서 귀농·귀촌과정의 어려움을 분석한 자료는 이후 정책논의를 정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여겨진다.

〈표 1-1〉 기존 연구에서의 귀농 · 귀촌 단계별 어려움 분석

구분	문항	자료 출처[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귀농 탐색 단계	귀농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		○		○			
	가족의 반대					○	○		
	귀농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부족		○						
	귀농희망자의 동기 · 여건 등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						
	귀농지 선정							○	
귀농 준비 단계	영농관련 상담 및 안내 미흡	○							
	귀농인의 영농계획에 대한 컨설팅 부족	○							
	영농실습 기회 미흡	○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 미흡	○							
	농지구입 정보 제공 미흡	○							
	정책자금 지원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					○			○
이주후 정착 단계	영농상담 기회 부족	○							○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유지	○			○	○			
	정착단계에서의 멘토링 등 조력부족		○						
	영농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미흡	○							○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	○			○	○		○	
	농사 및 농업경영 기술 습득의 어려움	○				○	○	○	○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				○			
	교통 문제	○							○
	주택마련		○						
	농지원부 마련	○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	○							
	의료, 복지 등 생활 환경 문제				○				○
	자녀 교육	○			○			○	○
	농지 확보	○				○	○	○	○
	노동력 확보	○				○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	○	○		○	○			
	소득원 확보 문제	○		○	○	○		○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지확보	○		○	○	○			

자료 : 김정섭(2012),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과제, p.18 재인용

3) ① 차광주(2010), 현장에서 본 귀농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송용섭 외(2010), 귀농·귀촌 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
③ 장동헌(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 지역사회연구
④ 조창환(2009), 전남귀농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⑤ 강대구(2006), 최근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⑥ 서만용 외(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⑦ 김성수 외(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⑧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실태를 파악하고자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준비과정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사결정 사항, 현실적 어려움을 조사 분석하였다(성주인외, 2011; 김철규외 2011; 유정규외 2011, 인재개발원, 2011). 연구결과에 따르면 귀농인과 귀촌인 공통의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 및 일자리 기회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귀농중심 혹은 은퇴형 귀촌 중심이었던 시기와 달리 새로운 의미의 귀촌이 부각되는 만큼 귀농·귀촌인이 농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지목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귀농·귀촌인이 준비과정 및 정착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줄이고 농촌지역 활성화의 견지에서 농촌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귀농·귀촌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여성귀농·귀촌자에 대한 연구는 정책연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행한 연구인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정착 및 사회참여지원방안(박성정외, 2012)이 유일하게 존재하며 학위논문에서 비혼 여성귀농인의 정착과정을 담은 연구와 경북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단위의 귀농·귀촌에서 여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재해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자들과 연관되어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여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귀농·귀촌자들을 남성 중심의 가구 단위로 분석하고 지원하는 방안만 전개되었다.

이도향촌이라는 사회적 흐름과 귀농·귀촌자의 급증이 예측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귀농·귀촌의 주체로서 여성과 귀농·귀촌 가구원으로서의 여성의 삶과 욕구, 문제는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삶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본 연구는 전북지역 귀농·귀촌 여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귀농·귀촌 여성의 특성별 사회참여 역량과 정책 요구도를 분석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 여성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

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전북지역의 귀농귀촌여성의 정착과정 경험과 정책요구도 분석 둘째, 귀농귀촌지원 정책에서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셋째, 귀농귀촌 여성의 지역정착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시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현재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개인의 다양한 동기로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여성귀농귀촌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거의 미비한 상태이고 중앙단위에서 정책연구로 하나의 과제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여성의 입장에서 늘어나는 귀농귀촌인 중 여성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착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역밀착적이며 여성중심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즉 귀농·귀촌가구의 정착에서 가족의 동의, 특히 여성의 동의는 귀농·귀촌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여성에 대한 세밀하고 선도적인 지원정책 수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의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통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지역별 사례조사라는 것에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기존의 귀농·귀촌가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귀농귀촌여성의 정착 경험에 대한 살아있는 목소리와 정책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제 2 장

전북 귀농 · 귀촌 현황 및 지원정책

제 1 절 귀농 · 귀촌 현황
제 2 절 귀농 · 귀촌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제 2 장 전북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정책

제 1 절 귀농·귀촌 현황

농촌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세, 여성결혼이민자 증가 등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맞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 후반에는 IMF경제위기 이후 농업을 생계의 기본으로 하는 전업농(專業農) 형태의 귀농·귀촌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도시생활의 대안으로 좋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농업·농촌과 생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선호 등이 귀농·귀촌의 이유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인해 농어촌으로의 이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는 농촌사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새로운 사회변동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귀농·귀촌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라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인적자원의 농촌 유입으로 이어져 농촌사회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귀농·귀촌실태의 성별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귀농·귀촌 여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전국적인 귀농·귀촌의 실태는 가구단위로만 분석이 가능하므로 본 절에서는 전국과 전북지역 귀농·귀촌 현황 및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국의 귀농·귀촌 현황

최근 약 10년간의 전국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보면, 2001년 귀농·귀촌 가구는 880가구에서 2004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서고, 2009년 이후 4000가구를 웃돌아 2011년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 인구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표 2-1〉 연도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이동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누계	38,788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38,788
구성비	100.0	2.3	2.0	2.3	3.4	3.2	4.5	6.1	5.7	10.5	10.5	27.1	2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1〉 연도별 귀농 · 귀촌 추이

(단위 : 가구)

전국 연도별·지역별로 귀농·귀촌 가구수 현황을 보면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남(15.1%), 전북(15.0%), 전남(14.4%)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가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 등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국가 및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 연도별 · 지역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계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부산	15(0.04)	–	–	–	–	–	1	–	–	–	–	–	14(0.2)
대구	0(0.00)	–	–	–	–	–	–	–	–	–	–	–	–
인천	230(0.59)	–	1	–	16	28	2	–	–	26	20	123	14(0.2)
광주	13(0.03)	–	–	5	6	–	1	–	–	–	–	1	–
대전	13(0.03)	1	–	–	–	–	1	–	–	–	–	–	11(0.1)
울산	7(0.02)	–	–	–	–	7	–	–	–	–	–	–	–
경기	833(2.1)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
강원	4,783(12.3)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1,014(11.6)
충북	4,052(10.4)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2,085(23.9)
충남	2,879(7.4)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403(4.6)
전북	5,824(15.0)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380(15.9)
전남	5,590(14.4)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1,355(15.6)
경북	8,049(20.8)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1,317(15.1)
경남	5,859(15.1)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959(11.0)
제주	641(1.7)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154(1.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2012년 상반기의 현황만을 놓고 보면, 귀농·귀촌 가구수는 8,706가구, 인구수는 17,745명(가구당 2.2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누적된 귀농·귀촌 가구수가 38,788가구로 가구당 2.2명인 것으로 생각할 때 무려 85,334명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정착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역별로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 가구 비율은 충북(23.9%), 전북(15.9%), 전남(15.6%), 경북(15.1%)의 순이며 상위 4개 도가 7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인구 비율은 충북(19.5%), 전남(16.7%) 다음 전북이 16.5%의 비율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3〉 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6)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가구	수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비율	100.0	11.6	23.9	4.6	15.9	15.6	15.1	11.0	0.2	0.2	0.1	1.8
인구	수	17,745	1,963	3,467	895	2,920	2,956	2,820	2,195	41	50	44	394
	비율	100.0	11.1	19.5	5.0	16.5	16.7	15.9	12.4	0.2	0.3	0.2	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2〉 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6)

(단위 : 가구, 명)

귀농자의 시도 간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전입과 함께 대구→경북, 울산→경북, 울산→경남,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전→충북, 대전→세종, 부산↔울산 이동과 같이 인접 광역시에서의 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2-4〉 귀농 전 거주지역별 귀농가구

(단위 : 가구)

귀농전 / 전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10,075	2,014	727	712	552	554	416	190	2,190	231	192	215	534	363	440	608	137
2012	11,220	2,316	827	783	618	642	511	213	2,445	265	232	213	531	332	507	655	130
부산	29	1	22					1		1					1	3	
대구	80	2		66			1	3	1	1				1	4	1	
인천	89	31		1	33	1			21		1						1
울산	55	3	14					32	3			1				2	
세종	93	29	1	1	4		29		18		3	6	1		1		
경기	1,027	416	5	3	51	2	3	2	508	10	9	2	2	4	5	4	1
강원	972	320	7	6	72	1	14	2	314	203	18	6			5	4	
충북	918	236	10	8	69	2	121	9	263	11	160	16	2	1	5	5	
충남	1,214	302	8	7	139	1	219	6	346	5	9	144	15	3	6	1	3
전북	1,238	261	25	10	55	54	60	9	234	4	8	14	476	12	2	12	2
전남	1,733	294	66	5	81	576	24	6	300	7	6	7	22	304	6	24	5
경북	2,080	271	178	581	84		22	110	284	20	13	10	7	2	440	57	1
경남	1,434	108	471	93	24	3	14	33	102	3	3	6	4	3	28	537	2
제주	258	42	20	2	6	2	4		51		2	1	2	2	4	5	115

자료: 오병기(2013), 수도권 출향민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 지원 10대 방안, p.22 재인용

연도별·연령별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50대의 귀농·귀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5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귀농·귀촌자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과거 농업경력자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50대 이하의 비중은 2012년 상반기에만 74.8%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부터 누적되어 온 가구의 비율로 보면 80% 이상으로 이들이 농업 신규인력 유입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연도별 · 연령별 귀농 · 귀촌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계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100.0)
29세 이하	1,853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415(4.8)
30대	6,733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1,186(13.6)
40대	10,948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2,127(24.4)
50대	11,627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2,786(32.0)
60세 이상	7,627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2,192(25.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또한 2012년 상반기,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 전 직업 현황을 보면, 자영업 종사가 2,144가구로 가장 많은 24.6%의 비율을 차지하고, 사무직 1,609가구(18.5%), 생산직 936가구(10.8%), 주부 712가구(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귀농 · 귀촌 전 직업 현황(2012.6)

(단위 : 가구, %)

구분	계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건설	공무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인구	8,706	2,144	1,609	936	427	370	259	712	84	582	1,583
비율	100.0	24.6	18.5	10.8	4.9	4.2	3.0	8.2	1.0	6.7	18.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리고 이들이 귀농 후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귀촌 등 기타 분야의 비율(46.4%)을 제외하고 벼나 배추 등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분야가 35.5%로 가장

많았는데, 경종분야가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종분야 다음으로는 과수분야(9.0%), 원예분야(6.3%), 축산분야(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귀농 · 귀촌 가구 영농종사 현황(2012.6)

(단위 : 가구, %)

구분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귀촌 등 기타
인구	8,706	3,093	551	785	237	4,040
비율	100.0	35.5	6.3	9.0	2.7	46.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귀농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2년 상반기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8,706가구 중에서 귀농가구가 4,678가구로 53.7%이고 귀촌가구는 4,028가구로 46.3%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2011년(귀농:귀촌=62.3%:37.3%)에 비해 귀촌가구의 급증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지역을 떠나 농촌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농어업 생산활동에만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귀촌가구는 특히 충북, 강원지역이 많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인접해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귀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체 귀농가구의 80.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은 전남이고, 전체 귀촌가구의 76.5%를 차지하는 지역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표 2-8〉 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6)

(단위 : 가구, %)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전	제주
계		8,706	1,014	2,085	403	1,380	1,355	1,317	959	14	14	11	154
귀농 가구	수	4,678	386	491	278	838	1,092	879	602	8	6	5	93
	비율	53.7	38.1	23.5	68.9	60.7	80.6	66.7	62.8	57.1	42.9	45.5	60.4
귀촌 가구	수	4,028	628	1,594	125	542	263	438	357	6	8	6	61
	비율	46.3	61.9	76.5	31.1	39.3	19.4	33.3	37.2	42.9	57.1	54.5	39.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3〉 귀농 · 귀촌가구 변화 추이

(단위 : %)

귀농·귀촌실태의 성별 통계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어 귀농·귀촌 여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귀농인 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작성한 귀촌인통계를 바탕으로 귀농 가구주와 귀촌 가구주의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4].

2012년 한 해 동안 귀농한 가구는 11,220가구로 전년의 10,075가구보다 11.4% 증가하였고 시도별로는 경북이 2,080가구(18.5%)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7,775명으로 69.3%, 여자는 3,445명으로 30.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298명으로 38.3%, 40대가 24.7%로 40~50대가 63.0%를 차지하였다. 전년에 비하면 30대 이하와 40대, 60대는 줄어들고 50대, 70대 이상은 증가하여 50대 이상의 비율이 63.9%로 전년보다 1.2%p 높아져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과거 농업경력자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북 귀농가구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6.8%, 여자가 33.2%로 전국과 유사하지만 여자 귀농인의 비율이 2.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이고,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임.

〈표 2-9〉 귀농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단위 : 가구, %)

구분	성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11,220	7,775	3,445	1,292	980	312	2,766	1,891	875	4,298	2,837	1,461	2,195	1,641	554	669	426	243
	100.0	69.3	30.7	11.5	8.7	2.8	24.7	16.9	7.8	38.3	25.3	13.0	19.6	14.6	4.9	6.0	3.8	2.2
읍부	2,302	1,574	728	334	256	78	627	417	210	787	517	270	432	310	122	122	74	48
면부	8,918	6,201	2,717	958	724	234	2,139	1,474	665	3,511	2,320	1,191	1,763	1,331	432	547	352	195
부산	29	13	16	2	2	-	8	1	7	10	5	5	8	5	3	1	-	1
대구	80	51	29	9	6	3	21	15	6	30	18	12	15	9	6	5	3	2
인천	89	63	26	8	7	1	22	16	6	28	18	10	28	20	8	3	2	1
울산	55	40	15	9	8	1	9	6	3	22	16	6	13	10	3	2	-	2
세종	93	61	32	12	6	6	25	16	9	35	26	9	13	7	6	8	6	2
경기	1,027	713	314	136	108	28	234	151	83	374	251	123	216	151	65	67	52	15
강원	972	649	323	85	56	29	235	160	75	408	266	142	194	137	57	50	30	20
충북	918	629	289	73	60	13	210	138	72	409	262	147	185	144	41	41	25	16
충남	1,214	856	358	127	100	27	278	185	93	460	301	159	274	218	56	75	52	23
전북	1,238	827	411	177	127	50	333	226	107	442	280	162	203	144	59	83	50	33
	100.0	66.8	33.2	14.3	10.3	4.0	26.9	18.3	8.6	35.7	22.6	13.1	16.4	11.6	4.8	6.7	4.0	2.7
전남	1,733	1,190	543	242	186	56	459	311	148	601	398	203	323	234	89	108	61	47
경북	2,080	1,488	592	197	154	43	517	378	139	839	562	277	389	302	87	138	92	46
경남	1,434	1,030	404	155	120	35	337	236	101	570	392	178	294	233	61	78	49	29
제주	258	165	93	60	40	20	78	52	26	70	42	28	40	27	13	10	4	6

자료 :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2년 귀촌가구는 15,788가구(27,665명)로 시도별로는 경기가 6,6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북, 강원, 경북이 1,000가구를 넘었으며 수도권에 인접하고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귀촌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촌 가구주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가 11,192명으로 70.9%, 여자가 4,596명으로 29.1%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50대가 4,001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369명(21.3%), 40대 3,302명(20.9%), 60대 3,007명(19.0%), 70대이상이 2,109명(13.4%)으로 나타났다.

전북 귀촌가구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8.5%, 여자가 31.5%로 전국 평균보다 여자 귀촌인의 비율이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68명(27.1%)으로 가장 많고, 40대 233명(23.5%), 30대 211명(21.3%)으로 전국에 비해 50대 이하의 비율이 4.3%p나 높게 나타났다.

〈표 2-10〉 귀촌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단위 : 가구, 명)

구분	총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15,788	11,192	4,596	3,369	2,313	1,056	3,302	2,330	972	4,001	2,815	1,186	3,007	2,259	748	2,109	1,475	634
	100.0	70.9	29.1	21.3	14.7	6.7	20.9	14.8	6.2	25.3	17.8	7.5	19.0	14.3	4.7	13.4	9.3	4.0
대구	2	2	-	-	-	-	2	2	-	-	-	-	-	-	-	-	-	-
인천	13	11	2	1	-	1	6	5	1	1	1	-	3	3	-	2	2	-
대전	9	8	1	-	-	-	5	5	-	2	1	1	1	1	-	1	1	-
울산	33	27	6	4	4	-	1	-	1	15	11	4	9	8	1	4	4	-
세종	5	5	-	-	-	-	-	-	-	2	2	-	1	1	-	2	2	-
경기	6,644	4,832	1,812	1,579	1,075	504	1,356	979	377	1,520	1,115	405	1,155	886	269	1,034	777	257
강원	2,786	1,834	952	507	336	171	607	400	207	764	486	278	556	382	174	352	230	122
충북	2,897	2,065	832	742	539	203	601	432	169	813	575	238	462	350	112	279	169	110
충남	319	256	63	17	12	5	43	32	11	111	89	22	103	84	19	45	39	6
전북	990	678	312	211	139	72	233	155	78	268	186	82	170	128	42	108	70	38
	100.0	68.5	31.5	21.3	14.0	7.3	23.5	15.7	7.9	27.1	18.8	8.3	17.2	12.9	4.2	10.9	7.1	3.8
전남	313	221	92	33	25	8	29	21	8	19	13	6	148	106	42	84	56	28
경북	1,015	687	328	160	95	65	219	155	64	269	182	87	232	173	59	135	82	53
경남	687	509	178	91	71	20	171	123	48	200	140	60	163	133	30	62	42	20
제주	75	57	18	24	17	7	29	21	8	17	14	3	4	4	-	1	1	-

자료 :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 전북의 귀농 · 귀촌 현황

전북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로 농촌사회의 신규 구성원 확보를 위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귀농·귀촌 가구가 많았고, 200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누적 귀농·귀촌 가구는 경북,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전북은 2001년 127가구에서 증감의 변화를 보이다가 2011년 1,000가구를 넘었고, 2012년 상반기에만 1,380가구가 전북도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으로의 귀농·귀촌 인구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설해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데다 농가주택 수리비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추진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전북이 전국 35개소 중 최대인 8개 시·군(완주·장수·순창·남원·진안·무주·임실·고창)이 선정된 것도 귀농·귀촌 인구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 2-11〉 전북 연도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전국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전북	5,82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1,380
전국대비	15.0	14.4	11.7	16.4	12.7	5.9	14.3	19.6	17.4	21.6	15.0	11.9	15.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4〉 연도별 귀농 · 귀촌 추이

(단위 : 가구)

도내 지역별로 귀농·귀촌 가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12년 도내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총 2,553가구로 이중 귀농은 61.1%, 귀촌은 39.9%를 차지하였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창군이 787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김제(433가구), 남원(247가구), 정읍(224가구), 순창(19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고창군과 김제시에 많은 인구가 이주한 것은 농지가 저렴하고 농지면적이 넓어 농업 여건이 좋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원생활 여건이 좋고 도시 접근성이 좋은 남원시와 정읍시 등에는 귀촌인구의 유입이 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 전북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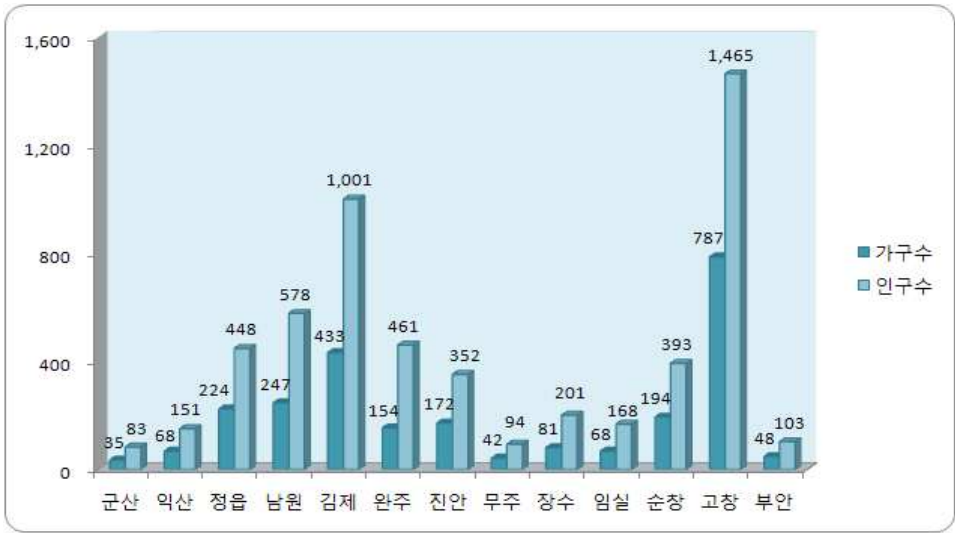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가구	수	2,553	-	35	68	224	247	433	154	172	42	81	68	194	787	48
	비율	100.0	-	1.4	2.6	8.8	9.7	17.0	6.0	6.7	1.6	3.2	2.7	7.6	30.8	1.9
인구	수	5,498	-	83	151	448	578	1,001	461	352	94	201	168	393	1,465	103
	비율	100.0	-	1.5	2.7	8.1	10.5	18.2	8.4	6.4	1.7	3.7	3.1	7.2	26.6	1.9

자료 : 전라북도, 2012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5〉 전북지역별 귀농 · 귀촌 현황(2012)

(단위 : 가구, 명)



연도별로 보면 전북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2012년 귀농·귀촌 인구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전원생활 등을 통한 인생 2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데다 전북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등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달라진 시각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3〉 전북 연도별 · 지역별 귀농 · 귀촌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계	6,146	467	385	883	611	1,247	2,553
전주	5(0.1)	–	1	3	–	1	–
군산	251(4.1)	1	4	169	14	28	35
익산	143(2.3)	16	14	17	10	18	68
정읍	508(8.3)	33	26	52	83	90	224
남원	508(8.3)	10	17	45	29	160	247
김제	838(13.6)	69	72	157	31	76	433
완주	382(6.2)	1	10	70	59	88	154
진안	468(7.6)	44	47	70	57	78	172
무주	162(2.6)	32	22	22	16	28	42
장수	311(5.1)	130	28	22	17	33	81
임실	192(3.1)	2	15	10	39	58	68
순창	499(8.1)	44	48	45	103	65	194
고창	1,601(26.0)	56	52	106	106	494	787
부안	278(4.5)	29	29	95	47	30	48

자료 : 전라북도, 2012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연령별로는 50대의 귀농·귀촌 가구가 29.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5%를 차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며, 30대의 귀농·귀촌도 16.2%를 차지하였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이 가능한 50대 이하의 비중이 77.0% 수준으로 기준 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전국(2012년 상반기 기준, 74.8%)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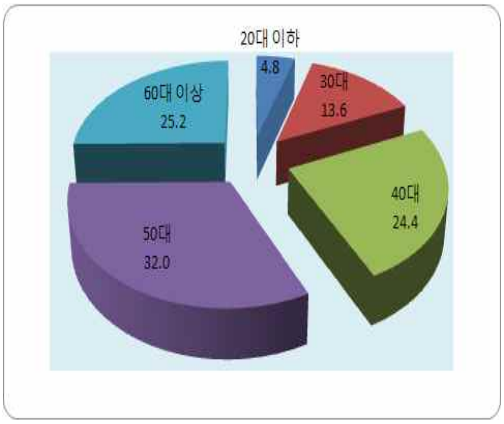
〈표 2-14〉 전북 연령별 귀농 · 귀촌 현황(2012)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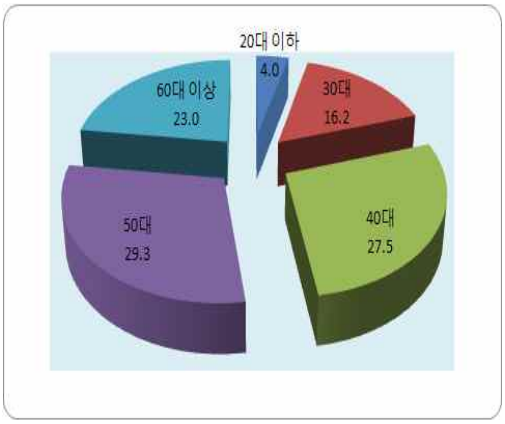
구분	계	20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가구	2,553	102	414	702	749	413	173
비율	100.0	4.0	16.2	27.5	29.3	16.2	6.8

자료 : 전라북도, 2012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6〉 전국 귀농 · 귀촌 연령 구성(2012.6)



〈그림 2-7〉 전북 귀농 · 귀촌 연령 구성(2012)



전북지역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 후 영농종사 분야는 전국과 달리 벼와 배추 등의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분야가 43.2%로 가장 많았고, 귀촌 등 기타(41.3%), 원예분야(7.5%), 과수분야(4.7%), 축산분야(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은 절반 가까이(46.4%)가 귀촌 등 기타 분야에 종사하고 경종분야에 35% 수준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북은 경종분야와 기타 분야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종 분야에서 전국보다 약7%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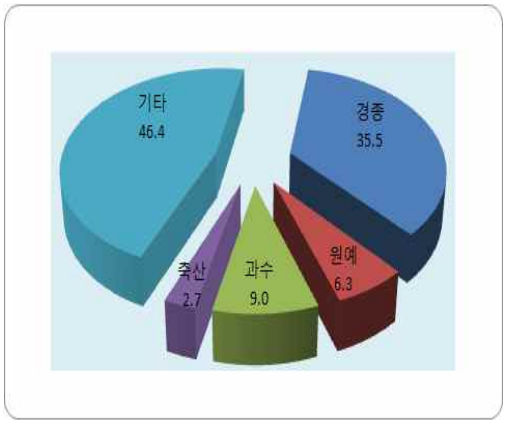
〈표 2-15〉 전북 귀농 · 귀촌 가구 영농종사 현황(2012)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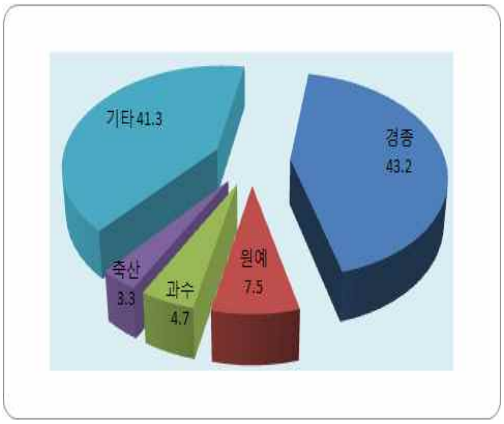
구분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귀촌 등 기타
인구	2,553	1,104	192	119	84	1,054
비율	100.0	43.2	7.5	4.7	3.3	41.3

자료 : 전라북도, 2012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그림 2-8〉 전국 귀농자 주 작목 현황(2012.6)



〈그림 2-9〉 전북 귀농자 주 작목 현황(2012)



한편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2013년 상반기에 수도권 귀농학교에 참가한 교육생 24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특징과 귀농 동기, 귀농·귀촌지로 전라북도를 선택한 이유, 귀농시 작물, 자산의 규모, 정책의 수요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교육생들의 현 거주지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 52.8% 그리고 전북이 13.8%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고향을 보면 전북 출신이 38.3%, 전남이 16.1%로 귀농·귀촌지를 선택할 때 고향 중심이거나 고향과 가까운 근거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교육생 현 거주지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무응답
명	247	74	81	18	5	12	2	34	8	2	11
%	100.0	30.0	32.8	7.3	2.0	4.9	0.8	13.8	3.2	0.8	4.5

〈표 2-17〉 교육생 고향현황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무응답
명	248	34	10	10	3	3	3	4	6	3	9	95	40	6	3	1	18
%	100.0	13.7	4.0	4.0	1.2	1.2	1.2	1.6	2.4	1.2	3.6	38.3	16.1	2.4	1.2	0.4	7.3

연령은 50대가 50%를 넘어 베이비붐 세대가 귀농·귀촌의 주요 세력임이 드러났다. 교육생의 성별은 남성이 75%, 여성이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생의 직업은 자영업이 17.9%, 회사원이 16.3%의 순이었다.

〈표 2-18〉 교육생 연령

구분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명	248	0	0	18	53	124	38	4	11
%	100.0	0.0	0.0	7.3	21.4	50.0	15.3	1.6	4.4

〈표 2-19〉 교육생 성별

구분	전체	남	여	무응답
명	247	184	63	0
%	100.0	74.5	25.5	0.0

〈표 2-20〉 교육생 직업현황

구분	전체	회사원	자영업	주부	공무원	건설	서비스	농업/농촌	예술	교사	기타	무직	무응답
명	251	41	45	37	4	12	20	5	2	6	18	24	37
%	100.0	16.3	17.9	14.7	1.6	4.8	8.0	2.0	0.8	2.4	7.2	9.6	14.7

교육생들이 귀농하고 싶은 지역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40%를 차지했고 농업 등 소득창출이 용이한 곳(20.1%), 고향이나 친척이 사는 등의 연고지를 선호했다. 이와 연관하여 전라북도를 귀농지로 선택한 이유도 자연환경이 좋은 곳과 고향이나 친척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귀농·귀촌을 고려한 근본적 동기는 새로운 삶에 대한 추구, 건강을 위해서, 농촌생활이 좋아서,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등 귀농학교 교육생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귀농하고 싶은 곳(복수응답)

구분	명	%
전체	274	100.0
전에 살던 도시에서 가까운 곳	16	5.8
직장, 학교로의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곳	3	1.1
고향이나 친척이 사는 등 연고지	48	17.5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이 살고 있는 곳	8	2.9
농업 등 소득창출이 용이한 곳	55	20.1
자연환경이 좋은 곳	110	40.1
생활환경이 편리한 곳	7	2.6
장래투자 가치가 있는 곳	11	4.0
기타	16	5.8

〈표 2-22〉 전라북도를 귀농 · 귀촌지로 결정한 이유(복수응답)

구분	명	%
전체	240	100.0
전에 살던 도시에서 가까운 곳	12	5.0
직장, 학교로의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곳	2	0.8
고향이나 친척이 사는 등 연고지	45	18.8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이 살고 있는 곳	8	3.3
농업 등 소득창출이 용이한 곳	30	12.5
자연환경이 좋은 곳	93	38.8
생활환경이 편리한 곳	14	5.8
장래투자 가치가 있는 곳	13	5.4
기타	23	9.6

〈표 2-23〉 귀농 · 귀촌을 고려하는 근본적 이유(복수응답)

구분	명	%
전체	432	100.0
농촌생활이 좋아서	67	15.5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39	9.0
부모의 영농 승계를 위해서	3	0.7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78	18.1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66	15.3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56	13.0
새로운 삶을 위해	107	24.8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7	1.6
기타	9	2.1

한편 귀농 결정시 가족간의 합의과정에서 47%가 어려움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24.1%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귀농 관련 정보를 취하는 경로를 보면 기관의 홈페이지와 동호회를 통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2-24〉 귀농(귀촌) 결정시 가족 간의 합의과정

구분	전체	전혀 어려움 없음	어려움 없는 편	보통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	무응답
명	211	38	59	44	39	12	19
%	100.0	18.0	28.0	20.9	18.5	5.7	9.0

〈표 2-25〉 귀농 관련 정보 제공 경로

구분	명	%
전체	275	100.0
기관(관공서 등) 홈페이지	109	39.6
귀농 관련 (인터넷)동호회	97	35.3
지인(귀농자 등)을 통해	34	12.4
지역(연고지/귀농예정지 등) 주민들로부터	10	3.6
기타	14	5.1
무응답	11	4.0

〈표 2-26〉 귀농 · 귀촌 이주(준비)비용 사용처

구분	전체	주택임대 및 신축	농지임대 및 구입	농산물 가공시설	기타	무응답
명	245	80	114	16	17	21
%	100.0	32.3	46.0	6.5	6.9	8.5

〈표 2-27〉 귀농시 참여 원하는 사업

구분	명	%
전체	260	100.0
벼농사	12	4.6
과수(사과, 배, 복숭아 등)	47	18.1
채소	26	10.0
일반 밭작물(고구마 등)	33	12.7
특용작물(인삼, 깨, 차, 담배 등)	19	7.3
화훼	3	1.2
축산(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6	2.3
지역특화사업(생산/가공/유통 등)	43	16.5
위탁경영자/관리자	1	0.4
농촌관광 등 지역개발사업	18	6.9
기타(무응답)	52	20.0

귀농·귀촌 관련 이주비용의 사용처는 주로 농지 임대 및 구입이 4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택 임대 및 신축이 32.3%로 나타났다. 귀농시 참여를 원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과 일반 밭 작물과 채소 등으로 주로 경종 분야를 택하고 있었다.

귀농학교 교육생들이 원하는 지원정책은 토지 및 택지 공급 방안 마련이 32.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농촌정착 프로그램 제공,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의료 및 교통 서비스 개선안 등의 순위를 표시하였다. 더불어 귀농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은 농가와 농장체험 프로그램, 귀농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으로 답하였다.

〈표 2-28〉 정부나 지자체의 적합한 지원방법(복수응답)

구분	명	%
전체	407	100.0
정보 · 통신제공시스템 마련	21	5.2
토지 및 택지공급 방안 마련	133	32.7
의료 및 교통서비스 개선	30	7.4
지역 환경보존 유도	19	4.7
농촌 정주추진 조직 구성	20	4.9
소득 증대방안 지원	63	15.5
농촌정착 프로그램 제공	102	25.1
기타	19	4.7

〈표 2-29〉 귀농 준비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명	%
전체	276	100.0
정기적인 귀농박람회 개최	10	3.6
농가 · 농장체험프로그램 제공	101	36.6
귀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92	33.3
농지구입 정보 제공	43	15.6
기타	20	7.2
무응답	10	3.6

전반적으로 귀농학교의 교육생들은 귀농준비 단계로 귀농학교를 선택하였기에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이들이 요구하는 지원정책이 뚜렷이 나타났고, 귀농·귀촌자가 귀농지를 선택할 때 연고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 것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50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호가 귀농교육생의 연령대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귀농 · 귀촌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귀농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9.3%, 여자가 30.7%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가 농지원부에 등록된 사람을 조사한 수치임을 감안해 볼 때, 귀농·귀촌 여성의 숫자는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농·귀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성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 가운데 여성의 참여나 수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곧 기존의 귀농·귀촌 대책이 남성 위주의 정책으로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5]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 속에 조기퇴직이나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농촌에는 새로운 인력 영입을 위해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정착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중앙정부의 귀농 · 귀촌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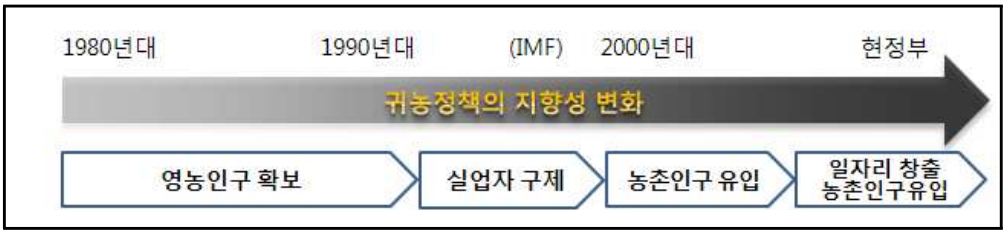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귀농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의 귀농 촉진 운동이 확대되어 가는 움직임 속에 97년 외환위기 직후 귀농인구의 증가는 정부차원의 귀농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귀농정책은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귀농인구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활용되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귀농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

5) 2013년 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부처 명칭 변경

이에 2009년 4월, 당시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귀농인 주거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영농정착자금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한 인구급증 세대인 50대 및 40대 후반 세대가 본격 퇴직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농촌을 성장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민 일자리 제공 대책으로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2-10〉 중앙정부의 귀농정책의 지향성 변화



자료: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손상락,2012)

농림축산식품부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을 큰 폭으로 반영하였다. <표 2-30>의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예산을 보면 2012년 639억원에서 2013년 812억원으로 28%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 내역별 사업을 보면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과 함께 농업이차보전사업인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등에 있어 전년도 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과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융자 지원을 알선해 주는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예산이 7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급증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 총 35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7개 시군에

비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서, 선정된 시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체험 지원, 빈집 정보 및 창업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교육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표 2-30〉 귀농 · 귀촌 활성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2013)

구분	2012년	2013년(안)	주요 내용	비고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600억원 (농업 500, 어업 100)	700억원 (농업 600, 어업 100)	· 최대 2.4억원 융자지원 (농어업기반 2억원, 주택 4천만원) · 연리 3%,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융자
귀농창업 아카데미 지원사업	-	50억원 (지자체경상45, 민간경상5)	· 권역별 지역특화 창업지원 (국고 70%, 지자체 30) · 귀농 · 귀촌 창업박람회	보조
맞춤형 귀농 · 귀촌 교육	13.1억원	21.1억원	· 3주~3개월 과정 · 교육비 50~80% 국고지원	보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26억원(27개 시·군)	40.8억원 (40개 시 · 군, 지자체경상40, 민간경상0.8)	· 시군당 3년간 6억원 (국고 50%, 지자체 50)	보조
계	639억원	812억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보도자료

정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에는 농촌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의 주택 마련·창업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정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서비스 일괄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청 내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연결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귀농·귀촌 매뉴얼과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및 농가체험 프로그램 등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지역과 작목 등 상담·교육과 귀농인의 집 체험기회 등 맞춤형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농실습과 농산업인턴 제도 지원, 주택 및 농지 알선, 창업자금과 컨설팅 지원 등 창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1> 참고).

〈그림 2-11〉 귀농 · 귀촌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2013)

자료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아래의 <표 2-31>은 단계별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정리한 표이다. 1단계는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귀농·귀촌 관심단계로서 정부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페스티벌 개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통해 준비부터 실행까지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단계는 본격적인 귀농·귀촌 실행을 위해 품목기술, 주거, 농업 창업 등 실질 지원정책이 필요한 단계로 귀농·귀촌 교육과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신축자금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귀농·귀촌 실행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정착단계인 3단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정부에서는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에서부터 다양한 세제혜택까지 정착에 필요한 현장중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31〉 귀농 · 귀촌 단계별 중앙정부 지원정책(2013)

구분		지원내용		대상(자격)
1단계 귀농 · 귀촌 관심단계	정보제공 및 상담 (농진청)	• 귀농 · 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 On-Off Line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방문)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교육안내, 농지, 빈집정보, 작목 및 정착지 선택, 자금 지원 등 종합 상담 – 157개 시군별 상담센터와 연계(상담전화:1544-8572)		예비 귀농 · 귀촌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부)	• 귀농 · 귀촌 페스티벌 – '13년도 10월 하순, SETEC(서울무역전시장) – 정부, 지자체 등 귀농 귀촌 종합정보 제공 체험의 장 마련 종합상담 및 1:1 멘토링 등		예비 귀농 · 귀촌인 시 · 군
		• 귀농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80억원, 시군) – 권역별 지역특화 창업지원, 귀농 · 귀촌 종합교육단지 • 귀농 · 귀촌 창업박람회(5억, 각시군)		농촌 유치지원 (농식품부)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 – 시군당 3년간 5~6억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시군공모) – 상담, 교육, 귀농체험소개, 빈집정보제공, 융자금알선 – '13년도 : 36억원/각 시 · 군 – 의향, 준비, 실행, 정착단계별 지원		
2단계 귀농 · 귀촌 실행단계	귀농 · 귀촌 교육	농식품부	• 교육기관:21개기관, 29개과정(1600명, '12년기준) – 대학, 선도농가, 민간단체 등, 3주~3개월 과정 – 교육장소 : 수도권(11개), 전국(18개)	예비 귀농 · 귀촌인 (교육기관별 모집, 심사)
		농진청	• 예비 귀농 · 귀촌인 공무원, 군인, 새터민 등 대상 – 교육기관:농촌진흥청('13년도 400명)	
		서울시	• 창업과정교육(40명, '13년도) • 전원생활교육과정(8회/400명, '13년도) • 티칭-팜 교육과정(2회 100명, 장기농사체험)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신축자금 (농식품부)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농기계 구입 및 시설지원(최대 2억원 융자) – 귀농후 3년 이내 농지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퇴직2년 예정자도 대상자 선정가능 • 주택구입 및 신축(최대 4천만원 융자, 예비 귀농 · 귀촌인도 가능) –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시 취득세 면제 • 대출절차 및 사업규모 – 100시간 교육 이수 시 군에 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3년도 융자규모 700억원)		귀농 · 귀촌인 (도시 1년이상 거주 후, 귀농 5년차이내)
3단계 귀농 · 귀촌 정착단계	귀농 · 귀촌 교육 (농진청)	• 귀농 · 귀촌자(5년이내) 및 희망자 – 60개 시군, 8개 도원: 4000명('13년 예산 10억원) – 신청 : 시 군 농업기술센터, 각 도 농업기술원		귀농 · 귀촌인 (교육기관별 모집, 심사)
		인턴지원	• 선도 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인턴훈련 6개월간 임금의 1/2 지원(80만원 한도, 국고 100%) – 신청 : 천안연암대학교 – '13년도: 250명(12억원)	미취업자, 농고 · 농대 졸업자 등 인턴 희망자 (만15세~44세)
		현장실습 지원	• 귀농인 영농기술습득 및 안정적 연착륙지원 – 실습비지원 : 5개월간 임금 및 멘토수당 지원(월120만원) – 실습생 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멘토수당) –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도시민중 귀농자 저연령자 우선 – '13년도 : 560명	귀농인
	전원마을 조성 (농식품부)	• 젊은 귀농인(22~55세)를 유치하여 맞춤형 영농지원 [신규(전원)마을] 총 131지구 4,348세대		귀농 · 귀촌인
	지자체 지원 (각 지자체)	• 기술교육, 이주비, 주택수리비, 창업자금 등 ('12년도 135억원(총 사업비)) 예시) 전북 농가주택수리비 지원(가구당 5백만원)		

자료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2. 전라북도의 귀농 · 귀촌 정책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사업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으로 특화된 시·군을 홍보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각종 정주관련 지원책과 특화된 영농기술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 및 정착자금과 교육·체험 지원, 관계형성 지원, 정보제공, 기타 정착사업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창업자금이나 주택수리비 등 정착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홍보설명회를 가지거나 초청프로그램, 지역안내, 빈집정보와 같은 정보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32〉 귀농 · 귀촌 관련 주요 광역자치단체 지원정책(2012)

구분		사업명(실시지역-금액(만원))
정착자금 지원	창업자금 보조	· 귀농 정착지원사업(경북 · 경남-500)
	창업자금 융자	· 농어촌진흥기금 귀농인 융자(전남-1억원 이내)
	주택수리 보조	· 주택수리비 보조(전남-500)
교육 · 체험 지원	교육비 보조	· 광주전남귀농학교 귀농철학교육비 보조(전남-35)
	귀농인턴	· 귀농인턴 지원사업(경북) ·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경남)
	영농교육	· 경북농민사관학교 귀농과정(경북) · 과학영농귀농학교 도비 운영(경남)
관계형성 지원	간담회 · 포럼	· 귀농 · 귀촌포럼(경북) · 시 · 군 귀농 · 귀촌자생단체와의 간담회(경북)
	단합대회	· 귀농 · 귀촌 한마당 잔치(경북)
	멘토링	· 귀농인 멘토 및 전담직원제(전남)
정보제공	홍보설명회	· 찾아가는 귀농설명회(전남) · 서울마을조성 홍보 및 설명회, 귀농박람회(경남)
	초청프로그램	· 귀농학교 교육생 초청 농사체험(전남)
	지역안내	· '귀농하기 좋은 마을' 선정(경남)
	빈집정보	· 웰빙 전남 홈페이지 내 주택 · 토지정보(전남)
	홈페이지	· 다음카페 운영(경남) · 웰빙 전남 홈페이지 운영(전남)
기타	사회적 일자리	· 귀농 · 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전북) · 귀농 · 귀촌 창업 프로젝트 공모(전북)
	지원센터 운영	· 귀농 · 귀촌종합지원센터(전북) · 귀농 · 귀촌상담센터 서울사무소(전남)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재정리.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들 가운데는 정착자금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의 형태 외에 '보조'의 형태로 영농창업자금, 농지구입, 농자재 구입, 빈집 수리 및 이사비, 자녀학자금, 문화예술 창작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육아 지원, 자녀 교육비 보조, 귀농인 성공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33〉 귀농 · 귀촌 관련 주요 기초자치단체(25개 시 · 군 중심) 지원정책(2012)

구분		사업명(실시지역-금액(만원))
정착자금 지원	영농창업자금 보조	• 창업지원(양구-500 상주-1천 장흥-3천 장성-2천 강진-2천 해남-2천 곡성-1.4천 함양-500 하동-1천)
	정착자금 융자	• 정착지원금(영주-400 완도-300 창녕-500 하동-100) • 영농지원금(고창-1천이내), 정착장려금(봉화-480)
	농지구입 지원	• 융자(단양-5천 고창-1억원이내), 보조(완주-250)
	농자재 구입 보조	• 영농자재구입비(창녕-30)
	빈집(주택) 수리비 보조	• 서천 · 김천 · 상주 · 영주 · 장수 · 고창 · 완주 · 완도 · 장흥 · 장성 · 강진 · 해남 · 창녕 · 하동(500), 봉화 · 거창 · 함양(300)
	주택개량 융자	• 단양(신축 4천/수리 500), 창녕(5천)
	이사비 보조	• 봉화(100), 완주(50)
	자녀학자금 보조	• 영주(100), 장흥(30)
	의료비 보조	• 영주(10)
	문화예술 창작지원금 보조	• 하동(200)
교육 · 체험 지원	교육비 보조	• 봉화 · 완주 · 장흥 · 창녕(30)
	귀농인턴제	• 양구 · 금산 · 장수 · 장성 · 해남 · 창녕 · 하동
	귀농교육	• 화천 · 양양 · 금산 · 상주 · 영주 · 봉화 · 고창 · 진안 · 완도 · 함양 · 하동
	기타교육	• 집짓기학교(상주 · 장흥) • 귀농 · 귀촌자녀 지역이해프로그램(단양)
	지역리더교육	• 장수 · 완주 · 진안 · 완도
	컨설팅	• 서천
	견학 지원	• 우수 귀농 · 귀촌자 선진지 탐방 지원(장수)
	체험(실습) 농장	• 체험농장(금산 · 완도 · 장성), 단기체험(양구 · 봉화 · 완도)
	귀농인의 집	• 금산 · 서천 · 상주 · 봉화 · 장수 · 고창 · 진안 · 완주 · 완도 · 장성 · 거창 · 하동
관계형성 지원	집들이비 보조	• 영주 · 완주 · 완도(30), 진안 · 장흥 장평면(20)
	귀농인 모임 지원	• 완주 · 진안 · 장흥 · 함양
	간담회 · 포럼	• 금산 · 완주 · 장흥 · 하동
	화합행사	• 금산 · 서천 · 장수 · 진안 · 완도
	멘토링	• 멘토제(금산 · 장수 · 완주 · 장흥), 간사제(봉화 · 진안)
	기타	• 어촌계 가입 지원(완도)
정보제공	홍보설명회	• 대기업 및 관공서 협약(금산), 설명회(장수)
	초청프로그램	• 양구 · 양양 · 금산 · 서천 · 봉화 · 장수 · 고창 · 완주 · 완도 · 장성 · 함양
	지역안내	• 귀농인생활안내서(영동군 상촌면)
	빈집정보 제공	• 서천 · 봉화 · 장수 · 강진 · 곡성
	출향인 대상 홍보	• 장수 · 진안
	홈페이지	• 양양 · 금산 · 서천 · 단양 · 상주 · 봉화 · 장수 · 고창 · 진안 · 완주 · 장성 · 강진 · 곡성 · 거창 · 창녕
기타	사회적 일자리	• 금산 · 장수 · 진안 · 완주
	공동사업 지원	• 완주
	소득모델 개발 보급	• 양양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재정리.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전국의 107개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道) 가운데 도단위의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을 비롯하여 모두 8개 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이다. 전북은 지난해 6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북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표 2-34〉 귀농 · 귀촌 지원조례 제정 현황(2013)

시도(제정건수)	시 · 군(제정년도)
계(107)	
인천(1)	옹진('09)
경기(1)	양평('10)
강원(11)	강원도('12) 양구('08) 영월('09) 강릉('09) 원주('11) 홍천('11) 양양('11) 화천('12) 춘천('12) 평창('12) 철원('13)
충북(11)	충청북도('10) 충주('09) 제천('09) 옥천('10) 음성('10) 단양('10) 보은('11) 영동('12) 진천('12) 청원('12) 괴산('12)
충남(15)	충청남도('09) 부여('07) 금산('08) 천안('08) 공주('09) 보령('09) 서산('09) 서천('09) 청양('09) 홍성('09) 예산('09) 아산('10) 논산('12) 당진('12) 태안('12)
전북(14)	전라북도('12) 순창('07) 고창('07) 장수('07) 정읍('08) 완주('08) 무주('08) 부안('08) 군산('09) 익산('09) 남원('09) 진안('10) 김제('11) 임실('11)
전남(21)	전라남도('12) 강진('07) 곡성('07) 화순('07) 나주('08) 해남('08) 영암('08) 무안('08) 담양('09) 고흥('09) 장흥('09) 장성('09) 완도('09) 신안('09) 보성('10) 함평('10) 영광('10) 진도('10) 광양('11) 구례('11) 순천('13)
경북(22)	경상북도('09) 영양('07) 영주('08) 문경('08) 청송('08) 봉화('08) 김천('09) 영천('09) 의성('09) 영덕('09) 고령('09) 성주('09) 예천('09) 울진('09) 상주('10) 군위('10) 청도('10) 칠곡('11) 경주('12) 경산('13) 포항('13) 안동('13)
경남(10)	경상남도('10) 함양('08) 합천('09) 하동('10) 창녕('11) 거창('11) 산청('11) 밀양('12) 함안('12) 남해('12)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10)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세 속에 농촌사회의 신규 구성원 확보로 농촌사회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35>의 전라북도 주요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주택자금 융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주거환경 마련과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융자지원 및 품목 교육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학생을 위한 임차버스 운행 등 자녀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표 2-35〉 전라북도 귀농 · 귀촌 지원정책

구분	지원사업	지원액	주요 내용	비고
농수산 식품부	·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 귀농인 주택구입 ·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 호당 2억원 이내 · 호당 4천만원 이내 · 시군당 2억원	· 융자지원사업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전북 6개소(전국27개소)	융자 보조
전라북도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 귀농 · 귀촌 종합센터 운영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 호당 5백만원 · 50백만원/1개소 · 50백만원/1개소	· 리모델링, 부엌 · 화장실 개량 등 · 상담 · 알선 · 정보교류 · 3기, 120명 운영	도비
시 · 군	· 귀농인 이사비 지원 · 교육 훈련비 · 영농기반 설치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영농정착금 지원	· 호당 50~100만원 · 1인 10~60만원 · 사업별 250~2,000만원 · 둘째자녀 120만원 · 최대 1,000만원	· 4개시군(정읍,남원,완주,순창) · 5개시군(남원,완주,무주,임실,부안) · 3개시군(완주,임실,고창) · 완주군 · 고창군	시군비
교육청	· 원거리 학생을 위한 임차버스 운행	· 360대 110억원	· 농산어촌학교 225개교	지방 교육세
타시도	·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 영농시설 자금 · 정착 지원금	· 호당 20만원/30호 · 호당 500만원/100호 · 호당 2,500만원	· 경북 · 경남 · 경북 · 경남 · 전남(강진,영암,장흥군)	

자료 :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return.com)

전라북도는 오는 2017년까지 3만호 귀농·귀촌 유치확대로 농촌활력화를 목표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사업에 부응하는 도 차원의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 3,500호, '14년 4,500호, '15년 6,000호, '16년 7,500호, '17년 8,500호로 단계적으로 유치목표를 세우고, 귀농·귀촌 홍보 및 농촌체험 추진, 귀농·귀촌 종합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귀농인 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작목 재배 지원 등을 중점 추진대책으로 하여 세부 추진계획들을 마련·수립하고 있다.

〈표 2-36〉 전라북도 귀농 · 귀촌 활성화 종합대책(2013)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목표</td><td>• 2017년까지 3만호 귀농 · 귀촌 유치확대로 농촌활력화
※ 유치목표 : ’ 13) 3,500호, ‘14) 4,500, ‘15) 6,000, ‘16) 7,500, ‘17) 8,500</td></tr>
<tr><td>추진배경</td><td>•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로 귀농 · 귀촌 농촌 정착 수요 증가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인력 감소
– 2012년 도내 귀농 · 귀촌 인구 : 2,249호/ 4,792명(2012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180% 증가)
※ 베이비붐 세대 (‘55~’ 63) 전후 태어난 712만명 은퇴 본격화</td></tr>
<tr><td>추진대책</td><td>• 귀농·귀촌 홍보 및 농촌체험 추진
– 귀농 · 귀촌 도내 정보 안내 및 수도권 홍보 추진
– 수도권 귀농학교 시군별 현장 투어 확대 운영
• 귀농·귀촌 종합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
– 귀농 · 귀촌 종합정보 D/B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귀농 · 귀촌 실태조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상담 및 정보제공
•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창업농가주택 구입,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 지원
– 정주 공간 확보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 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작목 재배 지원
– 귀농인 지역 특화품목 육성 지원 : ‘14년)200호 40억원
– 귀농인 실습지원,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td></tr>
<tr><td>투자계획</td><td>투자계획(2013~2017년)
(단위 : 억원,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계</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비고</th></tr>
<tr><td>계</td><td>481</td><td>100%</td><td>118.4</td><td>74.7</td><td>76.7</td><td>104.4</td><td>106.9</td><td></td></tr>
<tr><td>국비</td><td>199</td><td>41.4%</td><td>70.6</td><td>21.6</td><td>27.6</td><td>39.6</td><td>39.6</td><td></td></tr>
<tr><td>도비</td><td>56</td><td>11.6%</td><td>6.6</td><td>14.7</td><td>10.1</td><td>11.9</td><td>12.6</td><td></td></tr>
<tr><td>시군비</td><td>160</td><td>33.3%</td><td>41.0</td><td>21.4</td><td>26.8</td><td>34.6</td><td>36.4</td><td></td></tr>
<tr><td>자담</td><td>66</td><td>13.7%</td><td>0.2</td><td>17.0</td><td>12.2</td><td>18.3</td><td>18.3</td><td></td></tr>
</table></td></tr>
</table>

자료 : 전라북도, 2013,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두어 귀농·귀촌 지원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권역별로 묶어 살펴보면, 먼저 군산·익산·김제·완주의 경우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귀농창업 및 농가주택 구입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등의 사업은 정부 및 도 추진사업으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자체사업으로써 군산은 소득금고융자사업으로 1억원의 한도 내에 농업창업금 및 농지구입, 주택신축 및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요 농업관련 사업 선정시 일정요건을 갖춘 귀농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군산 지역의 토지 가격이 타 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농지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중·소형 농기계 우선지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 대상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귀농초기 안정적 소득

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은 시비로 귀농·귀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귀농인 생산기반사업지원으로 소규모 시설이나 소농기계 구입 등에 세대당 1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김제는 소형농기계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완주의 경우 군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이사비, 농지임차료, 출산장려금, 자녀 학자금,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Two-Job 지원사업, 팜투어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 및 정책실행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표 2-37〉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군산 · 익산 · 김제 · 완주)

구분	지원사업 및 내용
군산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4호) : 농가주택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 부엌 · 화장실 개량 등 수리비 지원(사업비 2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4,000)) • 정부융자사업 지원 : 농업 창업자금 호당 200백만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호당 40백만원 한도(연리3%,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귀농 · 귀촌 현장실습지원사업(5명) : 선도농가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 월120만원 한도내 최대 5개월까지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선도농가 80만, 실습생 40만) (사업비 30,000천원(국비 15,000, 시비 15,000)) •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지원 : 980억원(연리2%,) - 시설자금 : 200백만원(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100백만원(2년 일시상환)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 수도권 지역 귀농 희망자에게 이론교육과 주말 현장학습 교육(사업비 10,200천원(도비 6,000 시비 3,000 자담 1,200)) **• 소득금고융자사업지원 : 1억원(연리3%, 1년거치 5~10년 균등분할상환)** **- 농업 창업금 호당 20백만원, 농지구입 호당 60백만원, 주택신축 40백만원, 주택수리 10백만원 한도** **• 주요 농업관련 사업 선정시 귀농인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농기계 지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익산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9호) : 농가주택 가구당 5백만원 한도(사업비 45,000천원(도비 30%, 시비 70%))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 귀농창업 200백만원, 주택자금 40백만원(융자 100%,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 귀농 · 귀촌 교육 :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및 전문기술교육(사업비 20,000천원) •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사업(10명) : 선도농가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선도농가 80만, 실습생 40만) (사업비 30,000천원(국비 15,000, 시비 15,000))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40명) : 수도권 지역 귀농 희망자에게 이론교육과 주말 현장학습 교육(사업비 12,100천원(도비 58%, 시비 29%, 자담 13%)) **• 귀농 · 귀촌 위원회 운영 : 귀농 · 귀촌 홍보, 박람회 참가, 위원회 수당 등(사업비 10백만원)** **• 귀농인 생산기반사업지원(20호) : 익산시에 거주하는 귀농인으로 세대구성원 2인 이상 소득작물재배에 필요한 자재, 시설물, 저장시설, 가공시설, 농기계, 축사시설 등 호당 15백만원 한도(사업비 150백만원)**
김제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2008.1.1 이후 전입한 귀농인, 귀농교육 이수 및 귀농지원협의회 가입한 자 85백만원 한도 지원(17동, 보조 5백만원/농가당) •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 농지 · 임야구입, 농수산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귀농인 창업자금으로 200백만원 한도 지원(융자 100%, 연리3%, 5년 거치 10년 상환) •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40백만원 한도 지원(융자 100%) **• 귀농인 소형농기계 반값지원(10가구) : 만 65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과 전문기술 및 교육자적 소양이 있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50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보조 2.5백만원/농가당)** **• 귀농인 시설하우스 반값지원(20동) : 만 65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과 전문기술 및 교육자적 소양이 있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132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보조 3.3백만원/농가당)**

구분	지원사업 및 내용
완주	• 주택 매입·수리·신축비 지원(20호) : 주택(빈집 포함)을 매입 또는 신축·수리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사업비 100백만원) • 농지 임차비·매입비 지원(20호) : 귀농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2년 이상 임차시 총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 농지매입비는 1,000㎡ 이상의 농지를 3년 이상 자경(축사신축 포함)할 목적으로 매입시 총 매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사업비 30백만원) • 귀농인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 비닐하우스 660㎡ 지원(사업비 16백만원/1동(보조60%, 자담40%)) • 이사비 지원(40호)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전입시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이사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사업비 20백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5명) : 귀농·귀촌인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출산 장려금 120만원을 3회에 거쳐 매달 40만원 지원(사업비 6백만원)** **• 자녀학자금 지원(10명) :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고교자녀를 둔 귀농·귀촌자에게 연 1회에 한하여 매년 50만원 학자금 지원(사업비 500만원)** **– 귀농·귀촌자의 자녀가 대학교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비 지원(50명)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농업기술센터 또는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시군 귀농학교)에서 귀농인이 정규과목 및 정규시간을 이수할 경우 30만원 한도의 범위안에서 1일 1만원의 보조금 지원, 최고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사업비 15백만원)** **• 귀농·귀촌인 Two-Job 지원 :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 1일 4시간 이하, 1시간 7천원 이내(사업비 30백만원, 6명 이내)** **• 타깃형 귀농·귀촌 팜투어 지원 : 완주군 귀농·귀촌 정책 소개,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지역활력사업장 견학 등 1박2일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40백만원, 8회)** **• 귀농·귀촌인 창업지원(2개소) : 귀농·귀촌인+지역주민이 최소 5명 이상 참여 및 귀농·귀촌인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수료자가 구성원에 1명 이상 포함하여 농업관련 창업시 창업비용 지원(40백만원)**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동 지원 : 귀농·귀촌자가 재능기부를 통해 농촌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진행시 운영비와 재료비 지원(사업비 20백만원, 10명 이내)**

자료 : 전라북도, 2013,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 각 시·군 귀농·귀촌 종합대책 자료.

<표 2-38>의 무주·진안·장수의 경우도 농가주택수리비나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자금 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현장실습교육 등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펼치고 있는 무주는 군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이사비용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진안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체재형 가족농원이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주공간 마련을 위해 송학골에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소득사업과 연계해 입주자의 조기정착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빈집·농지 정보제공,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소모임지원사업, 멘토링, 인턴사업,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표 2-38〉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무주 · 진안 · 장수)

구분	지원사업 및 내용
무주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5백만원 한도(보조 100%)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호당 최대 500만원 이내(군비 100%)/ 이사비용 증빙실비 지원** • **귀농 · 귀촌 박람회 참가 : 박람회 참가비 지원, 1회 500만원(사업비 500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 : 농업창업자금 최대 200백만원(농지구입, 농업시설물 설치, 영농자재구입 등), 주택구입 최대 40백만원(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 지원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 타 시 · 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도내 시군으로 귀농 · 귀촌의향이 있는 예비 귀농 · 귀촌 자를 대상으로 함(2013.5.10~5.12 2박3일간 4만원 자부담)
진안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16호) : 농가주택 가구당 5백만원 한도(사업비 80백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 : 귀농후 5년 이내인자, 1년이상 타 시도 · 시군에서 농업외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업창업 200백만원, 주택자금 40백만원 지원(융자 100%,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 지원 : 진안군 농어촌 지역에 귀농 · 귀촌을 목적으로 신규마을 조성(4가구 이상)** **– 진입로 및 안길포장, 상수도, 배수로, 가로등 등(1억원 한도)** •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 : 예비 귀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공간 및 영농교육의 장 제공** **– 체재시설 8동, 종합교육장 1동, 체험농장 등 제공** • 귀농인 현장실습(멘토링 인턴제) 지원 : 귀농인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 범위내에서 영농실습시 교육비 및 멘토수당 지급(매월 선도농가 40만, 귀농인 80만, 최대 5개월/월 20일 이상 출근시) • **귀농 · 귀촌 박람회 참가 : 박람회 참가비 지원, 1회 500만원(사업비 500만원)**
장수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운영 :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빈집 · 농지정보 DB구축, 귀농인 멘토링 운영, 귀농 매뉴얼 및 홍보지 발행(사업비 200백만원) – 귀농인 임시거주용 '귀농의집' 운영(5개소) :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머물며 귀농 준비공간 마련 – 장수 귀농학교 운영 : 주말반(3회, 1박2일), 기수당 20명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 수도권 거주자로 귀농 희망자 대상(35명)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15호) : 세대당 500만원 지원 • 귀농인 정착 교육 : 귀농인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및 전문기술교육(10회, 40명) •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 귀농인이 선도농장에서 최대 영농실습시 교육비 및 멘토수당 각각 지급(120만원/월, 최대 5개월(월 20일 이상 출근) • 귀농인 소득 모델 개발사업 : 최근 5년내 관내 귀농인 대상으로 귀농인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공모사업으로 진행 • 농업 창업 자금사업 : 농업창업자금 200백만원/호, 주택구입 40백만원/호 지원 • **학골지구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장수읍 송천리 일원(133,155㎡)에 정주기반조성, 주택 75호 신축 분양 중(입주대상 : 농업승계자, 도시 거주민, 관내 농업인 등)**

자료 : 전라북도, 2013,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 각 시·군 귀농·귀촌 종합대책 자료.

임실에서는 군 자체 사업비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소득사업지원 및 현장실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원예농업의 귀농인에는 시설하우스 소득사업보조를 통해 초기 정착과 소득안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내 최초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인들의 안정적 기반마련에 힘쓰고 있는 순창군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으로 이사비, 주택수리비, 소득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데이터 구축, 귀농·귀촌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입주자 주도형의 신규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을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2-39〉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임실 · 순창 · 남원)

구분	지원사업 및 내용
임실	•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세대당 20백만원 한도 지원(사업비 800백만원(보조400, 자부담400))** •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지원(15농가) : 세대당 5백만원 이내(사업비 107백만원(보조75, 자부담32)** • **현장 실습비 지원(20명) :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1일 5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실습, 가구당 월 50만원 6개월 자급, 300만원 한도, 사업비 60백만원(보조 100%))** • 정착금 보조 지원 : 2011.9.30 이후 가족과 함께 귀농 · 귀촌하여 3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200만원 한도 •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비 지원 : 창업자금 20백만원~200백만원, 주택구입 40백만원 한도 지원(융자 100%)
순창	• **귀농 · 귀촌 정착자금 지원 : 이사비 지원(120호, 1백만원 정액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60호, 호당 500만원), 소득사업비 지원(사업비의 50%, 최대 10백만원 한도 지원)** • **순창군 귀농 · 귀촌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04백만원, 군비100%/민간위탁금)**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 임시 거주지 마련 9개소(최대 6개월 거주 가능), 농업농촌 체험 지원(버스 1대당 60만원), 기존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융화를 위한 집들이비 지원(50만원)** • **영농 정착을 위한 기금지원 : 농지구입, 영농 소득사업 등 추진시 순창군 자체 기금 융자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1년 거치 2년 상환)** •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농업창업자금 최대 200백만원, 주택구입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
남원	• 이사비 지원 : 당해연도 타 시 · 군에서 남원으로 전입 이주한 귀농인 대상, 호당 1백만원 한도(보조 100%) • **신규마을 조성지원 : 남원시 농어촌지역에 귀농 · 귀촌을 목적으로 신규마을 조성** **– 3가구이상 :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식수관정, 전기, 통신** **– 5가구이상 : 조례에 의거 관정개발 및 상하수도 자재지원, 진입로 포장 등** **– 20가구이상 : 20,000㎡이상 토지가 확보된 지구에 '공모사업 신청공모에 선정' 되면 기반시설 조성 지원 (10억원 정도)** • 창업자금 지원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수리)등에 20백만원~200백만원 한도 지원 • 주택마련비 지원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40백만원 한도(융자 100%,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20호) : 2008.1.1 이후 정착한 귀농인, 귀농교육 이수 필수, 5백만원 한도(보조100%)**

자료 : 전라북도, 2013,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 각 시·군 귀농·귀촌 종합대책 자료.

지난해 도내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착지였던 고창은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기반조성,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군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영농 정착금 지원, Family 5563 정착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amily 5563 정착 프로그램은 폐교한 초등학교에 귀농인을 위한 이론과 실습 병행 학교를 운영, 귀농·귀촌 DB 및 전자상거래망 구축, 정착프로그램 도우미 지원, 문화동아리방 운영, 주민화합 프로그램 시행, 선도농가 팜스테이, 지역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부안에서는 영농안정 기금,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 여성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에서는 차별화된 시책으로써 귀농인 컨설팅 지원과 멘토링 운영, 귀농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0〉 전라북도 권역별 귀농 · 귀촌 지원 사업(2013)(고창 · 부안 · 정읍)

구분	지원사업 및 내용
고창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백만원 한도(보조 100%) •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 창업자금 200백만원, 주택구입 40백만원 한도 • 소규모 귀농 · 귀촌 마을 기반조성사업(3개소) : 소규모 공동체(5~10세대)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입 2년 미만 및 전입예정 귀농 · 귀촌 세대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백만원 지원 • 수도권 고창반 귀농 · 귀촌학교 교육(90명 모집(30명/1기, 3회/년, 2개월/1기), 사업비 55백만원) • 귀농인 집들이 사업 지원(40가구) : 기존 주민과 귀농 · 귀촌자 간 만남의 장 마련, 가구당 50만원 지원 **• 귀농인 영농 정착금 지원 : 고창군외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 가족과 함께 귀농한 만55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 지원, 3년간 분할지원(1년차 50%, 2년차 25%, 3년차 25%)** **• Family 5563 정착 프로그램 운영 : 교육장 조성, D/B구축 및 전자상거래망 구축, 정착프로그램 운영 , 교육운영, 교육운영 활성화지원, 동아리방 운영, 주민화합 프로그램, 집들이 지원**
부안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증빙 실비 지원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귀농인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 범위 내에서 영농실습시 교육비 및 멘토수당 각각 지급(귀농인 80만원/월, 최대 5개월(월 20일 이상 출근시) • 귀농인 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 농업창업자금 최대 200백만원/호, 주택구입 최대 40백만원/호 • 귀농인 영농안정 기금 지원 : 영농자재 및 묘목등 구입, 친환경 자재구입 등에 3천만원(개인)~5천만원(법인) 한도(융자100%, 연리 2%, 1년거치 1년일시상환) • 귀농인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비용을 감소하고, 농기계 필요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일손부족 해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등 40종 149대 지원
정읍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11호) : 귀농인의 노후 주택에 대한 지붕 · 부엌 · 화장실 등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55백만원(도비16.5 시비38.5))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 농업창업 200백만원, 주택구입 · 신축 40백만원 한도(융자 100%, 연리3%, 5년거치 10년 상환) • 귀농인 인턴(실습) 지원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자 월 보수의 50%(6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간 지원 **• 이사비 지원(10호) : 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의 이사비용 중 호당 50만원 한도 지원(보조 100%)** **• 귀농인 멘토링 운영 : 귀농초기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멘토와 멘티 상호간 방문 등을 통한 애로사항 상담과 조언, 영농기술 등 전수, 신규 귀농인과 선도농가 또는 선배귀농인 약정체결 멘토링비 지원** **• 귀농인 컨설팅 지원(3농가) : 만50세 미만인 자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정읍시로 이주자, 가구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비 지원(자부담 300만원)** **• 정읍시 귀농인 교육 : 상반기(3~6월)와 하반기(7~11월) 귀농 · 귀촌인의 농촌생활 조기정착을 위해 신규농업인 집합교육(사업비 25백만원(국비10, 시비15))**

자료 : 전라북도, 2013,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 각 시·군 귀농·귀촌 종합대책 자료.

3. 귀농 · 귀촌정책의 시사점과 한계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은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해지고 지원대상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단계별 정책지원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고, 귀농·귀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하여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업농촌종합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함께 전라북도는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단위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단계별 귀농·귀촌인 유치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귀농·귀촌 홍보 및 농촌체험 추진, 귀농·귀촌 종합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귀농인 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작목 재배 지원 등을 중점 추진대책으로 하여 세부 추진계획들을 마련·수립하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인과 가장 긴밀한 교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선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이사비용, 귀농교육비, 영농정착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 영농체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융자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현금 지원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주민과의 관계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진안에서는 귀촌인을 중심으로 마을박물관과 노인학교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2010년부터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체 지원형 농업과 농민장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에 부흥하면서 일선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2년에「전북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시군보다도 발빠르게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귀농·귀촌정책이 유치에 치우쳐 기존 정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정적이고 본 연구과제에 해당되는 귀농·귀촌 여성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전북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정책과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불어 현재 통계적으로 확보된 30% 이상의 여성귀농·귀촌인과 가구주를 따라 들어온 여성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 3 장

전북 귀농 · 귀촌 여성 생활경험과 정책요구

제 1 절 사례조사 개요
제 2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착경험
제 3 절 귀농 · 귀촌 여성에 관한 교육 · 활동 경험
제 4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책 수혜 경험과 요구 분석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3 장 전북 귀농·귀촌 여성 생활경험과 정책요구

제 1 절 사례조사 개요

1. 사례조사

본 연구는 전북지역 귀농·귀촌 여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여성의 특성별 사회참여 역량과 정책요구도를 분석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 여성을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지역별로 귀농·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착과정을 비롯한 생활 경험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현재 지원되는 지원정책의 수혜 경험도 알아보면서 이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심층면접 대상 선정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여성의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단순한 통계 조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귀농·귀촌 동기와 실제 정착의 어려움, 영농생활 및 귀촌 활동 등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현장 조사와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여성을 소개 받았다.

조사대상자는 지역별 분포와 귀농시기의 차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영농의 경험이나 사회활동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20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시기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기별로 다양했으며 귀농 1세대라 부를 수 있는 귀농운동본부 출신인 <사례9>부터 최근 2012년에 귀농·귀촌한 사례가 2개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9사례, 50대가 9사례로 주로 40, 50대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농·귀촌 유형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U턴형이 3사례였고 나머지는 연고가 없는 I형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영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례는 5사례였고 나머지는 귀촌의 형태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다.

〈표 3-1〉 귀농 · 귀촌 여성의 심층면접 사례

사례	지역	연령	학력	전 거주지	전 직업	남편 전 직업	귀농시기	거주가족	영농형태	현 직업
1	고창	58	중졸	인천	인쇄업	회사원	2006년	남편		장류사업 농촌 홈스테이
2	고창	52	고졸	인천	학원운영		2009년			장류사업
3	고창 (남편의고향)	67	중졸	평촌	주부	건설업	2006년	남편	양봉, 복분자	
4	고창	56	대졸	서울	주부	회사원	2011년	남편	과수농사	귀농센터 상담직
5	완주 (남편의고향)	47	대졸	전주	주부	공무원/ 사업	2009년	남편/자녀2		군계약직
6	장수	42	대졸	서울	시민단체 활동가	호텔리어	2009년	남편/자녀4		협동조합 운영
7	장수	44	대학 원졸	하남	주부	프로그래머	2009년	남편/자녀4		협동조합 운영
8	정읍	42	대졸	시흥	학습지 교사	프로그래머	2009년	남편/자녀2		학습지 교사
9	정읍	59	대졸	경북	교사	회사원	1998년	남편/자녀1		귀농학교 강사
10	정읍	45	고졸	정읍시	자영업	회사원	2011년	자녀2 (주말부부)	가공 양파	방과후 돌봄관리
11	임실	43	대졸	서울	학원교사	생협 사무장	2011년	남편/자녀3		치즈마을 체험강사
12	김제	58	고졸	전주	음식점 운영		2010년	자녀1	효소 사업준비	
13	김제	51	고졸	대전	회사원	회사원	2011년	남편	파프리카	영농조합 운영
14	진안	52	대졸	서울	회사원	회사원	2010년	남편		방과후 장애아돌봄
15	진안	55	대졸	서울	목사	목사	2005년	남편	5,000평	영농귀농 협회회장
16	진안	36	대졸	서울	그림작가	건설업	2012년	남편/자녀1		그림작가
17	진안	54	대졸	서울	회사원		2012년			
18	진안	46	고졸		주부	건설업	2009년	남편/자녀2		
19	남원	49	고졸	대전	주부	프로그래머	2005년	남편/자녀2 /시어머니		
20	남원	44	대졸	서울	주부	회사원	2009년	남편/자녀2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을 택한 것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과정의 어려움, 영농생활, 지역 활동,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자인 귀농·귀촌인들의 수혜경험과 정책의 요구도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의 자료수집 방법 중 하나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면담을 통해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과 라포 형성이라는 관계 형성으로 많은 사례[6]를 얻기가 어렵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구체화된 요구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게끔 단초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대상자별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면담자료의 수집과 전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조사를 하였다.

3) 심층면접 내용

심층면접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귀농·귀촌이라는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다음으로는 귀농 배경과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귀농이후의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영농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과 귀촌의 경우 하고 있는 경제적 활동, 문화생활, 자녀교육,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착과

6) 사례조사과 같은 질적연구방법에서는 사례수가 제한되고 양적조사를 통한 대표성보다는 적은 사례를 통한 사례자의 욕구와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정에서 중요한 지역민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 수혜의 경험과 향후 지원되어야 할 정책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문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2〉 귀농 · 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접내용

항목	조사내용
일반적 특성	- 귀농 · 귀촌 이전의 거주지, 학력, 전 직업, 가족관계, 종교 등 - 현재 거주지와의 관계 (본인, 남편 ,무연고)
귀농배경, 준비	- 귀농 · 귀촌을 하게 된 이유? - 귀농 · 귀촌을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였는가? - 귀농 · 귀촌을 하면서 기대했던 점들은 무엇인가?
귀농이후의 생활	- 경제활동:현재 영농활동을 통한 소득, 이외의 소득/ 영농활동의 참여 정도 -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 영역 :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 - 문화생활 및 자녀양육 (교육) - 취미활동, 참여여부 - 귀농 · 귀촌 이후의 교육변화,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의 활동
지역민과의 관계	- 기존 지역시회의 행사참여 - 토착민과의 갈등상황 여부 - 본인과 이웃의 범위
정책지원	- 정부로부터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지원 구체적으로 - 이후 정책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제 2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정착경험

1. 귀농 · 귀촌동기와 적응과정의 차이

귀농·귀촌이라는 의사결정은 개인 또는 개별 가구에게 중대한 사건이다. 귀농·귀촌은 거주지, 직업 등 라이프스타일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로 이들이 고려해야 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조건들 중에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과 연관되어 나타날 것이다.

우선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귀농·귀촌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남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사례는 3사례(사례3.5,7)였다. <사례3>의 경우는 은퇴농으로 남편의 고향으로 들어와 귀농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3-4년의 준비 끝에 남편의 설득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된다. <사례5>는 장남인 남편이 부모님의 병으로 고향으로 들어와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귀농한 유형으로 전주에서 완주로 귀향한 사례이다. <사례3>과 <사례5>는 도시생활에 대한 향수, 자녀의 돌봄역할 부담으로 귀농·귀촌생활의 초기 적응에 어려워했음을 토로했다.

〈사례3〉 거기는 **은퇴**하고 나이 드셨으니까 내려오자고 해서 내려온 거고... 우리 집 양반은 여기에서 낳아서 여기에서 학교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객지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향으로 가자고 해서 내려왔고. 근데 이제 농기구 같은 것도 다 있었어요. 그니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연암이씨(?) 집안이라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 **우리 양반이 고향, 고향 땅.나는 동의 안 했죠**(웃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남자는 내려온다고 하고 여자는 이제 싫다고 하고. **우리는 3~4년 미뤘어요**. 내가 이제 안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 양반이 집 설계만 하시는 거야, 집 설계. '가자', '나는 안 간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결국은 따라왔죠.

〈사례5〉 이쪽은 저희가 옳긴 데는 이제 **남편의 고향이자 우리 시부모님이 살던 집**, 살던 곳으로 왔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초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전주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첫 번 1년은 제가 아침 · 저녁마다 애들 등하교를 시킨 거 에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리 너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는 왜 힘들었냐면 저도 이제 제 나름의 생활이 있는 건데 아이한테 맡겨 가지고 저의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만 집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뭐 문화생활이나 뭐 좀.. 뭐. 배우고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롯이 그냥.. **집과 애들 뒷바라지만 해야 되는.. 그런 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사례7〉 **남편이 귀농하자고 했구요.** 저는 적극적으로... 귀농을 제가 먼저 말하진 않았구요. 남편이 자연 양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사육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농사짓는 것만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당장 제가 같이 내려온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주로 귀농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생계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저는 1년 정도 주말 부부로 있다가 내려왔어요.

한편 다른 사례들의 귀농·귀촌 동기를 보면 본인들의 삶의 질 추구, 자녀교육 환경,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기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된다. 다양한 귀농·귀촌의 동기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본 연구의 사례들은 농촌정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의 귀농의사로 들어온 사례들도 본인의 삶에서 언젠가는 귀농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응하기는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사례2〉 조사자 : 그럼 왜 귀농을 하고 싶으셨어요?
사례자 : 아, 제가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살아보려고 동생하고 그렇게 다녔던 건데...

〈사례8〉 귀농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우선**을 두고 초등학교 때문에 이쪽으로 왔어요, 초등학교 때문에. 원래 경북 상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쪽이 더 기후나 이쪽은 그쪽이 더 좋은 것 같더라구요. 기반이나 이런 것도 그쪽이 더 이제 살기는 편한 것 같았는데, 애들 학교면에서는 이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온 것도 있었죠.

〈사례12〉 귀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우스 속에서 살려고 오지는 않아요. 좀 왜 그러냐면 아, 진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도시에서 찌든 생활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을 꿈꾸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물론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업하던 사람이 실패를 해서 내려오는 케이스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이 귀촌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찌든 생활보다는 좀 여유롭고 평화로운 것은 꿈을 꾸고 내려와. 현실은 여기에 와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하우스 속에서 살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례15〉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 또 뭐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삶이 좀 힘들고 불편해도 감수하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어촌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조사 결과[7]에서 숫자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정주의향이 50%를 상회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사례자도 농촌거주에 긍정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한편 농업인재개발원(2011)에서 도시민 1,084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생활이 좋아서(3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으려고'와 '은퇴 후 여가를 보내려고'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사례자들도 기본적으로 도시의 삶에 대한 피폐함과 농촌으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전국도시 거주 20-60세 남녀 3,000명 농어촌 이주 의향 비율 56.1%
_____(2007), 20세이상 성인 남녀 2,000명, 농어촌 이주의향 비율 56.3%
_____(2010), 전국 19세이상 도시민 1,500명, 농어촌 이주의향 비율 47.7.%
_____(2011), 전국 19세이상 도시민 1,500명, 농어촌 이주의향 비율 63.7.%
국토연구원(2011), 서울 등 대도시거주 베이비부머 1,000명, 농어촌 이주의향비율 66.3%

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높았다. 한편 위의 조사에서 연령별로 30대 이하의 경우 농사를 짓는 것을 귀농·귀촌 이유로 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은 은퇴 후 여가를 보낸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본 연구의 사례자들도 현재 40대 초반에서 50대 이후로 40대들은 30대말에 귀농한 사례들로서 친환경적인 유기농업을 하고 자연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귀농하였고 50대들의 경우에는 은퇴농과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추구가 귀농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귀농·귀촌을 하게 된 여성들은 자신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욕구와 함께 남편의 귀농요구, 자녀교육에 대한 도시와 다른 환경을 부여하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왔으면 이는 귀농·귀촌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부족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과정을 마련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전제 조건은 충실한 사전준비에 있는데, 실제로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귀농·귀촌 준비과정을 거친 사례들은 비교적 농촌에 정착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1>과 <사례2>는 자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귀농을 결심하면서 2년간 귀농지역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후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학교에 참가하여 귀농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조사자 :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귀농 · 귀촌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사례자 :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이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 가지고 내가 한 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에 맞는 지역을 찾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걸 하려면은 그게 좋아야 해.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내가 그거를 풀어먹기 위해서 가야되는데, 어머니가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는 그건 아니야. 내가 그거를 풀어먹을 수 있는 대로 가야돼요. 나도 여기에 와서 처음에 와서 그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버겁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보니까 도시에서 한 20년 해먹은 거는 딱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내려오면 한 2년 동안에, 지금은 안 내려와도 2년 동안에, 준비기간은 한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가 내가 뭐를 해야겠다는 것이 설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기존에

귀농·귀촌지로 먼저 내려온 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내려오거나(사례14, 사례17) 아니면 귀농·귀촌지의 홍보를 통해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사례7). 실제로 위의 사례들은 정부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이전에 귀농·귀촌한 사례들로 개인적으로 도시의 삶보다는 대안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귀농을 추진한 사례들이다.

〈사례14〉 그냥 귀농 탐방을 왔다가 아는 지인이 이쪽에 살아서 부탁을 해서 연락이 됐죠. 이쪽에 네트워킹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에요.

〈사례17〉 원래 이쪽에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조선원 씨도 아는데 그전부터 제가 이 동네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귀농 알아보려고. .

〈사례7〉 아, 연고 없고요. 2008년, 2004년에 마을들이 8월 했던 게 신문에 났어요. 조선일보, 중앙지까지 다 신문에 났어요. 사진하고 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났어요. 그걸 우리 남편이 딱 들고 오더니 '여보, 이런 마을이 있대. 우리 여기 갈래?' 그래서 왔어요.

따라서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준비와 지식없이 막연한 대안적 삶에 대한 추구를 하고 내려온 <사례6>은 실제적인 귀농·귀촌의 생활에서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귀촌의 사전준비는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귀농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단순한 귀농·귀촌지원정책을 소개하거나 영농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귀농·귀촌의 의미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귀농·귀촌지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한다.

3. 정주환경 불편함과 자녀교육 문제

귀농·귀촌 가구들의 이주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주거문제, 그리고 영농활동을 준비할 경우 농지확보였다. 특히 귀농과 귀촌을 구분할 경우 귀농보다는 귀촌을 준비하는 사례자일수록 주택, 토지 등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의 사례들에 나타나는 현재 주거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연구대상자들의 주거형태

사례	지역	초기주거	현재 주거 상황	향후 계획
1	고창	마을회관 거주 3개월	주택신축	
2	고창	마을회관 거주 3개월	주택신축	
3	고창	남편고향 본가	남편고향집 개조	
4	고창	임대	임대	주택신축계획
5	완주	남편 고향 본가	남편 고향집 개조	
6	장수	귀농인 마을 거주	귀농인마을 거주	
7	장수	귀농인 마을 거주	귀농인 마을 거주	조합형식
8	정읍	임대	임대	
9	정읍	자가	자가	
10	정읍	임대	임대	
11	임실	임대	임대	향후 주택 신축 계획
12	김제	주택 신축	주택신축	
13	김제	임대	임대	
14	진안	빈집 개조	빈집개조	
15	진안	임대	주택신축	
16	진안	임대	임대	
17	진안	빈집개조	빈집개조	
18	진안	임대	주택신축	
19	남원	주택신축	주택신축	
20	남원	임대	주택신축	

조사된 연구대상자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대부분 현재 자가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주 초기에는 임시 거주형태로 임대로 있다가 귀농·귀촌의 시기가 오래될수록 본인의 집을 신축하는 형태를 보였다. 실제로 주거문제는 정착단계보다는 초기 이주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농촌생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귀촌인일수록 주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주요한 문제였다.

〈사례1〉 근데 저희가 막상 귀촌을 하니까 땅을 주는 사람도 없고 집들을 주는 사람도 없고 살만한 땅도 없고.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사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사례14〉 농가의 빈집을 사는 조건이 빈집에 산소 있는 거 산소 3개를 벌초해주는 조건으로... 그니까 무료나 마찬가지고. 근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혼자 내려오니까...

〈사례11〉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나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체험이 있으니까 들어오신 건데, 집이 자녀들한테도 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읍내에 살고 있어요. 한 분은 읍내에 살고 한 분은 시댁에 같이 살고 계시고... 저희 집 주인이 여기에 사무국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희 신랑을 오게 하면서 주거를 해결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2층으로 올라가고 저희한테 1층은 임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저희는 이제 그때 이런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들어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래시더라고. 어떻게 거기를 들어갔냐. 주거가 제일 걱정...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저희도 저희 집이 아니라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 집처럼 저희는 사용을 해요.

한편 영농을 희망하는 귀농자인 경우에는 농지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농촌의 노령화와 과소화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만한 땅의 부족과 지역 원주민들이 농지를 임대해주기를 꺼리고 구전되는 농지매물 정보에서의 소외 등으로 농지구입과 임차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사례1>과 <사례2>는 마을회관에 머무르면서 지역민들과 교류를 하면서 주택과 농지구입을 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구입의 어려움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사례2〉 사례자 : 근데 지금 귀농을 이렇게 계획에 세우신 분들이 땅 구입을 못하셔.
조사자 : 왜 그러는 거죠?
사례자 :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있는데, 왜냐면은 땅이 도시 같지 않고... 땅을 만약에 천 평을 팔았다, 그러면은 천 평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1억이 간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팔 거예요. 그렇죠? 근에 여기는 시가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만약에 천 평이다 그러면 몇 천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땅만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팔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서울에서 있으니까 여기가 계속 귀농인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팔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네들도 내려오게 되면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농촌 땅 구입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의 가치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상황에 걸려요. 지금 여기에 고창군에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집도 구하질 못해요. 집터도 없어요.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이사비용 지급이나 영농기술 교육 등의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집정보 제공, 임시 거처 마련, 농지 알선 등의 지원은 아직까지도 미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성주인, 2012) 본 연구의 사례자들도 개인의 정보력과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주거지와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거와 농지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농촌생활에 대한 희구로 귀농·귀촌한 인구들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적 사안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도시중심으로 생활과 근린시설이 마련되기에 농촌의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되지 않고서 단순한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사례6>은 지적하고 있다.

〈사례6〉 누군가가 귀농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마을 소개만 해달라고, 마을 소개만 했는데 귀농하러 오신 분들이 마을만 보고 가시진 않잖아요. 귀농에 대해서 내가... 난방을 뭐하는 지를 보셔라, 논밭의 크기를 보셔라. 빌릴 수 있는 땅이 얼만 지를 보셔라. 이미 귀농한 사람들한테 한해살이의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쭤보자. 이러는데 옆에 있는 남자 얼구리 막... (웃음) 이런 얘기해주면 안 되고 귀농을 해야 되고 막 지원은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자기 귀농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당신이 귀농할 생각이 있으면 길게 정말 로드맵을 그려서 오시지 않으면 못 버틴다, 저는 못 버틴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귀농해서 나는 너무 좋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왜 이런 걸 내가 미리 살피지 않았는지 살다보니 후회가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귀농에 대한 로망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자기 로망을 채워갈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난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이 과소화된 농촌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트렌드라는 인식을 전제한다면 귀농·귀촌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분야의 정책수단이 현재 신규단지 개발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향후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상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단기적으로 빈집리모델링, 협동조합 주택 등과 같은 수단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정할 때 자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현재 연구대상자 중에서 취학전과 취학 자녀 등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11사례인데, 이 중 특히 교육이 주요한 귀농·귀촌의 동기가 되었던 사례는 4개의 사례(사례9,10,19,20)였다. 이 사례들은 자녀의 대안 교육에 관심이 많아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지닌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것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사례10〉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귀농 · 귀촌한 사람들이 수곡초등학교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고, 그 귀농 · 귀촌한 인구 중에서는 학교나 애들하고 관계돼서 그쪽으로 돌봄 선생님을 하시거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말이나 이건 더 금방 금방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온 선택은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례19〉 저는 자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자연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별로 별 문제는 없어요. 초등학교는 참 좋아요. 더 많이 놀고 다니고 혁신학교예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슬슬 걱정되기는 하죠. 좀 이제 왜냐면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라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도 으쌰으쌰 하는데, 중학교는 순회 교사예요. 이렇게 미술 교육도 약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케어할 수도 없는데 대부분 한자, 미술, 음악은 순회 교사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적응하기를 참 힘들어 하더라구요. 근데 불만은 없었는데 좀 그 자문회나 이런 거 하면 아니 누가 이런 데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한데. 좀 학교가 좋아져야지, 들어오거나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어차피 자연을 더불어서 사는 게 중요하니까 살고는 있지만 그 보충이 안 되면 엄마들이 많이 좋지 않지 않을까.

귀농·귀촌 여성들은 초등학교 시절을 농촌에서 보내고 혁신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을 벗 삼아 뛰어 노는 것에는 대부분 만족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고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가 걸리거나 현재 상급학교에 가는 경우에는 자녀를 둘러싼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례5〉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농업의 이제 뜻을 두고 오시는 30, 40대 분들이 정말 이제 많아진다."라면 그분들에게는 물론 내가 농업의 뜻을 둬서 여기서 뭔가 뜻한 바를 이루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녀교육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다 잘은 못하더라고요. 농사일에 치중을 하면 애들 교육적인 부분은 좀 소홀히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농사도 중요하지만 자식농사도 정말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 부분은 정말,,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가 희생을 하고 그냥 전담 운전기사가 되어야 되고 콜택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렵죠.

〈사례18〉 네. 그러니까 귀농 · 귀촌 물론 구분 짓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시골 살이. 시골에 내려와서 살겠다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농사를 하겠다, 이건 조금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농사는 다 텃밭 농사는 다 하고 있어요. 사 먹지는 않으니까. 밭에서 나오거나 얻어먹거나 이렇게 먹으니까... 어쨌든 작업을 해서 월소득 얼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어쨌든지 먹고는 사는데... 애기가 커간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조금 더 고민이 되겠죠.

한편 <사례6>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의 가구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부모의 의사에 준하여 귀농·귀촌을 하였기에 이후 자녀들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향후 귀농2세들에 대한 섬세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즉 귀농·귀촌 가구들에 있어 여성과 자녀를 중심으로 볼 때 어떤 시기에 귀농·귀촌을 했는가에 따라 지원정책의 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의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례6〉 아, 언니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귀농한 여성들이 학습 위주로의 교육이 아니라 귀농 2세대들 자녀들에 대한... 예를 들면 부모가 선택한 귀농이지, 자녀가 선택한 귀농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애들이 어려서 따라온 거지. 쫓아왔는데 자기는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고 도시 아이들하고 격차나 문화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건 다 도시에 대한 욕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더라도 선택의 기로에 서죠.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닐 건지 도시에 진학을 할 건지....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귀농 2세대들이 귀농 2세대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고민들이 있고 귀농한 엄마들이... 되게 여기 사시던 분들은 아예 내보내시거나 그니까 얘는 여기에서 자랐으니까 빨리 내보내시거나, 오히려 고민의 기간이라든지 속도가 짧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귀농을 여기에 왜 했는데 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얘를 내보내는 게 옳은 것인가.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자녀들 귀농 2세,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같이 귀농 여성정책에 녹았으면 좋겠고. 이게 어느 생애주기 때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특히 여성도 어느 생애주기 때 자기가 귀농하느냐에 따라서 출산부터 경험하게 되는지 시골에서, 아니면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난 이후의 삶과 아까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귀농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약간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둔 사례들의 경우에 농촌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었고 대안교육을 위해 내려온 사례들은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향후 경험하게 될 사례들은 농촌학교의 지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면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여전히 가족 내에서 교육의 담당이 여성의 몫이기에 자녀양육과 교육 시기에 대한 고려가 여성귀농·귀촌 정책과 맞물려 고민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4.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촌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즉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다른 문제들도 겪고 있지만 이주 후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해 처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부분 초기 정착에 땅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본인들의 자산을 처리하고 초기에 농업이든 다른 활동을 통해 바로 소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초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조사자 :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던 것 같아요?**

〈사례5〉 그게 이제 일단은 전주에 있던 사업체나 뭐 했던 가게나 다 정리를 하고 시골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우리 애 아빠도 시골에 물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사일을 전업으로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4년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농부로서의 그런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참 애들에 대한 교육비는 전주에서 살 때하고 다름없이 모든 생활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가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주부는 이게 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활을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막 그렇죠.

〈사례7〉 초기에는 농사짓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안에 그니까 농업에서 주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알아서 하면 나머지는 보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사람의 경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이렇게 심어야지. 이때 심어야지. 이만큼 심어야지. 이때 거둬야지.’, 이런 것들이 다 불란거리가 됐었어요.

〈사례8〉 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농지도 얻어가지고 짓다가 이것도 아니고... 귀농 · 귀촌을 하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꿀 어떠한 벌이는 따로 없어요. 왔었을 때 그게 제일 아마 힘든 걸 거예요. 귀농 · 귀촌했을 때 제일 힘든 면은 아마 그걸 거예요.

〈사례17〉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솔로나 아니면 자녀가 없다든가, 어쨌든 간에 아니면 다른 식으로 텃밭 정도를 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비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쨌든 가정적으로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데... 자녀가 있다. 자녀가 한 두 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별로 혜택이 없거든요. 농촌을 살리자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비싸게 들거든요. 모든 물가가 더 비싸요. 그리고 아까 자급자족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귀농인들이 텃밭 정도로 자급자족을 못해요.

이와 같은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귀농·귀촌 생활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로 하기에 무엇보다도 현금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현금에 대한 요구로 기존에 가지고 온 목돈을 줄여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의 지속은 생활의 불안감으로 나타난다.

〈사례15〉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건 하고 푸성귀 뭐 갱장(?)이며 뭐 이런 건 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매달 들어가는 현금이 필요한데... 왜냐면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인터넷 전기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러한 기본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런 현금 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농사를 한다고 그래서 현금이 즉시 매달 나오는 건 아니고... 거의 농사는 1년 주기이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를 해야 혹시 그게 돈이 될까 말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돈이 좀 되는 일자리가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도시처럼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오십만 원에서 육십만 원이면 그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걸 따로 마련하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뭐 순천씨도 옆에 마을에 작은 도서관에서 한 일자리를 귀농한 사람 둘이 나눠서 오전타임, 오후타임해서 구십만 원이면 나눠서 사십오만 원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일자리지만 그 정도의 현금이 있어도 풍족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화세, 전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가지고 온 조금 마련했던 종자돈 조금씩 조금씩 까먹겠죠. 목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어쨌든 의료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목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갖고 온 종자돈을 조금씩 조금씩 쓰다보면 얘가 떨어질 쯤 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그전에 그거를 저희가 3년 정도 생각을 해서 3년 안에 뭔가, 안정적인 뭔가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3년 이후부터는 갈등이 많이 생기죠. 왜냐면 3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남아있어서, 식지 않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본 사례에서 현재 농업 소득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구는 <사례3>과 <사례13>, <사례15>였고 나머지는 본인이나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사례19>처럼 남편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사례는 <사례7>이 있었고 귀촌 사례 중 남편이 주말 부부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례(사례10), 그리고 본인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활동 사례가 모두 13개로 나타났다.

〈사례19〉 처음에는 영농을 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하는 게 애들 아빠는 전혀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그 뭐지? 귀농학교만 한 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실습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땅을 사가지고 바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취직을 했었어요. 그니까 알바 같은 거 있죠? 그거 하고. 계속 순환이었던 것 같아. 뭐 농사한다고 했다가 그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되풀이하다가 올해는 농사를 하자.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취직했다를 이걸 계속 반복한 것 같아. 비정규직과 그걸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야 이제 올해는 순수 영농만 하고 있어요. 힘들죠. 작년에 벌어놓은 거 까먹고 그런 식이에요. 한 3년 정도 제 생각에는 3년 정도는 돼야 좀 생활비는... 글쎄 내년 정도면은 잘하면 벌 것 같고. 이제 빚이 있으니까. 땅 살 때 이제 빚을 지고 샀거든요. 그런 걸 갚아나가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귀농·귀촌 여성들이 초기 정착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농업을 통한 영농소득이 바로 창출되지 않고 농촌생활에서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소요되기에 농업이외의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농업이외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귀농·귀촌 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편입되어 일을 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찾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 여성인의 교육과 활동 경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귀농 · 귀촌 여성에 관한 교육 · 활동 경험

1. 여성을 위한 귀농 · 귀촌교육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농촌생활의 추구 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위한 귀농·귀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귀농·귀촌교육은 중앙단위 교육과 지방단위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앙단위 교육으로는 주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농업인재개발원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단위 교육은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전라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귀농·귀촌 교육현황 [8]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은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본인들이 귀농·귀촌에 적극적 의사를 보인 <사례13>, <사례2>들은 전국적 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에도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 사례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귀농에 대한 인식, 귀농작물에 대한 이해, 정보,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회고한다.

8) 전라북도의 수도권 귀농학교를 제외한 2012년 각 시군의 귀농·귀촌 교육 진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	교육기관	분류	기수	인원	교육시간	교육일정	교육장소
합숙형	남원 귀정사 귀농학교	귀농종합	6	60	1주/ 2주과정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남원 귀정사 귀농학교
실습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	1	30	50	6월-10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누리 살이 퍼머컬쳐센터	귀촌종합	1	24	24	4/20-22	퍼머컬처학교
			2	24		6/15-17	
			3	24		8/17-19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귀촌종합	1	20	117시간	3/12-29	경천활성화센터
			2-3	각20		5-11월중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예비 귀농인 교육	2	60	30	5-6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순창 농식품 사관학교	귀농종합	6	36	16	연중	전북 순창
	순창군청	귀농종합	2	40	8	6-7월중	선진지역
	고창군 농업기술교육센터/ 혁신전략컨설팅	1개 과정	1	106	110	4월-12월	고창군
	부안군	품복별 교육 현장실습	1	25	60	7월-10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사례13〉 11년도. 그 해에 새해 첫날 여기로 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내려가야 되겠다, 귀농 관련 교육을 전국 다 찾아다니면서 사실 인터넷 사이트 보면서 교육 일정이나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11년도 초에. 1월 1일 날 마음을 먹기를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는 막연했죠. 교육이란 교육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남자 교육, 여자 교육 따지지 않고 항상 준비를 했고. 그런 중에 와서 농사를 덥석 대들기는 처음에 준비도 안 돼 있고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업을 잠시 했어요. 그걸 하면서 그래도 이 시설 하우스나 재료나 어떤 그런 종류가 하면 소득률이 꽤 있구나. 어떤 작물은 얼마큼 소득이 나고 이런 계산이 다 저희가 농가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투자비가 얼마가 들고 거기에 투자 되는 게 얼마며 연소득이 어떻게 나오는지 소득률 계산이 되니까……. 어떤 쪽의 작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분이 좀 서게 됐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급히 준비를 하고 그 업을 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는 내가 농업인이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땅을 찾으러 다녔어요. 찾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온실이 나오더라고요. 이 온실을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건 그 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온실 가치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사례2〉 찾아갔어요. 그전에 전주에 있을 때도 완주군에서 교육을 받았었어요. 완주군에서 하는 그 농업대학을 1년 과정을 이미 그쪽에서 수료를 했고요. 이쪽에 와서도 지금 농업 대 2년차 하고 귀농 교육 받고 교육은 많이 받았어요. 순창 장류 교육도 받았고. 교육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귀농·귀촌교육의 주체는 가구단위에서는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들은 남편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 참가하는 정도였다.

〈사례9〉 신랑만 했어요. 버섯인가? 버섯 재배인가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이제 소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설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교육으로 더 많이 가요, 전북 교육은.

〈사례20〉 애들 아빠가 실상사 귀농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서울 귀농학교를 졸업했어요. 서울에 그 귀농운동본부에서 하는 귀농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사실은 먼저 다녔고……. 그거를 하고 저는 애들이 있으니까 못하고 애들 아빠가 여기 전문학교라고 해서 3개월 기숙하는 데예요. 그래갖고 먼저 온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중앙단위의 귀농·귀촌교육과 전라북도의 수도권 귀농학교에 참가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과 맞물린다.

중앙교육의 주체인 농업인재개발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1년귀농·귀촌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17개 교육과정으로, 총 756명이 수료하였는데 그 중 여성의 비율이 25.2%였고 한국농수산 대학의 2012년 귀농·귀촌교육에는 90명 중 여성이 15명 수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낮았다. 전라북도의 수도권 귀농학교의 여성 참여율도 25%의 선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 사례자들은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미비, 강사 활용의 문제, 소농위주의 교육인 아닌 대농을 위한 교육,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친환경

농업 욕구에 맞지 않은 교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사례9〉 조사자 : 그러면 선생님 귀농학교 프로그램은 예전에 하신 그거죠? 현재는 근데 지역의 이런 귀농학교 프로그램은 없더라구요.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사례자 : 없죠. 그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었고. 저는 제가 귀농운동본부에서 그거는 꼭 하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으로도 부족하고 몇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사무 간사가 그걸 받쳐줘야 되니까. 거기도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다 사람들이 지쳐요, 뭘 하다보면.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겨우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여기 전북귀농 · 귀촌학교에도 제가 좀 **여성귀농학교하고 농가공학교하고 조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사례9〉 조사자 : 그런데 소농을 위한 교육은 있나요?
사례자 :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하더라구요, 얘기는. 그럴 거면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도 경제 인구를, 그러면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안들 1차, 2차, 3차 정도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거야 상관없이 시골 좋다고 오는 사람은 그럼 괜찮죠. 저희가 처음에 귀농운동본부에서 하고 그럴 때는 좀 생태적인 귀농. 그래서 이제 어떤 농촌에서 희망을 잡고 땅을 일구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수산대학 귀농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큰 단위로 하는 귀농학교가 특히 보면 영농을 창업의 개념으로, 농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뭐를 고부가 가치상품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고. 전하고 틀린 거는 은퇴 귀농은 확실하게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직장 사정상 4~50대도 은퇴 귀농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졌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학교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사례1〉 부인들이 정착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반반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부인들은 여기에서 자기가 싫어도 온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고,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분들에게도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같은 것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들대로. 제가 이제까지 교육을 봤어도 부인들끼리 따로 교육한 거랑 남편들끼리 따로 교육한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인들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구요. 왜냐면 무조건 '부인은 내가 가고 싶은데 안 따라온다, 야속하다.', 이게 아니라 그 **부인들의 것도 이해하면서 보듬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생활은 농촌과 더불어 살아도 도시 못지않게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도 뒤떨어짐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자꾸 교육하고 그렇게 듣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지, 남편이 얘기하면 머릿속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귀농·귀촌교육의 문제점을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연구 사례자들은 여성들만을 위한 귀농학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귀농학교도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귀농교육프로그램에서 교수와 같은 전문가 그룹보다는 마을의 어른들의 농촌생활에서 우러나는 실체적인 농촌 생활을 이야기 해 줄 수 있기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례1〉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귀농 · 귀촌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강사를 교수님들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 **'농촌사회의 이해' 를 하려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왜냐면 제가 충격적인 게 여기 어르신들이 다 명강사**야. 말 못하는 사람? 카메라 갖다 대도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사 필요 없어요. 그냥 술술술 나와요. 전라도에서는 옛날부터 예향이다, 뭐다라고 했는데 노래 가락뿐만 아니라 말씀도 진짜 잘하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귀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솔직담백하게 듣는 것이 그게 나은 거지. 강사들의 이론적인 거? 절대 정서에 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을 몇 분이든 간에 돌아가면서라든지 솔직담백하게... 나이 드신 분, 연령층도 다 되잖아요. 칠십대, 팔십대, 구십대도 좋고. 그니까 그런 분들을 갖다가 오히려 초빙을 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면 그분들 절대 안 떨어요.

한편 대부분의 연구 사례자들은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을 통해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 농업 작물에 대한 선택 등의 정보를 취할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특히 <사례2>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마을 단위로 정보가 들어오기에 마을의 이장의 역할이 비중이 있다고 바라보면서 귀농·귀촌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지역민의 인식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실제적인 생활의 터인 마을 단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해주면 귀농·귀촌자가 정착하는데 훨씬 용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례2〉 근데 한 5년 정도 해서 잘 정착이 안 되면은 다시 이렇게...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거를 저기하려면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왜냐면 항상 나도 해봤지만, 처음에 와서 할 줄 아는 게... 이제 우리 귀촌한 사람들이 더 힘든데, 어쩌면 귀촌한 사람들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귀농한 사람들은 옛날에 했던 것들을 회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새로운 거니까, 거기에 빠져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게 뭔가를 배워보고 싶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다 새로운 거잖아요.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처음 씨 뿌려보고, 열매 연 거 처음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아직도 못 본 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열정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각 면에 이장님들이 교육이 항상 열려있어요. 그니까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새로이 귀농인이 오면은 교육만큼의 정보는 충분하게 전달을 해야 그거를 접하죠. 근데 우리도 2008년도에도, 2008년도부터 귀농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전달을 못 받아서 교육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니깐은 물론 인터넷도 좋겠지만 마을의 이장님들이 귀농을 새로 했으면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생각 있으면 한 번 보라고, 이렇게 항상 정보를 줘야 돼. 교육 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농기구 빌려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 00군에서도 그 전달이 안 돼서 귀농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꼭 그거를 전달을 해야만이... 아주 필수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뭐를 할 것인가도 잘 모르고, 교육정보가 전달이 된다면은 이렇게 정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사례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귀농·귀촌자들은 충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국가에서 적정지 및 생계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더불어 귀농·귀촌에 있어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

한 상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책기관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을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기회 제공으로 보고 이를 지원하는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여성귀농·귀촌자의 입장에서 현재 귀농·귀촌 교육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내용이 부재하며 특히 귀촌사례의 경우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한 교육과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기관별로 귀농·귀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계발 및 취업교육프로그램 요구

지역의 귀농·귀촌한 여성 사례자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면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귀농·귀촌자들의 소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 이들이 특히 농촌사회에서 젊은 연령층이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수요와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4〉 그렇죠. 여기 지역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미. 바느질 모임 뭐... 면에서 여기 진안군이 평생학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면마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풍물모임, 서예모임 뭐... 그런 거 하면서 다양하게 모이고 저도 슬쩍 끼고 그랬는데... 워낙에 제가 온 철이 봄이고.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든 가면 창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모임 하는 거는 없고. 지금은 그냥 명상모임 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들 만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모임은 같이 못해도 이제 다른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만나서 관계를...

〈사례19〉 온갖 동아리가 한 30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 면에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 판소리, 요가 다 시작해서 뭐든 온갖 거 공부하는 팀, 뭐하는 팀... 탁구 치러 갈 수 있고 배드민턴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좀 귀농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한편 지역의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례자들은 모임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사회에 중심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었다.

〈사례 7〉 도시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람이 소중해요. 그래서 별다른 능력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풍물단 총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5년인가, 6년째 계속 그걸 맡고 있어요.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의 존재 위치가 있잖아요. (웃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이한테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또 뭔가 어떤 일을 맡게 되고.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총무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회장마을이 됐다라는 말을 해요. 지역에서 그만큼 자리 잡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자기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자기가 일할 수 있고 자기 위치가 될 수 있는 나름이 생기는 거죠.

또한 농촌사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모임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하다 보면 일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일이 다음에는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촌에는 여자들이 할 일이 많고, 작은 재능이라고 다 쓸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 여성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사례11〉 아니. 여기에서는 그런 일 안 하고 지금 여기 마을에서는 체험 강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자치회가 좀 많이 있어요. 잘 이렇게 그 동안 많은 노력 끝에 일궈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많이 히트를 본 사람이에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을 저희 엄마들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 일도 하고 학교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여기에 와서 애를 또 하나 낳았네요.

〈사례8〉 그렇게 되면 시골에서도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 편이니까 월 구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의 일자리는 항상 있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계약직이 많구요. 그래서 또 일 자체가 액수가 그런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단순한 일일 때가 많고... 그러면 진짜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구요. 차라리 그래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은 남편이 농사짓는데도 부담이 덜하겠죠. 그런 경험이 몇 번 생겼거든요. 같이 하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같이 하다가 4~5년 버티다가 안 되겠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한 사람은 월급을 받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례9〉 제가 생각 할 때는 이쪽 지역은 정말 남자들이 경제활동 할 게 없어요. 모든 지금 사회 흐름이 실업율도 많고 그렇긴 한데 여기 특히 시골은 더, 경제활동만 할 수 있으면 굳이 떨어져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근거리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와서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정착을 하려면 가족이 함께 살아야지 정착이 되잖아요. 가장 시급한 것은 그거 같아요. 경제활동 할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특히 남자. 근데 엄마들이나 여자들은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고학력, 이제 귀촌하신 분들 중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학교 이제 다 할 수 있으세요.

또한 <사례5>와 <사례6>의 경우는 귀농·귀촌 여성들이 교육의 대상에서 교육의 주체로 자기를 전환시킨 사례로 귀농·귀촌 여성인들을 위한 창업교육의 리더로 후발 여성귀농·귀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거나 협동조합법의 통과로 교육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자 :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고 있는 거죠?

〈사례5〉 네. 점점 일이 너무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에.. 일에 대한 만족도는 참 높아요. 왜냐면 어머니들.. 어떻게 보면은 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요.우리 어머니들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열심히 농사짓고 내가 먹을 거, 내가 먹는 거나 다름없이 정말 풀 약 안 하시고 막 풀 다 뜯고 와서 진짜 손 보면요. 얼마나 진짜 양 짠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어머님들이 해서 우리가 그.. 꾸러미 밥상 같은 것도 한번 씩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요. "어우..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말씀, 그니까 정말 저희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사소한 건데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은 저희 가공센터는 문턱이 높지가 않아요. 문턱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저희 남편이 뭐 농사를 짓고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죠.

〈사례6〉 저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요. 여기에 와서는 애기 낳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셜 벤처라고... 사회적 기업보다 더 혁신적인 자기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기업체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체랑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소셜 미션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으면 되는데, 소셜 벤처로 창업을 했구요. 주로 이제 먹거리나 텃밭, 먹거리에 대한 조달 시스템을 만드는, 그니까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먹거리는 텃밭도 병행해서 그런 걸 하고 있구요. 언니하고도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장수군 안에 있는 최초의 교육 협동조합을 만들었구요. 언니랑 저랑 멤버인데요, 저희 마을에서 세 명. 원래 장수 지역에서 이렇게 강의 활동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활동 같이 하고 있구요.

전반적으로 연구 사례자들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촌의 인력난으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즉 이들은 농업이라는 일 이외에도 체험마을의 간사, 지원센터의 간사, 단체의 총무, 협동조합의 결성 등과 같은 활동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면서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참여와 활동은 여성귀농·귀촌인이 초기 농촌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제가 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두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후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되어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3. 세대와 문화 차이로 인한 지역민 교류의 어려움

농촌사회가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귀농·귀촌자들에게 있어 마을 지역주민과의 교류는 지역에서 조기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연구 사례자들은 마을주민과의 심각한 갈등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도시생활자로 각자의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던 삶에서 '울타리가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것이 초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온 사례일 경우 '또 하나의 커다란 시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14〉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많이 아무래도 어울리게 되고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죠. 끼리끼리 논다. 근데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쉽게... 그렇게 일찍 주무시고 아니면 한 낮에 얘기를 평상에서 나누시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아직 일머리라는 게 안 잡혀서 너무 집안에 이것 저것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처럼 한가하게 자리에 나가질 못하는 거,. 어르신들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가능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례5〉 전에 그랬어요. 누가 "아이고 자네는 시어머니가 없으면 마을에 시어머니가 10명은 있을 거다." 근데 정말 그러세요. 막 그냥 이렇게 수시로 그냥 불쑥불쑥 오세요. 주말 같은 때 "있어?" 그러고 그냥 문 열고 어쩔 때는 일요일에 같은 때는 낮잠도 둬 바, 아침에 그냥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근데 그냥 쑥 들어와요. 문 열고. "예, 어머니." 하면 "어, 내가 뭐가 좀 필요한디 뭐 있어?" 이렇게 묻고 또 뭐 뭐 이렇게 농사지은 거 뭐 있다고 갖다 주시고 근데 그런 거가 좋지 많은 않더라고요.

한편 <사례9>의 경우 귀농 1세대로 지역에 내려온 경험으로 볼 때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경우 2-3년은 서로 허니문 상태에 머무르며, 이후 지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사례2>와 <사례19>의 경우는 본인의 경험으로 볼 때 새로운 귀농·귀촌자가 유입될 때 지역민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농촌 사람이 다 되었구나'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례9〉 저는 참 필연적으로 이 동네를 들어왔는데... 근데 시골사람들이 참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다르면 참 꺼려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관계가 걸리면 십 원짜리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시골사람들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걸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사실은 귀농자들이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오래 살아도 객지예요.** 어지면은 외지 것이 이러더라고. 그거는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고 '네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소리 듣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대체로 지내기 괜찮아요. 몇 년 간은 괜찮아요. 귀농 사례도 제가오죽 많이 봐요. 아, 귀농 허니문이구나. 한 2~3년까지는 허니문이에요. 근데 한 2~3년 지나면은 어디에선가 그런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귀농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한 지역에 동화되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사례2〉 근데 나는 시골 정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가족이 여기에서 몇 대를 살아왔는데 새로 온 것들이 그야말로 돈으로 밀고 온 거지. 돈 주고 땅 사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나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래 살다보면 시골 사람들의 정서가 이해가 가요.

〈사례19〉 그 표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르신들은 귀농자들이 들어오면 귀농자들이 마을에다가 돈을 많이 기부해주기를 바라고... 수도 놓으면 수도 놓을 때 돈을 받아요. 새로 집 지으면 이백씩 받아요. 그 돈을 마을 운영기금으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인들은 자꾸 받는 거에 익숙해져있어요. 시골 어른들은. 그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를 벗겨 먹는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인식이 있어요. 시골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회관에다가 기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돈 갖고 음식 잔치하고 이런 거. 그니까 시골 농민들은, 좀 그런 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내가 이렇게 몇 년 살았는데 또 새로운 귀농자가 또 와. 새로운 귀농자가 오면 그런 느낌이 나도 들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9년 살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시골화가 돼가는 거야. 자꾸 시각이 농사짓는 사람의 시각으로 되는 거고...

한편 귀농·귀촌자로서 농촌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원주민인 지역주민도 타지의 외부인의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례15>의 경우[9] 9년의 귀농생활에서 귀농·귀촌인도 농촌사회의 적응이 어렵지만 고령인인 다수인 지역민들도 문화가 다르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진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감정이 양가적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한 귀농·귀촌인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사례15〉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전제라고 하고 있는 것이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귀농한 사람들이 마을에 적응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조심조심 적응하는데... 사실 이제 원래 계셨던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적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도시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이제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귀농정책이 사실 없는 것 같지만 몇 개가 있어요. 빈집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집들이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어르신들이 이미 꿰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되게 '너네는 혜택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누가 귀농하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정부에서 이십만 원 나오잖아.', 이래서 '그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주는 것처럼 하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귀농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이 가면 왜 특별 대우하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얘기한 건 참 중요한 얘기죠. 딱 귀농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사실은 시골 전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귀농한 사람들만 적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우리한테 적응하는 게 어렵고 힘들구나. 내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틈을 안 줬나봐.', 그런 반성도 했지만... 저도 할머니들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젊은 아낙들이 좀 어려워요. 동년배라고 하는 게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9) 사례15의 경우는 귀농·귀촌 부부가 지역사회의 지역민 교류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들로 전직 목사 부부로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인학교를 만들어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한글반, 컴퓨터반, 도예반, 미술반, 짚풀공예반을 운영하였다. 이곶○에서 형성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을의 집집마다 오래된 농구와 생활용품, 책, 사진 등을 모으고 이야기를 책자로 만들어 마을박물관을 형성하였다.

〈사례15〉 그래갖고 할머니들은 그냥 잘해드리고 섬기면 되는데, 같은 부류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같은 꼴을 만날 수 있는 게 합동 줄넘기가 있어요. 농사로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린 농사가 적고 저기는 농사가 많으니까 품도 안 돼요. 그럼 저희는 품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만나니까 이제...

〈사례4〉 근데 지역민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여기에 내려오면서 아, 나는 여기에서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여기를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내려와서 사나보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살까. 저 사람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한테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더욱 새롭게 귀농한 사람들한테 반갑게 맞아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귀농·귀촌자가 농촌사회의 지역민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인사잘하기,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대접하기,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등이 우선되어야 함을 연구 사례자들은 이야기한다. 아직도 여전히 농촌사회가 남성중심의 사회이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이기에 먼저 귀농·귀촌자의 낮은 자세와 서로 교류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함을 여성귀농·귀촌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사례13〉 네. 지역민들하고... 아무래도 도시하고 어떤 그 생활의 차이는 있고. 또 관심이 많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없는 말, 있는 말 보태져서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어려움 없었어요. 와서 그냥 뭐 마을회관 가면 그냥 저 막내니까 할 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가서 좀 있으니까 그냥 예뻐해주시더라고. 대신 마을에 마을길 청소한다, 뭐한다, 새벽에 방송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에 절대 안 빠졌어요. '새벽 다섯 시에 앞길 풀 깎으러 나와라.', 그러면 일을 할 줄 몰라도 그냥 낫하고 다 들고 나가서 그냥 못하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그만큼만 해도 시골분들이 그래도 순수해요. 다 좋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가 자세가 안 됐다, 여기부터 보면 계속 나쁜 시각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거는 자기하기 나름일 거예요. 다만 시골 내려올 때 여성들이 반드시 거기가 있어야 와서 서로 편해요. 그 저희가 농담 삼아 남자 분들 오면 '각시가 반대하면 아예 이혼하고 내려와라.', 근데 저도 그래요. '아유, 안 내려온다고 하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찾아. 여기 예쁜 여성들 많아.' (웃음) 사실 온 사람들끼리는, 시골이 좋아서 온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마음이 통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많이 해요. 남자 분들이든 여자든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내버리라고 그래요, 내가.

더불어 여성귀농·귀촌자들 중에서 지역민의 부녀회나 여성농업인 조직에 참가하는 사례는 <사례2>, <사례4>와 <사례15>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며 이들은 농촌사회의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농업인과 어울릴 기회도 없었고 어르신들보다 이들과의 교류가 힘듦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사례들은 지역의 귀농·귀촌 여성들과의 자조모임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인 모임에 참가하는 수준이었다. 향후 여성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귀농·귀촌인의 모임과 지역민과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제 4 절 귀농·귀촌 여성의 정책 수혜 경험과 요구 분석

1. 가구 중심의 일부 지원 혜택 경험

귀농·귀촌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귀촌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2009년 이후와 이전 시기의 차이로 인해 정책 수혜의 경험에는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대상중 지원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례는 3개의 사례로 주택수리비 지원 2사례와 창업지원금 1사례였다. 나머지 사례는 귀농·귀촌자이기보다는 농촌에 사는 지역민으로 받을 수 있는 출산도우미지원 사례(사례 16), 그리고 지역 동아리 지원사업(진안지역), 친환경농업 인증표 지원(사례19)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11〉 그 집수리비 오백만 원하고 현장 실습비. 그게 오십만 원씩이었나?

〈사례12〉 관리기. 이렇게... 관리기 받았고. 이제 주택 수리비 오백만 원 주무관님이 애쓰셔서 이제 타요. 아직 안 탔고. 서류는 다 끝났고 심사는...

〈사례19〉 내가 딱 지원받은 건 뭐냐면 친환경 인증 받아갖고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그 뭐 인증농가한테 주는 그거 뭐... 친환경 인증 받으면 친환경 그 뭐야... 거름 살 때, 비료 살 때 지원해주는 거. 그거 누구나 주는 거지. 귀농자라서 난 지원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한편 <사례7>의 경우는 귀농·귀촌자의 마을로 들어간 사례로 지자체 자체가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임대하고 세대별로 하우스 한동을 주는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형성된 곳으로 들어와 초기정착에 유리하였다.

〈사례7〉 조사자 : 그러면 지원 정책을 통해 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은 뭐가 있으셨어요?
사례자 : 일단 마을에 들어와서 공동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귀농을 했는데 그래도 와서 하우스 한 동과 많지는 않지만 이삼백 평이 주어져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게 된 그것 자체가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마을에 공동 기계를 쓸 수 있었던 거죠.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그 다음에 저온 창고, 이런 창고들. 그것만도 많은 혜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장수는 귀농정책이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착자금이나 수리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늦게 지원된 케이스라..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들은 귀농·귀촌자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부족과 혜택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정책적 수혜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과의 친분이 있다든지 개인적 정보 수집의 차이 등으로 정책 수혜 경험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례13>의 경우 창업자금으로 2억원 융자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을 받은 사례는 본인이 유일한 사례라고 말한다. 이것은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 귀농·귀촌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사례13>은 귀농·귀촌 이전에 사업을 한 경험이 이와 같은 창업자금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보았다.

〈사례11〉 사례자 : 주택수리비 등 이거 쫓아다녀야 돼요.(웃음) 제가 이제 내려와서 처음에는 일을 안 했으니까, 막 일하다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귀농에 대한 책들을 읽었더니 군청하고 친해야 된다, 동사무소하고 읍사무소에 자주 들락거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번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조사자 : 그니까 개인의 역량에 따른 거네요? 그럼?

〈사례11〉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 받아요. 집수리비도 2월 달에 사업비가 나와요. 수요자 전화 오는데, 우리는 딱 그게 맞물렸기 때문에 받았는데, 만약에 6월 달에 와서 집을 먼저 수리해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수리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찰나인 것 같더라구요. 저희도 못 받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이 딱 맞아갖고 받을 수 있었죠. 제가 받았으니까 그거를 얘기해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면 못 받는 거죠.

〈사례13〉 귀농귀촌 정책에서 창업 자금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일부, 일부는 저희가 자부담하고 사업 자금을 .. 작년이죠. 작년에 인수할 때, 작년 11월에 자금이... 11월, 마지막 자금 나온 게 그때 나오고 7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받은 거는. 근데 그 기간을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를 일반 귀농인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했었고... 사회에서 사업을 해봤으니까 그런 계산은 기본적인 걸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창업 자금을 신청을 해도 2억이 최곤데, 2억을 받은 사람이 전국에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2억 한도 내라고 돼있어요. 근데 2억 한도 내라는 그 내용 속에는 뭐 그 사람 개인의 신용도, 자산 상태, 그 사람의 능력, 또 창업 계획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만큼 다 깎아져서 나오면 어떤 사람은 삼천 몇 백, 사천 몇 백, 칠천... 대부분 사람들이 칠천, 1억까지 받은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한 2~3개월 서류 넣었다가 시에서 보면 이거는 되게 미미하다고 그러고 보내면 몇 번 하면은 개인들이 더 이상 자기 셀프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 도움 받고 이러는데 계속 그걸 못해요.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으로 특화된 시·군을 홍보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각종 정주관련 지원책과 특화된 영농기술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자금이나 주택수리비등 정착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체험을 지원해 주

고 있으며,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들 가운데는 정착자금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의 형태 외에 '보조'의 형태로 영농창업자금, 농지구입, 농자재 구입, 빈집 수리 및 이사비, 자녀학자금, 문화예술 창작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육아 지원, 자녀 교육비 보조, 귀농인 성공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이 지역 홍보와 지원금 융자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사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 영역에 속했고 한정된 가구와 보조금 사업 신청 시기 등과 맞물려야 하기에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정책

현재 시·군 단위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구 사례자들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정착의 단계에서 지원 받은 정책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지적한다.

〈사례5〉 지금 저희 남편이 3년, 4년 되었지만 아직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립을 못했어요. 어.. 좀 "뭔가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 오셨다가 도로 나가시는 분들의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도 전주에서 시골로 들어왔지만 지원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책이.. 그렇게..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요.** 그리고 가령 "둘 중의 하나는 농업의 전념을 한다."라고 둘 다 농업이 전념을 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되어 버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만한 뭔가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8〉 지금 그 주거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귀농귀촌자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건 이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이백인가, 백인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선착순이었나? 세 가정인가, 그걸로 끝인 거예요, 1년에.**

〈사례13〉 지금 그 왜 귀농인들 실습하는 제도 있죠? 그런 제도가 김제시에 여섯 명 올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도 농가로 실습생이 와서 하는데... 그런 게 좀 확대돼야 돼요. 다른 업을 하면서 농사에 정착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농사일에 배워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요새 누가 여섯 명 가지고, 1년에 김제시에 천 명씩 내려오는데... 여섯 명 당첨되는 거는 복권 당첨되는 그거죠. 그런 어떤 예산을 이만큼 해주고 이거는 좀 ... 우리가 두 사람을 받아드리기로 하고 받았는데 결국은 하나 떨구고 한 사람만 해줬거든요. 사실 두 사람이 지금 다 와서 교육을 받아요. 받고, 대신 농가한테 사십만 원 지원되는 거 있고 실습생한테 팔십만 원이 나가거든요? 여기 짱박혀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배우고 우리가 받을 거를 다 그 분한테 그냥 주기로 했어요. 그래야지... 왔다갔다 그래도 기름 값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거의 매일 여기에 나와서 같이 일하고...

<사례5>의 경우 귀향한 사례로 농업을 통해 자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교육의 지원보다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업이외의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사례8>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사비용이라든지 주택수리비가 비용도 적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농가가 2-3가구에 머물러 실질적 도움을 받는 사례가 소수인 것이 한계라고 본다. <사례13>의 경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인턴제도를 농가에서 활용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와 예비자들도 한정적이라 '생색내기 정책' 정도로 보았다.

〈사례13〉 농업도 창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 한다는 사람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농사를 단순하게 짓더라도 땅값, 시설비, 초기 영농 자금, 아니면 그 후의 매출에 대해서 일어날 거, 이런 계산까지... 몇 개월 후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몇 년부터 되고 내가 빚을 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시작을 하면 귀농 자금을 받아도 사실 힘들어요. 2억이라는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 동안 이자만 낼 때는 어떻게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원금 상환이 도래하게 되면 1년 계산하면 한 이천육백씩 갚아야 돼요. 이자가 연 육백이고 그러면 한 삼천만 원 이상이 1년씩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농사지어가지고 그 수입 구조가 쓰고 남고 삼천을 마련 못해요. 그 계산을 안 하고 하면은 어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더라구요.

〈사례20〉 저는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진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담보 아니면, 담보 없이는 뭐가 되는 게 없더라고. 그니까 실제로 그게 창업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저리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실사가 나와 가지고요. 엄청 꼼꼼하게 까탈스럽게 해요. 그래서 좀 별로 그렇게 이게 지원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율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낮았으면 좋겠고.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이자가 3프로라고 해도 임업 이쪽은 1프로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가야... 새로 귀농한 사람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돈이 많지를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달라서. 실제로 지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같지를 않아요. 갚으려고 그러면... 농사에서 돈 벌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를 원금 갚기도 힘든데 이자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한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융자도 담보 문제, 저리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바로 창출되지 않기에 오는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서류의 복잡함, 실사의 문제 등으로 귀농·귀촌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지원제도 임을 사례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귀촌의 시기가 아주 초창기인 1998년부터 최근 2012년으로 시기별로 차이도 존재하고 각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책에도 차이를 보여 실제로 이들이 지원받은 정책에는 편차가 존재했다. <사례9>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정책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파급효과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례9〉 저는 기존에 나온 정책들 다 모아놨는데, 기존에 나온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알맹이가 없어요. 특히 정읍시 같은 데는 농가수리 이런 것도 정말 정읍시 통틀어서 다섯 가구인가? 심지어 1, 2월 달에 안 하면 그것도 안 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뭐냐.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농가, 농촌 살리긴가 그런 것도 이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게 자꾸 농민 보호 프로그램도 정읍 쪽에는 별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줄어드는데, 근데 그런 정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시는 귀농 정책이 이렇다.', 저는 그거는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 내지는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파급효과나 실효성이 그렇게 없는 정책들이에요. 그냥 생색내는 정책들이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생활하면서 좀 눈이 번쩍 뜨이게 필요한 부분이... 근데 조금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 치우치지 않는가. 공무원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결국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귀농·귀촌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수요는 거의 받아보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 들어온 사례들에 있어 주택수리비와 창업자금 정도의 현금지원성 혜택을 받았고 그 과정도 정보력의 차이, 본인의 담보 능력 등으로 해결되기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에 스며든 정책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귀농 · 귀촌여성의 농촌살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요구

귀농·귀촌자로서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에 시민 1,0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는 현재 귀농·귀촌한 사례와 재이주, 미실행한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정착자금 융자 등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세 집단 모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이주 사례들은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강화가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였으며 귀농·귀촌 자들은 작물선택, 재배, 판매등 종합적 멘토와 컨설팅을 미실행 집단은 주택이나 토지 정보를 두 번째 정책적 수요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귀농·귀촌자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는 귀농·귀촌자의 정착시기별로 차이를 보였고 시기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자들도 사례자들의 정착 시기별로 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례5〉 이제, 제가 접한 분들의 대부분은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요. 그니까 그분들은 번잡한 도시생활을 접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뭐 "내가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가공교육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아. 있잖아.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일을 않고 있으면 안 돼." 그는 아, 귀농 · 귀촌이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귀농 · 귀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 중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령대도 있지만 저처럼 농업에 뜻을 두고 뜻이 있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정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각 군마다 정말 달라요. 정책이 다 달라요. 그니까 만약 지금 이게 앞으로는 베이비붐이 세대들이 은퇴할 시기가 점점.. 은퇴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면 100살을 넘게 산다."라는데 그분들의 반 이상은 시골 생활을 그리면서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듯이 귀농 · 귀촌 지원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사례8>은 예비귀농·귀촌자들이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체험의 기회제공과 함께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초창기 정책이 단순 유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이후 실제로 머무를 수 있는 사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8〉 몇 개월 정도라도 그렇게 **임시숙소라든지 아니면 임시농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세대원 몽땅 내려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학교나 이런 데랑 연합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체험활동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늘려도.. 아니면 **체험생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공동경작이라든지, 공동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의 일자리를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나 해서 **경제생활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거를 마련해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6>은 현재 지원되는 정책이 농어촌 인구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상담,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등에 주력하면서 농어촌 이주 후 귀농·귀촌인의 정착과정에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귀농·귀촌정책의 핵심으로 바라보았다. 도시적 삶에서 탈피하여 대안적인 삶을 찾아 귀농·귀촌을 하였지만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것이 귀농정책의 핵심인 것으로 본다.

〈사례6〉 그런 융자사업 준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시골에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정주환경을 지키는, **정주환경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전 오히려 훨씬 더 귀농정책에서 우선시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도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 단위마다 학교를 하나씩 설립하는 운동으로 바뀌면... 예를 들면 학교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가서 귀농을 하겠어요. 학교를 하나씩 면 단위마다 만들도록 하고 돌봄센터를 하나씩 준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부모들이 자기 양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맞벌이데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령자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몇몇 지자체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공동 밭? 이런 걸 농번기에 한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걸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빨래해주시는 데도 있는데, 자원 활동처럼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된다든가,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게 새삼 면 단위라도 하나씩 이렇게 면 단위 학교, 돌봄센터, 식생활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고령자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새로 진입한 인구들에게도 좋죠. 그분이 농사를 짓든 아니면 시골에서 살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든 이런 일이 저는 되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시골에서의 여성들이 자기 계발을 위한 플랫폼, 이런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육을,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그걸 맞춤형 교육으로 안내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데거나... 농사를 짓는 여성이라면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잘 해결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농업인들에게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케어해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약간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시골에 누군가가 내려와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되게 만족할 수 있고.**

한편 시군단위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귀농·귀촌정책은 귀농·귀촌자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의 단위이기에 이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정책은 기초지자체별로 특성화되지 않은 채 비슷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을 <사례9>는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귀농운동과 교육운동을 실행한 연구 사례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교육귀농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특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귀농·귀촌정책이 수립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단위가 편의주의와 기존 국가정책을 따라가고 있기에 정책을 선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례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농촌유학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편승하여 많은 가구들이 교육귀농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 일자리는 여성의 일자리로 창출되고 있었다.

〈사례9〉 **특성은 정말 교육이 딱 그게 아이템이 좋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누가 선례를 보여주고 성공사례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죠. 근데 그런 과감한 배팅을 좀 못하는 그게 전 안타깝구요. 그래서 W시 교육에 대해서는 그걸 교육청이나 교육 전문가들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빨리 탁 움직여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귀농정책 아무리 떠들어도요, 저희는 농촌유학도 사실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농촌유학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농자들한테 굉장히 적합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는 폐교 직전의 학교가 많아요. 백 명 미만, 몇 십 명 미만의 이런 학교들이 몇 백 개 있잖아요. 수두룩 하잖아요. 그럼 그런 학교 주변으로 귀농을 하면 귀농자의 자녀는 그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친지나 누구의 자녀도 '아, 그 학교 좋네. 우리 애도 보내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은 귀농을 못하지만 애는 보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애가 와서 좋으면 부모도 오게 돼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렇게 해서 귀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농촌으로 자꾸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데... 시골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도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젊은 주부들.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귀농자들은 상담이 돼요. 그리고 도시를 알고 도시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여기 와보니까 도시하고 이런 이런 점이 틀려. 그래서 이게 참 좋았어.', 그러면은 서로가 말이 통한다니까요. '아, 그거? 그럼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저는 좀 귀농자들은 적어도 생태적으로 살고 도시인의 필요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라북도에 비어있는 학교, 비어있는 농촌 이런 데에 그런 귀농자들이 농촌유학의 형태로라도 들어가면 좀 많은 흡인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학교는 살아요.

귀농·귀촌자의 정책요구에 있어서 실효성 있고 유치와 정착이 병행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사례15>의 경우 8년의 농촌생활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거창한 지원방안보다는 여성들이 농촌살이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00지역의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을 맡은 <사례15>는 농한기때 귀농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바느질 모임을 만들어 이집 저집 다니며 바느질과 수다를 떨면서 서로에 대한 정서적 교류를 하였고 이것이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이야기한다. <사례17>도 이 모임에 합류를 하였는데 모임 활동을 통해 빠르게 농촌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사례자들은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촌사회에 가족 내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 교류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소모임에 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현재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시군단위에서 적은 예산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이 나오거나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이것은 시군단위의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귀농·귀촌 여성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사례15> 제가 어쨌든 00군 귀농 · 귀촌협의회 회장을 맡았잖아요. 제가 중심을 두는 건 여성들이에요. 여성이 자리를 잡으면 남자는 괜찮아요. 여자들이 내 삶을 딱 중심을 잡고 '나 여기에서 살 거야. 힘들거나 또는 불편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남자는 따라오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 '못 살겠어.', 이러면 다 올라오게 돼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좀 자리를 잘 잡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제적인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여성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쨌든 에너지를 받을 데가 필요해요.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이런 건 감당 할 수 있어,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도 불편하고 이러면 '뜨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돈 아니고도 내가 시골에서 살면서 '나 참 좋구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심리적으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골 살이에 대한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정도는 모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실질적인 현실적 도움이 필요한 건 이거는 어떤 모임에서는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농한기 되면 바느질도 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집집마다 다니기도 하고 이래서 힘이 된다. 옆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웃들이 많구나. 그런 정도로도 도움이 되어줘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힘든 걸 얘기할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은 아니어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정도가 **가능한 네트워크만 형성**돼있다면 그런 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하고요. 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이 모이면 어떻게 한 번 이걸로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뭐, 한 달에 많이도 아니고요. 우리는 한 삼십만 원에서 사십만 원 정도만 어떻게 이 바느질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들이 가능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제가 꿈꾸는 것은 지역 화폐 운동이거든요? 어쨌든 돈, 화폐가 아닌 다른 가치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꿈꿔서 앞으로 10년 안에 여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10년 안짝으로 뭔가 되겠죠? 이러고 있어요.

〈사례17〉 여성들 같은 경우 욕구 중에 경제적인 욕구보다도 **심리적인 욕구가 많다면...** 어떤 문화적인 욕구나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자기 성취 이런 거. 그러자면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주로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뭘 배우는 거거든요. 원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진안 같은 경우에도 좀 하기는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배우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배우고 싶은 몇 명 이상이 만약 뭐를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런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강사비나 간식비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모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한편 여성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과 귀농귀촌지원센터, 그리고 귀농·귀촌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 기구와 함께 여성귀농·귀촌자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귀농교육도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귀농교육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교육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귀농·귀촌 여성들의 특성을 살린 가공교육과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실천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의 수립도 요구하고 있다.

〈사례6〉 중간 조직 단위로서의 그런 조직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공적 시스템에 의한 복지 시스템, 복지 부조, 그런 인프라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귀농 · 귀촌협의회, 귀총농귀촌지원센터 이런 데들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귀농운동본부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하부구조가 아니라 동등한 귀농귀촌여성지원센터가 있으면 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의 하부 구조, 귀농지원센터라든가 그 아래에 부서를 만들면 그거는 그렇게 변별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귀농정책의 종속 변수로 그냥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정책들을 이반해보거나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을 위한 중간 조직 단체가 있어야 한다면 하부 시스템이 아니고 명확하게 별도의 독립체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거나 특별기구로... 출발은 특별기구였으면 하는데요. 다르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너무나 많은 중간 조직들이 있잖아요.**

〈사례20〉 여성 맞춤형으로 이렇게 텃밭 가꿀 때는 이런 미생물이 좋다든지 이런 퇴비가 좋다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거기는 이제 숙박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애들 데리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돈들도 내야 되고... 딱 귀농을 해보면요. 무조건 안 쓰는 게 남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를 좀 자제할 것, 어디 멀리 가는 게 차비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니까 뭐하면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여성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혼자 살거나 독신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자들은 뭐...한 다섯 명 모이더라도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 좋잖아요. 그니까 저는 인원보다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여성귀농·귀촌자의 이해와 요구가 세대별로 다르고 일자리 연계나 창출을 위해 여성별도의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사례5>는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이나 민간단체에서 귀농·귀촌자라는 큰 범주 안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농촌사회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과 가구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다양하기에 이들의 이해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조직이 기존의 여성농업인센터 등의 활용 등이 있을 수 있기에 다양한 방법과 인프라로 여성귀농·귀촌자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을 사례자는 본인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례20>의 경우는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귀농·귀촌자의 입장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할 수 없기에 소모임을 결성하면 귀농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찾아가는 귀농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사례5>의 경우는 창업교육과 가공센터 교육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본인의 업무 경험에 따라 여성귀농·귀촌인의 일자리로 종종 언급되는 농산물 가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장성, 자본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과 창업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여성일자리 창출로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사례5〉 가공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제 근데 완주군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요.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교육은 대체로 있는데 집중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시제품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팔아볼 수 있는 직매장도 있고 이렇게 갖추어진 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두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조금 조금씩 팔아,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름아름 팔고 있지만 이게 정말.. 요즘 식파라치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 저희도 여기서 지금 40명, 처음 교육시작해서 20명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여기서 1명만 저희는 성공을 해도, 가공창업을 해서 1명만 나가도 저희는 성공했다라고 보는거에요. 왜냐면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음.. 이게 설비라는 거가 이제 여기서 어머님 해보시고 식품도 만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소규모로 한번 해보게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가, 식품가공이라는 이 자체가 소규모로 시작을, 내가 12, 15평, 20평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가령 뭐 군에서 지원을 받는 거 해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가 1억이에요. 1억, 반절 군에서 지원을 받고 5천 인거예요. 5천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시골에서는 정말 큰 돈이에요. 군에서 보면 이게 정말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 마을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비를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은 제대로 살아남을 데가 정말 드물거에요. 그 정도로 식품 가공업이라는 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나라 정책자체도 "소규모는 하지 말라."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식품가공은 돈 있는 대기업만 하라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후의 문제는 저희도 의문이에요. 과연 이게 잘될까,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고 이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음.. .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될까.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그렇게 때문에 여성가공창업이라는 그 자체가 쉽게 접근해야.. 쉽게 접근 할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여성귀농·귀촌자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의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귀농·귀촌자들의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농촌정주환경 개선이 바로 귀농정책이라는 것, 여성들을 위한 지원조직에 대한 별도의 구성,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 등을 바라고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의 시기나 현재 본인들이 하는 일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단순한 귀농·귀촌인의 유치전략으로서의 귀농·귀촌이 아닌 농촌에 살아갈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 작은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사례 조사 요약

❑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경험

우선 귀농·귀촌여성의 생활실태는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경험으로 귀농·귀촌의 동기에 따른 정착과정의 차이,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귀농여성을 위한 상담과 정보가 적다는 것, 정착초기 도시와 다른 정주환경에 따른 불편함과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요구로 분류되었다.

귀농·귀촌의 동기에 있어서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자신의 자연친화적인 삶의 욕구와 함께 남편의 귀농요구, 자녀교육에 대한 도시와 다른 환경을 부여하고 싶은 욕구 등의 다양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내려왔다. 이것은 이제 귀농·귀촌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 사례자들이 지역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자연친화적인 삶의 욕구로 내려온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사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례들과는 달리 정착하는데 상대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적었다. 그러나 농업을 통한 경제적 해결이 어렵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지니고 있었다. 한편 남편의 귀농요구로 내려온 사례들은 정착초기에 도시생활에 대한 미련, 농촌사회의 사회적 관계 부재 등으로 힘든 생활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도시의 경쟁적인 삶보다 다른 환경을 부여해 주고 싶었던 사례들은 농촌의 학교생활에는 만족하여 초기 정착에는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귀농·귀촌 동기를 가지고 사전준비를 하고자 한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현재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귀농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단순한 귀농·귀촌지원정책을 소개하거나 영농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귀농·귀촌의 의미와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귀농·귀촌지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한다. 더불어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정보가 가구단위로 진행되기에 농촌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적당한 상담과 정보가 제한적이었음을 사례자들은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가구들이 이주준비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은 주거와 영농활동을 준비할 경우 농지확보였다. 특히 귀농과 귀촌을 구분할 경우 귀농보다는 귀촌을 준비하는 사례자일수록 주택이나 토지 등 정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도시와 다른 정주환경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초기 이주에서 주거를 임대한 사례들은 도시와 다른 주거형태와 청결 문제, 벌레 등으로 힘들었고 대부분 사례들은 냉난방과 의료와 교통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사례들의 경우에 농촌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형이나 향후 자녀가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사례들은 농촌학교의 지원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귀농·귀촌 여성들이 농촌의 정착과정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지만 이주 후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해 처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부분 초기 정착에 필요한 땅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본인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되는데, 귀농·귀촌 초기에는 농업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 소득을 바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정착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자들은 부부 중 1인이 농업과는 별개의 일을 가져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했던 일을 연장하거나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격증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구하였다. 특히 귀농·귀촌여성들은 농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 귀농·귀촌여성의 교육참여와 활동경험

귀농·귀촌 교육과 연관하여 연구 사례자들은 귀농·귀촌교육의 중요성은 인식되지만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미비, 강사 활용의 문제, 소농위주의 교육인 아닌 대농을 위한 교육, 귀농·귀촌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친환경 농업 욕구에 맞지 않은 교육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성들만을 위한 귀농학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귀농학교도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귀농교육프로그램에서 교수와 같은 전문가 그룹보다는 마을 어른들이 농촌생활에서 우러나는 실체적인 농촌생활을 이야기 해 줄 수 있기에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연구 사례자들은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촌의 인력난으로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즉 이들은 농업이라는 일 이외에도 체험마을의 간사, 지원센터의 간사, 단체의 총무, 협동조합의 결성 등과 같은 활동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면서 농촌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참여와 활동은 여성귀농·귀촌인이 초기 농촌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제가 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두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후 경제적 활동으로 연결되어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따라서 이후 증가하는 귀농귀촌여성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모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사례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지역의 귀농·귀촌여성들과의 자조모임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인 모임에 참가하는 수준이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과소화되어가는 현상에서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지역민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세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교류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향후 여성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성귀농·귀촌인의 모임과 지역민과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귀농 · 귀촌여성의 정책수혜 경험과 요구분석

귀농·귀촌정책과 연관하여 광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자금이나 주택수리비등 정착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체험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들 가운데는 정착자금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융자'의 형태 외에 '보조'의 형태로 영농창업자금, 농지구입, 농자재 구입, 빈집 수리 및 이사비, 자녀학자금, 문화예술 창작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육아 지원, 자녀 교육비 보조, 귀농인 성공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이 지역 홍보와 지원금 융자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사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이 영역에 속했고(주택수리비, 이사비, 창업자금 융자) 한정된 가구와 보조금 사업 신청 시기 등과 맞물려야 하기에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단위의 지원정책에 머물러 있기에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귀농·귀촌자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의 지원 등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여성귀농·귀촌자들의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농촌정주환경 개선이 바로 귀농정책이라는 것, 여성들을 위한 지원조직에 대한 별도의 구성,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 등을 바라고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귀농의 시기나 현재 본인들이 하는 일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단순한 귀농·귀촌인의 유치전략으로서의 귀농·귀촌이 아닌 농촌에 살아갈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 즉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살이를 지원해 주는 작은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2. 사례조사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귀농·귀촌여성들의 정착경험, 교육참여와 지역사회 활동경험, 그리고 정책수혜 경험과 요구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귀농귀촌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기존 연구[10]와 본 연구의 단계별 귀농귀촌인의 어려움과 요구도 분석 비교

구분	기존 관련 연구 분석	본 연구 사례 결과	비고
귀농 탐색 단계	· 귀농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 가족의 반대 · 귀농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부족 · 귀농희망자의 동기, 여건 등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 귀농지 선정	· 본인들의 반대(여성) ·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미비 · 귀농지 선정 (여성의 경우 남편고향 혹은 무연고)	귀농귀촌 시기, 사례자의 연령, 정부정책의 변화 등 귀농귀촌의 단계별 어려움은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과 성별 차이를 분리, 분석함
귀농 준비 단계	· 영농관련 상담 및 안내 미흡 · 귀농인의 영농계획에 대한 컨설팅 부족 · 영농실습 기회 미흡 ·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 미흡 · 농지구입 정보 제공 미흡 · 정책자금 지원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	· 적합한 귀농교육과정 부족 · 주거지 및 농지구입정보 제공 미흡 · 영농실습 기회제공 미비 · 여성들을 위한 귀농교육과 조직 부재	
이주 후 정착 단계	·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생계유지 · 정착단계에서의 멘토링 등 조력부족 · 영농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미흡 · 농사시설 및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 · 농사 및 농업경영 기술 습득의 어려움 ·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 · 의료, 복지 등 생활 환경 문제 · 자녀 교육 · 농지 확보 ·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 · 소득원 확보 문제	· 초기정착과정에서 영농으로 인한 소득 창출부족 ·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 확보 문제 · 농사 및 농업경영 기술 습득의 어려움 · 문화적 생활과 외로움의 문제 · 의료, 복지, 교통 등 생활 문제 · 자녀성장에 따른 교육 문제 ·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문제	

10) ① 차광주(2010), 현장에서 본 귀농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② 송용섭 외(2010), 귀농귀촌 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
③ 장동헌(2009),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의 비교분석, 지역사회연구
④ 조창환(2009), 전남귀농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⑤ 강대구(2006), 최근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⑥ 서만용 외(2005), 귀농자의 농촌정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관광연구
⑦ 김성수 외(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⑧ 박성정 외(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귀농·귀촌의 단계별 분석에서 초기 탐색의 단계에서 귀농·귀촌자가 겪는 문제는 정보와 교육의 다양화, 그리고 여성들은 귀농·귀촌이후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방안의 부족이다. 이것은 초기 탐색의 단계에서 귀농·귀촌인의 특성(특히 여성)에 맞는 정보를 얻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비단계에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부족했고 통합과 분리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준비단계에서는 주거지 및 농지구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착자금 융자지원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이주 정착단계에서는 도시민 유치라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의 한계로 유치 이후 정착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초기정착시기에 겪는 어려움은 영농으로 바로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기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단위로 귀농·귀촌한 사례들은 1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가구원들은 농업 외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이제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농촌사회의 인프라 구성이 확대되어야 하고 기존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의 인구증대와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농촌에 유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는 귀농·귀촌 가구의 구성원 중 여성들에 대한 고려와 지원방식도 고민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되어진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의 정착경험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이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단계별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체험하는 정책지원은 귀농준비와 실행단계에서의 교육과 정착자금 융자지원에 머물러 있다. 즉 이주 직후 겪었던 주거

와 토지 문제 그리고 귀농·귀촌자가 바로 영농활동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없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주거나 소득 등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계별 지원정책을 좀 더 세밀화 시킨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 농어촌이 과소화·고령화 되어 정주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유입되는 귀농·귀촌인구의 구성원에 대한 면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귀농·귀촌인구의 통계 인구에서 3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자들인 여성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의 탐색과 준비단계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고, 지역사회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문화적 욕구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귀농·귀촌정책에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인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세 번째,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여성귀농·귀촌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지원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귀농·귀촌을 할 때 본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귀농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귀농·귀촌한 사례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의 사례자들도 텃밭을 가꾸는 정도의 수준에서 본격적인 영농활동까지 다양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이 높지 않으므로 이주 정착 단계에서도 귀농·귀촌가구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자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요구하고 소득창출 활동이 바로 지역사회의 활동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자체 귀농·귀촌 관련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조사한 사례[11]에서도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영역 보다는 주민의 생활서비스 관련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농업 분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현실에서 귀농인의 유입에 따라 경제활동 영역에서 기존 주민과 이해 상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농어촌에서 취약한 영역이므로 지역에 이주해 온 도시민들이 이 분야에서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실제로 농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은 귀농·귀촌인의 농촌거주는 농촌의 교육, 문화, 교통 주택 등 정주여건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의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본 연구의 사례에도 귀농·귀촌인의 자료로 인한 농촌학교의 학생 충원, 귀농·귀촌인들의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프로그램 공급, 지역자원 조사, 도농교류, 교육 및 연구활동 등의 활동이 일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분야는 여성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분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기 경제적 어려움은 가구원들의 일자리 요구로 연결되고 있기에 농촌의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도를 파악하고 귀농·귀촌 여성들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원으로 양성하거나 채용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11) 박문호 외(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중 자치단체 귀농귀촌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분석함.

제 4 장

귀농 · 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화 방안

제 1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제 2 절 세부과제별 정책제언

제 4 장 귀농 · 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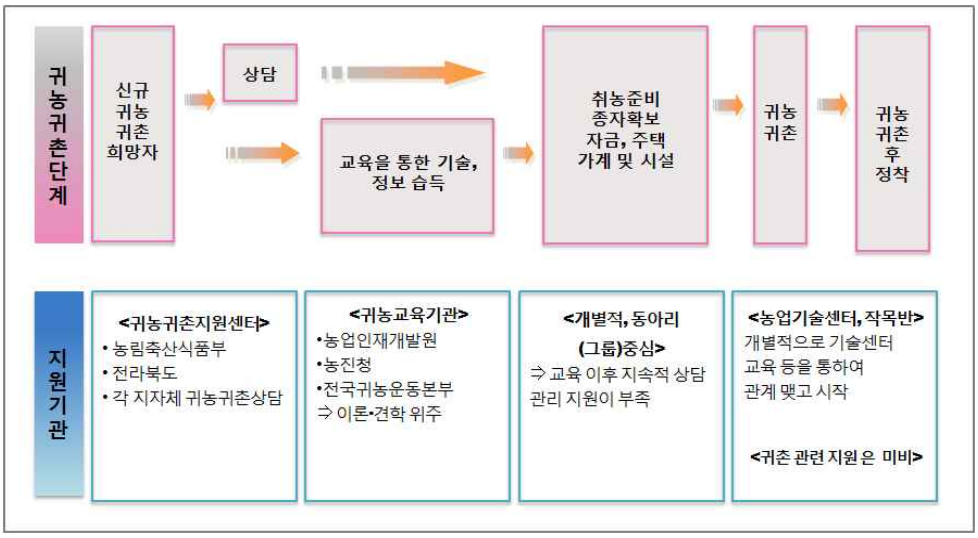
제 1 절 귀농 · 귀촌 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전북지역 귀농·귀촌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이들을 지역사회에 정착화 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귀농 · 귀촌 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과정 강화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귀농·귀촌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귀농·귀촌의 각 단계별로 처하는 애로사항은 초기 정보수집, 실행단계에서의 주거와 토지 문제, 정착초기의 경제적 어려움, 정착시기의 지역민과의 교류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주거나 소득 등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각 단계별로 확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현재 귀농 · 귀촌 단계별 지원방안 및 운영체계



현재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정책이 단계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귀농·귀촌의 탐색과 준비단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착 이후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도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불필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3만호 귀농귀촌 유치 확대로 농촌활력화를 목표로 하여 '도시민 유치'가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이 틀에서 단계적 유치 목표를 세우고 귀농·귀촌 홍보와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는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귀농·귀촌 가구에 있어서 여성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의 수단들을 다양화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식교육이 강화되어야한다. 이는 이주 준비와 실행, 정착유치와 정착의 단계에서도 교육내용이 세분화되고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계별 지원과정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귀농·귀촌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이다.

사실 귀농과 귀촌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농'이라는 개념은 생명, 휴식, 여가, 경제 모두를 포함하여 귀농귀촌의 상위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귀농·귀촌자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 귀농·귀촌자가 모두 농사만 지을 수 없으며, 농촌이라고 하여도 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비농업 분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현실에서 귀농·귀촌인은 초기정착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농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의 2, 3차 산업화와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분야가 취약한 영역이어서 지역에 이주해 온 도시민들 가운데에는 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이력 등을 소지하고 있어 취약한 농촌 환경에서 이

들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기존에 여성들이 담당한 분야들이 많기에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이 지역민과의 교류를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ity)귀농 · 귀촌 정책 수립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귀농·귀촌 여성의 인구[1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남성들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귀농·귀촌정책은 남성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 여성들이 귀농·귀촌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을 농촌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기도 하다.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의 과정에서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데 중요 요소이며 특히 여성들의 관계지향적이고 배려적인 특성은 지역민과의 적응과 조화에 순기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속성은 농촌사회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단계별 지원 강화 과정에 성인지적인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구주 중심의 귀농·귀촌 통계 생산은 지양하고 각 정책과 사업에서의 대상과 수혜로서의 '여성'을 반영하는 성별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농·귀촌 DB를 통하여 자체적인 성별통계를 생산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귀농·귀촌 관련 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협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관한 정보를 보강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맞춤형 귀

12) 전국 귀농·귀촌통계조사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보았을 귀농가구주중 여성은 전국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북은 33.2%로 나타났으며 귀촌가구주중 여성은 전국이 29.1%로 나타났고 전북은 31.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귀농·귀촌가구중 가구당 내려오는 인구수가 17,745명으로 가구당 2.2.명이 내려와 남편을 따라 귀농·귀촌하는 여성들도 증가추세에 있다.

농교육의 확대에도 여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농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지원도 고려되고 귀농귀촌여성 인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정책 수립도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단계별 세부지원 과정은 바로 지자체 단위의 성인지적인 귀농·귀촌 정책 수립과 함께 중앙단위에서도 귀농·귀촌정책과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귀농·귀촌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포함하도록 한다.

〈표 4-1〉 단계별 지원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전략 수립

구분	현재 추진전략	성인지적 전략
귀농 탐색 및 준비 단계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 지원서비스 구축 • 귀농귀촌 DB 구축을 통한 귀농귀촌통계 생산마련 • 각 지역별 맞춤형 교육지원	•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 지원서비스에서 여성에 대한 정보과 상담 제공 • 귀농귀촌통계 생산에서 성별통계 생산 • 지역별 여성귀농귀촌 분리 교육 지원
이주 후 정착단계	• 농촌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수립 • 도시민 유차사업지원확대 • 지역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전개	• 농촌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여성에 필요한 일자리 지원 연계 • 도시민 유차사업이나 지역민과의 교류지원 사업에서 여성 중심 사업 공모 확대

종합적으로 귀농·귀촌여성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과정 강화와 성인지적인 귀농·귀촌 정책 수립이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주요 정책분야는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 귀농·귀촌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제안하면서 관련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귀농귀촌여성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분 야	세부과제	
1. 귀농 · 귀촌여성 정착 지원 기반조성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여성귀농학교 개설
	1-2	전북 귀농 · 귀촌 DB 구축에서의 성별통계 생산
	1-3	귀농 · 귀촌여성의 재능기부단 운영
2. 귀농 · 귀촌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연계	2-1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구인·구직정보수집 및 연계
	2-2	새일센터의 농촌형 시범사업 운영
	2-3	귀농귀촌여성의 교육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2-4	다문화마을 학당의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

제 2 절 세부과제별 정책제언

1. 귀농 · 귀촌 여성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기반 조성

1-1.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도권 여성귀농 · 귀촌학교 개설

❑ 현황 및 진단

- 귀농·귀촌여성의 증가 추세에서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을 특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4-3〉 귀농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단위 : 가구, %)

구분	성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11,220	7,775	3,445	1,292	980	312	2,766	1,891	875	4,298	2,837	1,461	2,195	1,641	554	669	426	243
	100.0	69.3	30.7	11.5	8.7	2.8	24.7	16.9	7.8	38.3	25.3	13.0	19.6	14.6	4.9	6.0	3.8	2.2
전북	1,238	827	411	177	127	50	333	226	107	442	280	162	203	144	59	83	50	33
	100.0	66.8	33.2	14.3	10.3	4.0	26.9	18.3	8.6	35.7	22.6	13.1	16.4	11.6	4.8	6.7	4.0	2.7

〈표 4-4〉 귀촌가구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현황(2012) (단위 : 가구, %)

구분	총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15,788	11,192	4,596	3,369	2,313	1,056	3,302	2,330	972	4,001	2,815	1,186	3,007	2,259	748	2,109	1,475	634
	100.0	70.9	29.1	21.3	14.7	6.7	20.9	14.8	6.2	25.3	17.8	7.5	19.0	14.3	4.7	13.4	9.3	4.0
전북	990	678	312	211	139	72	233	155	78	268	186	82	170	128	42	108	70	38
	100.0	68.5	31.5	21.3	14.0	7.3	23.5	15.7	7.9	27.1	18.8	8.3	17.2	12.9	4.2	10.9	7.1	3.8

-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귀농·귀촌교육은 수도권 귀농학교를 중심으로 영농기법과 작물위주의 이론교육, 그리고 시·군별 특화품목 현장 교육이 2박3일의 단기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교육은 민간단체인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전국여성농민회연합회에서 특화되어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차원에서 증가하는 귀농·귀촌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학교를 개설·운영하여 귀농·귀촌여성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함.

❑ 추진방안

- 전라북도의 수도권 귀농학교에 여성귀농학교를 동시에 개설함.
- 현재 2박3일의 단기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귀농학교 교육의 내용을 이론과 현장 탐방교육으로 분리함.
-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각 시·군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개설
- 지역별 여성귀농·귀촌인의 사례발표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설
- 각 시·군단위 자체 귀농·귀촌학교 교육와 수도권 귀농귀촌 프로그램 연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1-2. 전북 귀농 · 귀촌 DB 구축에서의 성별통계 생산

❑ 현황 및 진단

- 현재 전국 단위의 귀농·귀촌인 통계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귀농인 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작성한 귀촌인 통계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통계가 있음.
- 성별통계는 귀농·귀촌 가구주에 대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별 분리만 통계되어 여성귀농·귀촌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전무함.
- 여성귀농·귀촌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농업인력으로서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이력을 파악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따라서 가구단위의 통계로 진행되는 통계를 성별 분리의 통계로 재작성하는 방법이 요구됨.
-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군단위의 행정을 통해 수집되는 귀농·귀촌 DB 구축에서 가구단위의 이력카드를 개인 단위의 이력카드로 분리하여 남녀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추진방안

- 2013년 전라북도 귀농·귀촌 DB 구축 작업을 토대로 성별분리통계 작성안 마련
- 귀농·귀촌인 이력카드조사표를 가구단위보다는 개인의 이력카드로 작성

〈표 4-5〉 현재의 귀농 · 귀촌인 이력카드 조사표

<table>
<tr><td rowspan="6">사진</td><td colspan="2">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년 월 일(세)</td></tr>
<tr><td rowspan="3">주 소</td><td>본 적</td><td colspan="4"></td></tr>
<tr><td>주소(전)</td><td colspan="4"></td></tr>
<tr><td>주소(현)</td><td colspan="4">(자가 / 임대)</td></tr>
<tr><td colspan="2">연락처(전화)</td><td></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최종학력</td><td></td><td>전공분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가족사항</td><td colspan="4">부모: 명, 부(처) /명, 자녀 명</td></tr>
<tr><td>귀농귀촌
동기</td><td colspan="2">영농(0)</td><td>전원생활( )</td><td>자녀교육( )</td><td colspan="2">노후생활( )</td></tr>
<tr><td colspan="7">이하 생략</td></tr>
</table>

〈표 4-6〉 개인의 귀농 · 귀촌인 이력카드 조사표

<table>
<tr><td rowspan="7">사진</td><td colspan="2">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년 월 일(세)</td></tr>
<tr><td rowspan="3">주 소</td><td>본 적</td><td colspan="4"></td></tr>
<tr><td>주소(전)</td><td colspan="4"></td></tr>
<tr><td>주소(현)</td><td colspan="4">(자가 / 임대)</td></tr>
<tr><td colspan="2">연락처(전화)</td><td></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최종학력</td><td rowspan="2"></td><td>전공분야</td><td colspan="2"></td></tr>
<tr><td>전 직업 및
활동 분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혼인상태</td><td colspan="4">기혼 ( ) 미혼 ( )</td></tr>
<tr><td colspan="2">현재 거주 가족사항</td><td colspan="4">개인 기입 형태로</td></tr>
<tr><td>귀농귀촌
동기</td><td colspan="2">영농(0)</td><td>전원생활( )</td><td>자녀교육( )</td><td colspan="2">노후생활( )</td></tr>
<tr><td colspan="7">이하 생략</td></tr>
</table>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1-3. 귀농 · 귀촌여성의 재능기부단 결성 및 지원

❑ 현황 및 진단

-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의 다양한 재능을 농어촌에 기부함으로써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스마일 재능 뱅크(www.smilebank.kr)를 2011년 부터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농어촌 농어촌재능기부활동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마을에 부족한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여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음.
-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이란 경영, 마케팅, 지역개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전문 인력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함.
- 2012년에 재능기부분야와 재능을 요청한 마을 539개를 보면 지역개발과 의료복지 교육, 농림어업의 순이었음.
- 한편 도시민이 귀농·귀촌한 후 원하는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을 보면 전국 7대 광역도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성주인, 2012)에도 나타나는데 이주 준비 도시민은 경제활동 보다는 마을사업과 지역사회 봉사활동(33.8%)을 원하고 있었음.

〈표 4-7〉 도시민이 희망하는 농어촌 이주 후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구분		이주의향에 따른 응답자 구분	
		이주준비 도시민	도시민 일반
본격적인 영농활동		11.7	13.9
자영업/개인사업		7.8	13.1
향토자원가공업/농촌관광		6.5	5.6
경제활동안함	마을사업/지역사회봉사활동	33.8	17.4
	취미/여가생활	28.6	35.5
	휴식/요양	6.5	10.1
	친목회/동호회 활동	3.9	3.0
기타		1.3	1.9
합계		100.0	10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도시민 조사 결과

- 현재 강원도의 경우 귀농·귀촌자 중 지역개발 분야, 의료, 복지, 교육분야, 경영마케팅 분야 등 전문분야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마련함.
- 경북 상주시의 경우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의 교류증진에 기여함.
- 전북 고창의 경우 귀농 전 일정기술을 갖춘 귀농·귀촌인을 발굴하여 재능기부 기동처리반을 운영함.
- 따라서 여성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 기부단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지역민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함.

❑ 추진방안

- 각 시·군 귀농·귀촌 담당과(귀농귀촌지원센터 포함)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여성의 재능기부단을 운영함.
- 현재 완주군의 재능기부단이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마을공동체 대표 등의 운영단을 조성하여 재능기부단의 활동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같이 각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귀농·귀촌여성을 중심으로 재능기부단 운영위를 구성하여 운영함.
-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지향적이고 배려하는 속성과 연관되면서 귀농 전 직업과 활동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재능기부단 형성과 지원을 시·군단위에서 발굴하도록 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

2. 귀농 · 귀촌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

2-1.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연계

❑ 현황 및 진단

- 귀농·귀촌 가구들은 농업소득으로 가구소득이 충족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따라서 현재 귀농·귀촌의 가구들 중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방과 후 지도사, 행정보조인력 등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
- 농촌의 일자리 분석한 자료(송미령, 2012)에 따르면 농촌사회에서 의료,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증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복지정책의 확대 등이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더불어 농촌의 농업부문 등의 계절적인 필요 노동력의 수요가 존재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요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대한 파악을 연결하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됨.

❑ 추진방안

- 각 시·군에서 일종의 지역 일자리 SOS창구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지역 일자리 SOS창구에서는 농촌의 농업부문 등의 계절적인 필요노동력,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모집 등의 필요노동력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해당지역에 여성귀농·귀촌인 중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지역별 일자리 SOS 창구에 상담, 신청하여 지역 내 필요 노동력 수요와 연계하도록 함.
- 각 시·군 홈페이지와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에 필요인력을 일자리별로 구분하여 공지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필요인력난의 문제와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요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새일센터

2-2. 새일센터의 농촌형 시범사업 운영

❑ 현황 및 진단

- 귀농·귀촌 여성을 위한 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여성귀농·귀촌자의 문화 및 교육 욕구, 그리고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필요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전주,군산,정읍,남원,익산)를 농촌형 새일센터로 모델화하여 도와 시·군의 귀농·귀촌정책을 전달하고 여성귀농·귀촌자의 취·창업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모색

❑ 추진방안

-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려는 유형별 새일센터 지원사업을 지역화[13]하여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구축함.
- 농촌형 새일센터는 기존 새일센터의 기본사업영역에 농촌지역과 농촌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재구성함. 이 과정에서 농촌의 새로운 인적자원인 귀농·귀촌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새일센터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 주로 프로그램별 예산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 : 여성인턴제, 찾아가는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사후 관리 지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 ▸고용노동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상담원 인건비, 취업후 사후관리비)

13) 새일센터 지역 유형화 구분 기준에서 농촌형은 25-54세 여성 인구수가 15,000명 이하이고 25-54세 경력단절 여성수가 평균인구 이상(1,275명)을 차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있어서는 농업종사자 비중이 평균 15% 이상을 보이는 곳으로 구분함.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전라북도에서 새일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남원이 농촌형에 해당되고 없는 지역에서는 김제와 완주군이 농촌형 새일센터 지정가능 지역으로 분리됨.

〈표 4-8〉 새일지원센터 예산 지원[14]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예산총액 (센터당 지원 금액)	보조비율	
			국비	지방비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	12,096	80	20
	결혼이민여성인터	1,400	80	20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10,139	100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670	50	50
	사후관리 지원사업	2,519	50	50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150	50	50
고용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8,510	100	
	취업후 사후관리	490	100	

- 농촌형 새일센터 모형은 <표 4-9>처럼 교육대상과 교육훈련 분야와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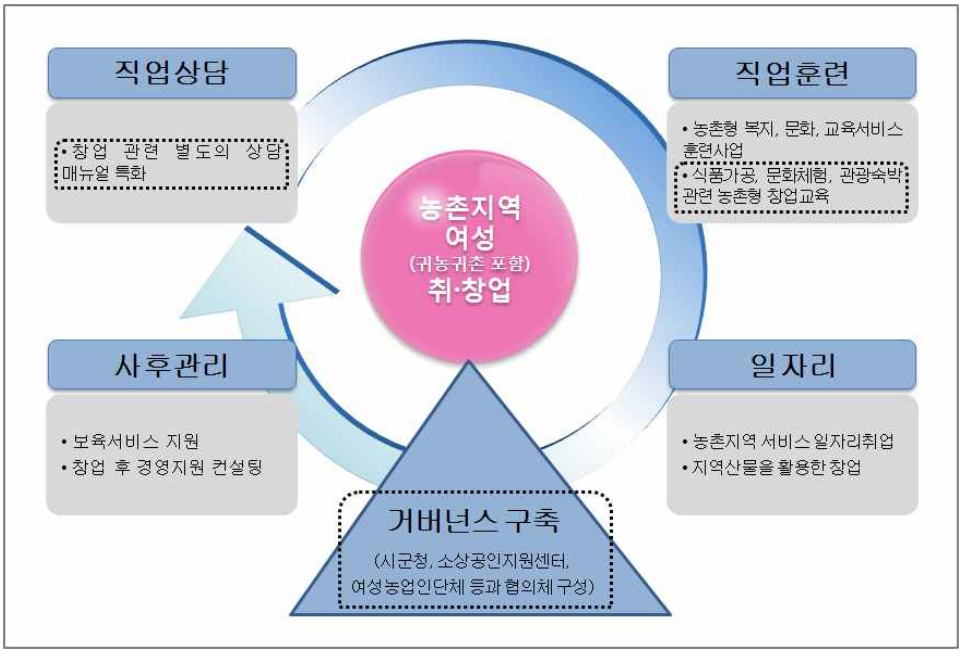
〈표 4-9〉 농촌형 새일센터 모형

항목	내용
대상	- 농촌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 취업과 지역산물을 활용한 창업희망 여성 (귀농귀촌여성)
교육훈련 분야 및 내용	- 농촌형 복지, 문화, 교육서비스 분야 훈련 - 식품가공, 문화체험, 관광 숙박 등 농촌형 창업교육 - 행정보조, 소규모 사무실 회계인력 교육 등
취업 · 창업지원	- 농촌지역 취업제공 및 취업연계
거버넌스	-시군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여성농업인 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여성회관 각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 협의체 구성

- 농촌형 새일센터 사업 모형에 대한 운영구도는 <그림 4-2>처럼 귀농귀촌여성을 포함한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상담,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의 영역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함.
-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농촌형으로 분리되는 남원새일센터를 농촌형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농촌지역 새일센터가 향후 귀농·귀촌여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14) 센터별 사업추진 내역에 따라 지원예산이 변경되고 위에서 제시한 예산 기준은 기본 예산 기준에 의거함

〈그림 4-2〉 농촌형 새일센터 사업모형 운영 흐름



자료: 여성가족부(2012), '새일센터 유형별 특성별 사업운영 모델개발'에서 농촌형 모델 재구성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여성청소년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새일지원센터

2-3. 귀농 · 귀촌여성의 교육 · 돌봄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 현황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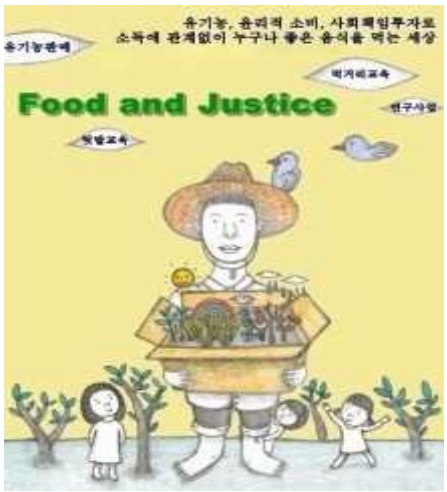
- 협동조합기본법(2012.12. 시행)에 의해 5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69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2013년 3월말).

- 협동조합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자가 근로자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안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협동조합방식이 소규모 창업에 용이해지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고용의 증가를 예상함. 특히 40대 후반에 여성들이 자영업에 대한 일정 부분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협동조합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특히 협동조합은 지역에 뿌리를 둔 조직으로 내성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개발하고 고용되는 선순환 구조의 성격을 가짐.
- 여성귀농·귀촌인이 도시에서의 전직과 활동을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교육·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이 좋은 모델로 추진될 수 있음.
- 최근의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5]분석에서 농촌지역의 경우 대상별로 욕구와 시장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중요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귀농·귀촌여성들의 인력특성을 고려하면서 교육·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중앙에서 개발한 사업을 지자체가 선택하는 등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중심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

〈사례 : 장수 하늘소 마을의 여성귀농귀촌인 교육협동조합〉

장수하늘소 마을의 여성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되어 음식정의 사업인 취약계층을 위한 꾸러미 사업인 Food justice 사업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체험 학교 운영 ▲먹거리 교육 과 도시농업 멘토링 등의 내용을 가진 교육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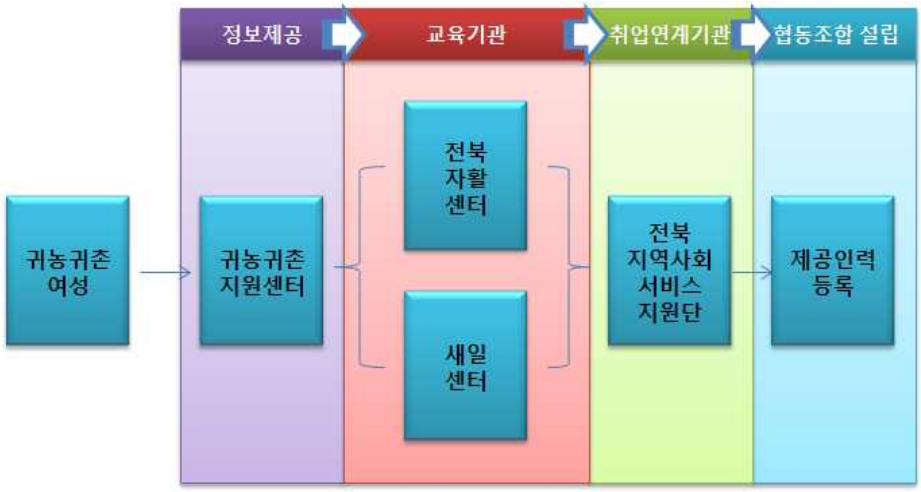


❑ 추진방안

- 첫 번째의 추진방안은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돌봄서비스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과정[16] 을 추진하고 각 시군의 여성회관과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대상선정은 각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파악한 귀농·귀촌 여성의 이력 중에서 교육관련 자격증이나 교육경력이 있는 대상자와 돌봄서비스 관련 자격과 이력을 가진 인원을 파악하여 협동조합을 형성하도록 독려함.
- 두 번째 추진방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으로 귀농·귀촌여성 들의 교육·돌봄서비스협동조합 결성지원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 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현재 광력 자활기관당자들의 협조 하에 귀농·귀촌 여성 인력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과정도 마련하여 새로운 지역인프라로 구성함.

16)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협동조합 창업 전문가, 운영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4-3〉 귀농 · 귀촌 여성을 활용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안(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사회복지과
- 협력기관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 새일지원센터,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광역자활센터

2-4. 다문화마을 학당의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

❑ 현황 및 진단

- 전라북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전북형 서비스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다문화 마을 학당을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다문화마을학당은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지원체계로 다문화 가족들의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다문화마을학당의 주요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자원 봉사자의 모집 규모는 3개시(전주, 군산, 익산), 15명 이상의 규모이고 기타 11개의 시·군은 12명 이상 규모로 계획, 진행되고 있음.
- 자원봉사자들의 자격요건은 한국어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전직교사, 교육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등을 갖춘 자로 1회당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가 지급되고 있음.
- 그러나 3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군단위에서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역별로 유입되어 있는 여성귀농·귀촌자의 이력을 파악하여 이들을 자원봉사자의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이것은 지 역형 새로운 일자리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귀농·귀촌 여성인의 교류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추진방안

- 각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 인력 수급을 조사함.
-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의 여성귀농·귀촌인의 이력조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발굴하여 연계함.
-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에서 한국어교육을 60시간 이수한 경력자의 요건을 부여받기 위하여 시·군의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육 강좌를 개설함.
- 다문화마을 학당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 거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므로 귀농귀촌여성에 관한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다문화교류과
- 협력기관 :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시군 귀농·귀촌담당과,
  여성회관 및 새일지원센터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종원 외(2012), 강원도 인구늘리기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김동원 외(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윤성(2012), 최근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농협경제연구소

김정섭외(2012), 귀농·귀촌정책 및 교육 체계화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_____(2012),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현(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국토연구원

김철규 외(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박문호 외(20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정 외(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주희(2009),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집 2호,

성주인 외(2012), 귀촌과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상락(2012), 경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오수호(2013), 귀농귀촌가구의 이주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은주 외(2012),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12), 새일센터 유형별 특성별 사업운영 모델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학열(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라북도(2013), 귀농·귀촌 활성화 종합대책

정다래 (2009), 비혼 귀농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미 외(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성주(2012), 충북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전략, 충북발전연구원

통계청(2013),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농림수산식품부, 2012,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 보도자료. 2012.10.17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http://www.jbreturn.com)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전발연 2013-PR-08

귀농 · 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발 행 인 | 김 경 섭

발 행 일 | 2013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92471-84-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jthink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 3가 1052-1)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93330
9 788966 120840
ISBN 978-89-6612-084-0